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기 간: 2025년 11월 29일(토) - 12월 6일(토)

출장지: 프랑스 파리

출장자: 전봉경 부연구위원, 양은모 부연구위원

I. 출장개요

1. 출 장 지: 프랑스 파리
2. 출장기간: 2025년 11월 29일(토) ~ 2025년 12월 6일(토) (6박 8일)
3.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부연구위원	전봉경
글로벌개발협력센터	부연구위원	양은모

4. 출장목적:

- (1) 2025년 제52차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회의 참석
- (2) 제49차 지역지표 작업반 회의 참석
- (3) 제10차 다층적 거버넌스 회의 참석
- (4) 제38차 도시정책 작업반 회의 참석
- (5) 제34차 비도시 작업반 회의 참석

5. 주요 목표:

- 회원국별 지역개발정책 관련 발제 및 토론을 참관하여 각국의 관련 정책동향 파악
- 인플레이션, 기후변화, 재난 관리, 지역의 회복력·매력도 제고,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 논의 등을 위해 회원국별 경험과 정책사례를 공유
- 한국대표단(국토교통부) 회의 발표 자문

6. 출장의 기대효과:

-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회의 참석을 통해 국제적 도시정책 이슈 및 전략 파악
- 지속적인 국제회의 참여로 국제협력 인적 네트워크 강화 및 관련 연구자료 확보
- RDPC 내 국토연구원의 위상 증진과 OECD 관련 연구 참여 및 협력방안 모색
- OECD 국제회의에서 도시정책 관련 한국대표단의 발의 내용을 지원함으로써 정책지원 전문기관으로서 국토연구원의 역할 재확인

7. 한국대표단 및 지원인력 구성

(1) 국토교통부: 8인

- 권유정 과장(국제협력통상담당관)
- 임현아 사무관(국제협력통상담당관)
- 한준수 주무관(국제협력통상담당관)
- 문성윤 자문관(국제협력통상담당관)
- 장이슬 서기관(지역정책과)
- 박예슬 사무관(성장거점정책과)
- 최희정 사무관(수도권정책과)
- 최아진 사무관(도시재생과)

(2) 국토연구원: 2인

- 양은모 부연구위원(글로벌개발협력센터)
- 전봉경 부연구위원(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6) 주OECD 대표부: 1인

- 김남균 과장

(7) OECD 사무국: 4인

- 이랑 과장
- 정순열 과장
- 강철운 과장
- 권호정 서기관

II. 출장일정

일정	출발지	도착지	업무수행내용	비고
2024년 11월30일(토)	인천	파리	(12:55) 인천 출발(KE 901) (18:55) 파리 도착	
2024년 12월1일(일) 13:00~17:00	파리 국토부 숙소 인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단 OECD 의제 사전점검 - 출장단 업무분장 - 인력별 지원할 회의 결정 - 국토부 발의내용 작성/검토 - OECD 대표부 및 사무국 인력 점검 - 회의장 위치, 이동 동선, 회의 일정 점검 	
12월1일(월) 09:00~18:00	파리 OECD본부 회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0차 다층적 거버넌스 작업반 회의 - 개회 세션 - RDPC 장관회의 결과 및 향후 계획 논의 - 긴축 재정 상황에서의 다층적 거버넌스 및 하위 국가 체계 개선 방안 - 공공 및 민간 이해관계자 역량 강화 및 지역 개발 자금 효율적 활용 방안 - 계획과 영향력 평가 - 다층적 거버넌스 및 글로벌 원조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9차 지역지표 작업반 회의 - 개회 세션 - 2026년 WPTI 사무국 지정 - 지역통계를 위한 데이터 혁신의 향후 방향 및 차기 WPTI 위임과 RDPC 업무계획·예산(PWB)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통계를 위한 데이터 혁신 관련 최근 동향 보고 · WPTI 위임 갱신 및 RDPC 업무계획·예산(PWB) - 서비스 접근성 분석의 진전 사항 - 모바일 데이터를 활용한 농촌 일상 시스템 검증 및 기능적 지역 관련 최신 동향 - 지역 데이터 및 정의, 플래그십(핵심 프로젝트) 관련 업데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데이터, 도구 및 정의의 최근 업데이트 · Regions and Cities at a Glance 2026 - OECD 지역 간 구매력평가(PPP) 측정을 향하여: 프로젝트 진행 현황 및 예비 결과 - OECD 지역 성장의 결정 요인: 교역 가능 부문의 역할 - 지방재정 및 다층적 거버넌스(MLG) 지표 	
12월2일(화) 09:30~18:00	파리 OECD본부 회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8차 도시정책 작업반 회의 - 개회 세션 - 차기 의장단 임명 및 예산 - 거점(중개) 도시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 도시 내 기회 접근성 확대 방안 - 혁신의 끊임없는 발전 사례 - 국경(접경) 도시와 지역의 협력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4차 비도시 작업반 회의 - 개회 세션 - 2026년 사무국 지정 - RDPC 장관급 회의 성과, 향후 위임 및 업무계획·예산(PWB) - 중남미에서 개최된 제14차 OECD 농촌개발회의의 성과 - 국가 농촌 전략과 농촌정책검토의 시사점 - 경제적 축: 혁신 2.0, 산업정책, 농촌-도시 연계 - 사회적 축: 인구구조적 도전과 농촌 개발 및 고립 문제 - 환경적 축: 산림 및 농촌 개발 이니셔티브 개요 - 핵심 광물과 농촌 전환 	
12월4일(수) 09:30~18:00	파리 OECD본부 회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2차 RDPC회의(1일차) - 개회 세션 - 2026년 사무국 지정 - 미래를 향한 방향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PC 장관급 회의 성과 점검 • RDPC 위임 갱신 및 차기 업무계획·예산 - 무역 불확실성과 분절화된 글로벌 시장의 최전선에 있는 지역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대 전환과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매력도 정책의 재고 • 모든 유형의 지역에서의 성장 • 지역 전반에서 작동하는 산업정책: 장소기반 접근과 전환 • 지역발전을 위한 중간도시의 잠재력 발굴 	
12월5일(목) 09:30~16:00	파리 OECD본부 회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52차 RDPC회의(2일차) - 개회 세션 - CFE 데이터 접근성 논의 - 지역 개발을 위한 전략적 규모 확대 방안 - 글로벌 구조 전환 논의 - 지역 기반 정책 및 지역 혁신을 위한 AI 활용 방안 - 지역 개발을 위한 지자체 간 협력 방안 	
12월6일(금) 09:15~15:00	파리 OECD본부 회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연구원-OECD 업무협의회 	
	파리	(21:00) 파리 출발(KE 902)	
12월7일(토)	인천	(17:00) 인천 도착	

주: 출장일정 검증자료(항공권)는 부록 참조

III. 수행사항

출장단 OECD 의제 사전점검회의

1. 회의명

- 출장단 OECD 의제 사전점검회의

2. 일시 및 장소

- 2025년 11월 30일 (일), 13:00 ~ 17:00
- 출장단 숙소

3. 참석자

- 국토연구원 출장단

4. 주요 논의내용

- 출장단 업무분장: 발언 및 토론, 한국 대표단석 배석
 - 최희정·박예슬 사무관: 제49차 지역지표 작업반 회의 (12월1일 월요일)
 - 장이슬 서기관·최아진 사무관: 제10차 다층적 거버넌스 작업반 회의 (12월1일 월요일)
 - 최아진·최희정 사무관: 제38차 도시 작업반 회의 (12월2일 화요일)
 - 박예슬 사무관·장이슬 서기관: 제34차 비도시작업반 회의 (12월2일 화요일)
 - 권유정 과장 외 국제협력출장단 전원: 제52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 (12월 3-4일 수-목요일)
- 국토연구원 자문 및 지원 업무
 - 제49차 지역지표 작업반 회의 (12월1일 월요일)
 - 제10차 다층적 거버넌스 작업반 회의 (12월1일 월요일)

- 제38차 도시 작업반 회의 (12월2일 화요일)
- 제34차 비도시작업반 회의 (12월2일 화요일)
- 제52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 (12월 3-4일 수~목요일)
- 주오이씨디 대표부 및 OECD 사무국 참석 인원 및 지원 내용 협의
- 회의 일정별 발언 및 토론 전략 논의
 - 국토연구원: 지역개발정책위원회 3.a와 3.b 발언문 작성 지원
- 회의장 위치 및 시간대별 이동동선 점검
- 회의 내용 기록을 위한 업무 분장 협의
- OECD 한국인 직원들과의 네트워킹 및 협력 방안 논의
 - 이해진 박사(Economist, Centre for Entrepreneurship, SMEs, Regions and Cities)
 - 윤지수 정책분석관(Junior Policy Analyst, Centre for Entrepreneurship, SMEs, Regions and Cities)

제10차 다층적 거버넌스 작업반 회의

1. 회의명

- 제10차 다층적 거버넌스 작업반 회의(10th meeting of the expert Group on Multi-level Governance)

2. 일시 및 장소

- 2025년 12월 1일(월), 09:45 ~ 18:00
- OECD Headquarters CC06

3. 참석자

- OECD 회원국
-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장이슬 서기관
-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임현아 사무관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최아진 사무관
-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한준수 주무관
-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전봉경 부연구위원

4. 주요 주제

- RDPC 장관회의 결과 및 향후 계획 논의
- 긴축 재정 상황에서의 다층적 거버넌스 및 하위 국가 체계 개선 방안
- 공공 및 민간 이해관계자 역량 강화 및 지역 개발 자금 효율적 활용 방안
- 계획과 영향력 평가 : 지역 정책 시행 및 평가 강화 방안
- 다층적 거버넌스 및 글로벌 원조 활동

5. 주요 논의내용

(1) RDPC 장관회의 성과 및 주요 과제 논의

- 2025년 5월 폴란드에서 개최된 OECD 장관회의에는 44개국 약 2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회복력 있는 지역 조성을 위한 지역정책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됨
 - 다층적 거버넌스는 효율적 투자와 지역 경쟁력 제고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되며, 지방 정부가 공공지출의 약 30%, 공공투자의 약 60%를 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거버넌스 기능 조정이 미흡할 경우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음
 - 중앙정부는 지방에 대한 인프라 투자뿐 아니라 제도, 행정, 기술 역량 등에 대한 투자를 병행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전반적인 역량 강화를 유도할 필요성이 강조됨
 - 다층적 거버넌스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가 경쟁력 제고와 함께 인구 변화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한 긴밀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함
- OECD는 다층적 거버넌스 개혁 유형을 제도적·영토적·재정적·행정 역량 개혁의 4개 범주로 구분함
 - 제도적 개혁 : 정부 간 협력 체계 강화, 책임 소재의 명확화, 수직적 정책 조정 기능의 강화
 - 영토적 개혁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추진, 지자체 간 협력 체계 확대
 - 재정적 개혁 : 보조금 시스템 개편, 지방세입 구조의 다양화, 외부 자금 조달 확대
 - 행정 역량 개혁 : 인적자원 역량 강화, 행정절차 간소화, 디지털 정부 추진,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구축
- 지역 정책의 실행 및 평가와 관련한 주요 논의 과제는 다음과 같음
 - 거버넌스 및 권한 조정 문제 : 정치적 환경의 영향으로 수평적 조직 간 권한 조정이 어렵고, 권한과 책임의 명확성이 부족하여 정책 실행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
 - 역량 및 재원 부족 문제 : 노동자의 기술 역량 부족과 지방정부에 대한 재정 지원의 한계가 주요 문제로 지적됨
 - 외부 환경 변화 대응 및 유연성 부족 : 코로나19 팬데믹, 글로벌 외환위기, 인플레이

선 등 예기치 못한 외부 위기 발생 시 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행정적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됨

-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의 복잡성 : 프랑스는 4-5단계의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반면, 에스토니아는 2단계 구조를 유지하는 등 국가별로 정책 조정 리더십과 책임 소재가 불명확한 사례가 존재함. 또한, 해외 영토, 농촌 지역, 고령화 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제49차 지역지표(Territorial Indicators)작업반 회의 (WPTI)

1. 회의명

- 제49차 지역지표작업반(Working Party on Territorial Indicators) 회의

2. 일시 및 장소

- 2024년 12월 1일(월), 9:30 ~ 18:15
- OECD Room CC13

3. 참석자

- OECD 회원국
- 국토교통부 국제협력담당관 임현아 사무관
- 국토교통부 국제협력담당관 한준수 주무관
-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 박예슬 사무관
-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최희정 사무관
-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양은모 부연구위원
- OECD사무국 이랑 과장

4. 주요 주제

- 2026년 WPTI 사무국 지정
- 지역통계를 위한 데이터 혁신의 향후 방향 및 차기 WPTI 위임과 RDPC 업무계획·예산(PWB)
 - 지역통계를 위한 데이터 혁신 관련 최근 동향 보고
 - WPTI 위임 갱신 및 RDPC 업무계획·예산(PWB)
- 서비스 접근성 분석의 진전 사항

- 모바일 데이터를 활용한 농촌 일상 시스템 검증 및 기능적 지역 관련 최신 동향
- 지역 데이터 및 정의, 핵심 프로젝트 관련 업데이트
 - 지역 데이터, 도구 및 정의의 최근 업데이트
 - Regions and Cities at a Glance 2026
- OECD 지역 간 구매력평가(PPP) 측정을 향하여: 프로젝트 진행 현황 및 예비 결과
- OECD 지역 성장의 결정 요인: 교역 가능 부문의 역할
- 지방재정 및 다층적 거버넌스(MLG) 지표

5. 주요 논의내용

(1) [Item 1] 개회 (09:30-09:45)

- WPTI 의장 발언
 - 의장(Ms. Eva Hagsten, 스웨덴)은 지역지표 작업반(the 49th session of the Working Party on Territorial Indicators, WPTI)의 제49차 회의를 개최함
 - 회의에 참석한 대표단을 환영하고 당일 회의 안건을 승인하였으며, 특별한 이의가 없어 이전 회의 요약 회의록을 채택함
 - 또한 CFE 부국장의 특별 참석을 소개하고 회의 목표를 간략히 언급함
- OECD 사무국(CFE 국장) 발언
 - CFE 국장(Mr. Nadim Ahmad)은 지난 6월 OECD 장관급 회의 결과를 환기하며, 데이터의 중요성이 가장 강조되었음을 언급함. 장관들은 지역개발정책 수립에 고도화된 미시 지역데이터와 증거(evidence)기반 정책 수립의 지속적 개선을 촉구하였으며, 이는 WPTI의 향후 논의에 강력한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평가함
 - OECD 사무국은 ▲공간적 데이터의 핵심적 역할, ▲고빈도 데이터(high-frequency data) 활용 증가, ▲AI 기술의 부상을 향후 4년간 WPTI가 직면할 3대 과제로 제시하며, 이러한 최신 흐름을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함
 - 아울러 WPTI가 다른 위원회들과 범분야적 협력을 강화해 OECD 공동목표에 기여할 것을 독려하며 모두발언을 마침

(2) [Item 2] 2026년 WPTI 사무국 지정 (09:30-09:45)

- OECD 사무국 발언

- 2026년 WPTI Bureau(의장단) 구성과 관련한 후보 등록 및 선거 절차를 소개함
- 올해 임기가 만료되어 Bureau 구성원인 독일 및 한국 대표가 물러나게 되었으며, 각국이 새로운 후보를 ONE 커뮤니티를 통해 사전 제안했다는 점을 공유함. 독일과 한국은 각각 본국에서 후임 후보를 추천하였고, 터키가 추가 입후보하여 총 3명의 신규 Bureau 후보가 있음을 공유함
- WPTI 의장 발언
 - 특별한 이견 없이 제안된 2026년 Bureau 명단을 대표단이 만장일치로 승인함
 - 이어 2025년 1년간 수고한 한국 대표(1년 임기)와 13년간 RDPC 산하 여러 작업반에 헌신한 독일 대표(R. Kalka)의 노고에 감사함
- OECD 사무국 발언
 - Bureau 지명 완료 후, 2026년 봄철 회의 계획을 언급함
 - 2026년 3월 18~19일에 WPTI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특히 3월 18일에는 환경정보작업반(WPEI)과의 공동 기술 워크숍이 예정되어 있음
 - 대표단에게 워크숍 주제 제안을 환영하며 일정을 Save the Date 문서를 통해 공유했음을 알리고, 2026년 WPTI 신규 의제(mandate)와 4개년 작업계획(PWB) 논의를 사전 준비해줄 것을 요청함

(3) [Item 3] 지역통계를 위한 데이터 혁신의 향후 방향 및 차기 WPTI 위임과 RDPC 업무계획·예산(PWB) (09:45-10:45)

- OECD 사무국 발표
 - WPTI의 차기 의제(Mandate) 갱신과 2025-29년 프로그램·예산(PWB) 수립을 위한 준비 경과를 보고함
 - 25년 봄 회의에서 회원국 대상 설문조사 및 분과 토론을 거쳐 수렴한 데이터 혁신 관련 4대 분야를 제시하고, 이를 요약한 문서를 회의 전에 공유함을 언급함
 - 4대 분야: ①통계와 지리정보의 통합, ②신규 경제·노동·사회 지표 개발, ③환경·기후·위험 평가 지표 개발, ④새로운 데이터 출처와 파트너십
 - 사무국은 회원국들이 행정자료와 혁신 기법을 결합하여 영토지표 생산 전 과정에 혁신을 도모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여러 국가의 모범사례를 소개함
 - 예를 들어 멕시코 등 일부 국가는 소지역 추계기법을 통해 지역 노동시장 지표를 개발 중이며, 캐나다는 토지피복 등 환경지표에 위성영상과 AI 기반 이미지분석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함

- 다만 다수 국가가 겪는 공통 과제로서 소지역 자료의 표본오차, 개인정보 문제, 데이터 생산 비용 등을 지적하며, WPTI가 이러한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학습하는 장으로서 더욱 중요함을 역설함
- 또한 혁신적 지표 생산에 그치지 않고 정책입안자와 대중에 통계 전달을 개선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파트너십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함
- PRT(포르투갈) 발표
 - 통합 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례를 발표함
 -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이 프로젝트는 인구, 토지, 행정 등 여러 부문의 행정자료를 단일 식별체계로 연계하여 세분화된 지역통계 생산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위해 통계청 내부 부서 간 협업 체계를 정비하고 외부 공공·민간기관과 데이터 제공 협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이고 일관된 자료 공유를 보장하고 있음. 이렇게 구축된 인구 DB를 활용해 매년 최신 인구통계를 산출하고, 다양한 주제별 자료(인구, 사회, 경제 지표 등)를 대시보드 등으로 서비스함으로써 데이터 공표의 시의성과 공공 정책 활용도를 높임
 - 이 인프라를 통해 설문조사 부담을 줄이고 행정자료로 대체함으로써 통계 생산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켰으며, 향후 교통수단별 이동시간 데이터 등 새로운 데이터 원도 추가 검토 중임
- OECD 사무국 발언
 - 차기 WPTI 의제(mandate) 초안과 RDPC 프로그램·예산 방향을 소개함
 - WPTI 의제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고 RDPC PWB도 4년 주기로 전환됨에 따라, 보다 장기적이고 유연한 전략이 필요함
 - 사무국은 신규 의제 초안을 11월 중 회원국에 회람하였으며, 이전 의제 대비 간결하고 명확한 구조로 개선하고자 함
 - 핵심 개정사항으로 ▲OECD 지역개발장관회의의 결과를 반영한 혁신적 데이터·지표 개발, ▲회원국 간 학습·공유·협력 강화, ▲지역정책 성과 모니터링 지표 등을 의제 문구에 포함시킴
 - 이어 PWB는 OECD 중장기 전략에 부합하도록 3대 축(포용·회복력, 환경전환, 디지털·인구변화)으로 구성되며, WPTI 작업도 이 틀 내에서 추진될 것이라고 언급함
 - 사무국은 2025년 한 해 기존 의제를 1년 연장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5개년 의제를 준비하는 과도기에 있음을 감안하여,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함
 - 다음으로 참가국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캐나다 대표 발언

- OECD 사무국이 최근 자국의 이동통신 데이터를 협의 없이 입수한 사례를 언급하며, 향후 이러한 데이터 획득 시 회원국 통계청과의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캐나다는 이동통신 데이터를 세 가지 경로(통신사, 위치기반 서비스업체, GPS 디바이스)로부터 확보한 경험을 공유하면서, 출처별로 품질과 비용 부담 차이가 크다고 설명함
- 또한, 국제기구가 상업 데이터 구매에 나설 경우 비용 상승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회원국과 데이터 소싱 전략을 사전에 조율하고 상호 학습하는 방안을 제안함
- 독일 대표 발언
 - 새 WPTI 의제 초안이 특정 지역유형이나 지표를 나열하기보다 포괄적으로 기술된 점을 환영하면서도, 사람들의 삶에 초점을 둔 내용을 명시할 것을 건의함
 - 독일 대표는 OECD 모토인 Better Policies for Better Lives를 인용하며, 지역 격차 해소를 궁극적으로 취약계층의 삶 개선으로 연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 따라서 의제에 삶의 질, 취약계층, 불평등 등의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며, 이는 세부적 지표 나열이 아닌 WPTI의 지향점으로서 기술할 가치가 있다고 부연함
- 미국 대표 발언
 - 새로운 안에 데이터 전달과 활용 관련 내용이 담긴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각국이 정책입안자를 데이터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자국에서도 지자체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택, 조세 등 다양한 정보를 연계하고 있으나, 정책 결정자에게 인사이트를 전달하는 데 지속적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WPTI 차원에서 통계 커뮤니케이션 및 정책 영향력 제고 방안을 계속 공유하면 유용할 것이라고 발언함
- 영국 대표 발언
 - 데이터 활용 간소화와 유연성 제고 방향에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방대한 신규 데이터원의 등장으로 각국의 통계 작성 방법에 차이가 생기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모든 국가가 동일한 방식으로 통계를 산출하지 못하는 복잡한 상황을 지적함
 - 영국 대표는 최근 빅데이터를 적극 도입했다가 자료 간 불일치 문제로 다시 전통적 조사로 일부 회귀한 경험을 소개하며, OECD가 회원국 간 모범사례와 어려움을 논의하는 장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함
 - 아울러 앞서 발표된 포르투갈의 통합 데이터 프로젝트에 관해, “발표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는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은 없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함
- EU 대표 발언
 - 의제 초안에서 도시 및 농촌 지역 유형 유지에 대한 언급을 환영한다고 밝힘

- 관광, 교통 등 다른 작업반에서 영역별 지표를 다루지만, 영토 유형 정의와 분류법은 WPTI의 고유한 역할이라고 강조하며, 초안에 “도시·농촌 지역” 관련 문구가 남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또한 의제가 유연해진 만큼, 향후 작업계획에서 이러한 typology 관련 연구가 계속 중요 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함
- 스위스 대표 발언(온라인)
 - 의제안에 AI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을 지지하면서, 인공지능의 활용뿐 아니라 잠재적 위험성도 함께 인식해야 한다고 제안함
 - AI를 적극 활용하는 데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부정확한 결과나 편향 등 위험도 상당하다고 지적하며, WPTI가 AI 활용시 유의사항이나 방법론적 한계도 다룰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이는 추후 세부 작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사항으로, AI의 중요성과 함께 책임성도 강조되어야 함을 제안함
- 일본 대표 발언
 - 일본 정부의 지역정책 기조와 연계하여 WPTI의 향후 중점분야를 언급함
 - 올해 6월 도쿄에서 열린 OECD 지역개발장관회의의 “회복력 있는 지역” 논의를 상기 시키며, 일본의 국토계획에서도 농촌지역 필수서비스 유지(예: 대중교통, 의료), 지역 매력 제고와 지방경제 활성화가 핵심이라고 소개함
 -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은 WPTI가 국토종합계획 지표의 시각화 및 모니터링, 정책 효과성 측정지표 개발 등에 지속적으로 기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함
- 콜롬비아 대표 발언
 - 콜롬비아의 국가 우선순위와 WPTI 의제 초안이 긴밀히 부합한다고 언급함
 - 향후 WPTI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세 분야로 ①지역격차 계측 (경제·사회·환경·제도 역량 지표를 국가 하위레벨까지 확충), ②국제 비교가능성 제고 (특히 지역 공공 관리 성과 관련 지표의 국제적 기준 마련), ③국가통계시스템 역량 강화 지원 (지역 통계의 지속적 생산을 위한 기술 협력)을 제시함
 - 콜롬비아 대표는 의제 초안이 언급한 데이터 혁신과 비교가능성 제고가 이러한 자국 수요와 일치한다고 평가하며, 적극 지지 의사를 표명함
- 에스토니아 대표 발언
 - 의제 초안에 포함될 신규 주제 제안으로, 탄소중립 전환의 지역동향 분석과 정책의 지역영향 평가 기법을 언급함
 - 지역단위 탄소 감축 및 녹색전환 추이를 측정할 수 있는 조화된 방법론을 개발하면,

국가별 탄소중립 이행상황을 지역 관점에서 비교·점검할 수 있다고 제안함

- 또한 영향평가(territorial impact assessment)에 정량기법을 도입하여 주요 정책의 지역별 효과를 사전에 예측·사후 평가하면, 근거기반 지역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강조함

- WPTI 의장 발언

-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후, 의제안은 상세 분야보다는 큰 틀을 간결하게 제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함
- 의장은 “의제는 5년 동안 유효한 살아있는(document 살아있는) 문서이므로, 너무 특정 주제를 못박으면 유연성을 잃는다”고 언급하며 독일 대표 등에서 제안한 내용을 향후 작업계획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함
- 또한 의제에서 생략되더라도 WPTI 작업계획을 통해 취약계층, AI, 기후 등 중요 이슈를 우리가 앞으로도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덧붙임

- ❖ (참고) 토의 요약:

- 전반적으로 대표들은 WPTI의 신규 의제가 데이터 혁신과 비교가능성, 유연성에 중점을 둔 것을 지지함. 다만 독일, 콜롬비아 등 일부 국가는 사회적 포용과 형평성을 분명히 할 것을 요청했고, 캐나다, 영국 등은 OECD와 회원국 간 데이터 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함
- 유럽연합(EU)은 영토 typology와 같은 WPTI 전통적 역할의 지속을 환영했으며, 일본, 한국 등은 자국 정책과 연계한 지표 개발을 기대한다고 밝힘
- 사무국은 이러한 의견을 종합하여 의제 초안을 다듬고, 상세 작업계획 수립 시 반영하겠다고 답변함

(4) [Item 4] 서비스 접근성 분석의 진전 사항 (11:15-12:15)

- OECD 사무국 발언

- OECD와 EU 집행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 중인 서비스 접근성(accessibility) 분석의 예비 결과를 발표함
- 발표자는 기존 이용가능 거리 중심 지표의 한계를 지적하며, 경쟁적 접근성 지표(competitive accessibility indicator) 개념을 소개함
- 이는 단순 거리뿐 아니라 시설 수용능력(capacity)과 지역 수요를 함께 고려한 접근성 지표로서, 시범적으로 에스토니아와 네덜란드의 어린이집·초등학교 데이터를 활용함
- 그 결과, 짧은 이동거리 범위에서는 도심 지역의 접근성이 높지만, 이동거리가 늘어날수록 도시의 시설 포화로 인해 접근성 증가가 제한되고 시골 지역의 접근성이 상대

적으로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관찰됨

- 이는 도시에 거주하는 가구가 가까운 시설일지라도 경쟁자(다른 이용자)가 많아 혜택이 감소하는 반면, 농촌은 거리는 멀지만 경쟁이 적어 1인당 이용가능 자원이 더 크다는 의미라고 설명함
- 또한 도시·교외·농촌별 최적 이동시간 임계 값이 다르며 (예: 도시는 짧은 시간 임계, 농촌은 긴 시간 임계), 이를 반영해야 지역 간 서비스 접근성을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다고 강조함
- 사무국은 곧 상세 분석 결과와 정책 함의를 담은 보고서를 배포할 예정이며, 회원국이 자국 자료에 본 접근법을 적용하는 데 관심이 있으면 협력할 의향이 있음
- EU 집행위원회 대표 발언
 - OECD의 연구가 EU 정책목표와 긴밀히 연관됨을 언급하며, OECD와의 지속적 협력에 감사를 표함. EU 대표는 육아서비스 보편적 접근성이 유럽의 핵심 고용목표(바르셀로나 목표 재정립 등)와 맞물려 있고, 아동보장제도 이행과도 연계된다고 설명함
 - 이번 연구에서 대중교통 모드를 포함하여 접근성을 평가한 혁신을 높이 평가하면서, 특히 농촌 지역에서 대중교통이 이동시간 단축에 크게 기여함을 에스토니아 사례로 확인했다고 언급함
 - 또한 시설의 용량 대 수요개념 도입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초기 결과에서 도출된 도시에서는 가장 가까운 시설만으로 충분치 않고 주변까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통찰이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함
 - 다만 이러한 정교한 접근성 측정에는 세부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예: 각 시설의 정원 파악 등)이 따른다는 점을 지적하고, EU 차원에서도 회원국과 협력해 해당 데이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임
- 에스토니아 대표 발언
 - OECD 발표와 유사한 자국 내 공간접근성 분석 시도를 공유함
 - 해당 프로젝트는 전국 8개 공공서비스(유치원, 초등학교, 보건소 등)의 위치자료를 활용하여, 웹 기반 지리정보 도구를 개발한 사례임
 - 이 도구는 건물 수준의 주소 데이터와 도로망 정보를 결합해, 각 1km² 격자별 인구가 가장 가까운 서비스까지의 이동시간을 계산하고, 서비스 적정 입지 추정 기능도 제공
 - 지도를 통해 특정 지역의 주민이 차로 10분 내 도달할 수 있는 초등학교 비율, 보행 30분 내 유치원 접근 가능 여부 등을 시각화한 예시를 소개하며, 이를 통해 서비스 공백 지역을 식별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급 최적화에 활용할 수 있음
 - 이번 분석 결과 에스토니아는 전국적인 서비스망 밀도와 접근성이 EU 내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이는 국민 인식과 달리 지역 간 서비스 격차가 크지 않음을 의미함

- 다만 유치원 아동의 50%, 중등학생의 60% 이상이 거주지 밖 다른 시·자치구의 학교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근 대도시의 인기 시설로 수요 쏠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함. 이는 일부 농촌 학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원인이므로, 향후 지자체 간 협력 및 통합 서비스 제공 등의 방안을 모색 중임
- 포르투갈 대표 발표
 - 일반공공서비스 지도화(Map of Facilities and Services of General Interest) 웹 GIS 애플리케이션을 시연함
 - 동 서비스는 문화(박물관), 교육(고등교육기관), 치안(소방서), 보건(병원) 4개 분야 시설 1,400여 개의 위치와 관련 지표를 통합 제공하며, 2025년까지 약 12,000개 시설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소개함
 - 이용자는 관심 지역을 검색하거나 지도를 클릭하여 해당 지역의 인구·수요 통계와 시설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개별 시설을 선택하면 제공 서비스, 접근성 지표(예: 도보/자동차 기준 접근 가능 권역), 주변 인구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예시로 한 병원의 경우 도보 5, 10, 15분 범위별 잠재 이용인구가 도식화되어 표시되며, 특정 시설이 폐쇄되거나 신규 설립될 때 접근성에 미치는 영향을 모의 분석할 수 있음
 - 이러한 시설별 접근권 분석이 지역 격차 해소에 시사점을 주며, 향후 대중교통 시간, 환경적 요인 등도 추가 고려하여 지표를 발전시킬 계획임
- 전문가(핀란드 헬싱키대 Tuuli Toivonen 교수) 발표
 - 역동적 이동성과 접근성 연구의 최신 동향을 소개함
 - Toivonen 교수는 자신이 이끄는 디지털 지리학 연구실(Digital Geography Lab)의 15년간 연구를 요약하며, 대중교통수단 및 시간가변 접근성 모델 개발 중요성을 강조함
 - 기존의 평균적인 통행자 가정에서 벗어나, 고령자나 겨울철 등 다양한 조건에 따른 접근성을 분석한 사례(15분 도시 개념의 노년층·눈길 적용 연구)를 소개하며, 사람마다 다른 여건을 고려한 세분화된 접근성 지표의 필요성을 제기함
 - 아울러 접근성의 질적 측면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는데, 단순한 시간 비용뿐 아니라 여행 경로의 쾌적함과 지속가능성까지 평가에 포함해야 실제 정책에 유용하다고 주장함
 - 이를 위해 진행 중인 ERC 프로젝트 Green Travel에서는 통행 중 접하는 녹지, 대기질, 소음 등 환경요소와 이동수단 선택, 이용자 웰빙 간의 관계를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있다고 소개함
 - 예를 들어 유럽 86개 도시의 사이클링 경로를 분석한 결과, 가장 자주 이용되는 자전거 경로가 대체로 가장 녹지 비율이 낮은 지역에 있음을 발견하였고, 많은 도시에서 학교까지의 거리와 경로의 녹지 수준 간에 상충관계(trade-off)가 나타나 시간 단축을

- 극대화하면 경관의 질은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함
 - 이러한 결과는 정책이 빠른 통행뿐 아니라 쾌적한 통행도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함을 시사함을 강조함
 - 다만 이러한 연구에는 민간 데이터 활용이 필수인데, 구글 등 사유 데이터의 접근 제한과 개인정보 문제가 있어 연구 투명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AI 기반 인구이동 모형 등 잠재 해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는 개방적이면서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이터 환경이 중요함
- OECD 사무국 발언
 - 다음으로 참가국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유럽연합 대표 발언
 - 경쟁적 접근성 지표에 대해 역량을 고려한 점이 특히 유용하다고 평가하며, 더 넓은 지리적 범위(지형이 복잡한 대국 등)에 적용한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힘
 - 현재 접근성 지표 산출 방식에서 하나의 이용자가 여러 시설의 잠재수요로 중복 계산되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는 특정 시설의 수요를 과대추계할 우려가 있음을 언급함
 - 이러한 수요 할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알고리즘 보완이나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매개변수로 중앙값 이동시간을 활용한 점 등은 합리적 접근이라고 평가함
- 독일 대표 발언
 - 서비스 접근성 연구가 삶의 질 측정과도 연결되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언급함
 - 독일도 과거 학교 접근성을 주제로 유사 연구를 시행했는데, 초등학교의 정의부터 난항을 겪었다고 소개하면서, 이번 OECD 연구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시설 통합합 이슈와 연계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함
 - 특히 향후 학교나 의료시설 폐쇄 시 접근성 악화를 예측·검증한다면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령화로 수요 감소 지역에서의 시설 유지 전략 수립에도 유용할 것이라고 강조함
- 네덜란드 대표 발언
 - 네덜란드는 국토가 평탄하여 자전거 통행이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부모가 자녀의 학교 통학을 함께 하는 문화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함
 - 네덜란드의 초등학교 선택권은 매우 다양해서 (종교, 교육이념 등) 부모들이 굳이 가까운 학교를 택하지 않고 먼 곳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면서, 통학 거리가 학교 간 경쟁과 수요 입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함
 - 또한 접근성이 낮은 계층이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예컨대 자동차나 교통비용 부담 여력이 없는 가정은 가까운 시설 이용에 제약이 있어 접근성

불이익이 간과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사회적 요인까지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함

- WPTI 의장 발언

- 추가 발언이 없음을 확인한 뒤, 의장 본인이 OECD 접근성 연구와 관련해 한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함: 의장은 스웨덴 사례를 들며 “우리 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학교가 있지만, 부모들이 평판 때문에 아이를 멀리 다른 학교로 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소개 하면서, 이러한 선호 요인이나 레퓨테이션을 접근성 분석에 어떻게 반영할지 질문함
- 아울러 접근성 지표의 시계열적 변화도 중요하므로, 본 연구에서 향후 5년 단위 추이를 측정할 계획이 있는지 문의함

- 전문가(핀란드 헬싱키대 Tuuli Toivonen 교수) 발표

- 의장의 질문에 답하여, 현재 연구진은 위성영상의 NDVI(식생지수)를 활용해 연도별 녹지 접근성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함
- 예를 들어 사계절에 따른 접근성 변동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 헬싱키 지역의 대중교통 통행시간 매트릭스도 2013, 2018, 2023년으로 산출하여 10년 간 변화 추세를 보고 있다고 답변함. 이를 통해 대중교통 개선이 실제 통행시간 단축으로 이어졌는지 등 정책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임
- 이어 학교 선호도에 대해서는, 이번 연구에서는 학교를 단순히 가까운 곳으로 가정했지만 현실에서는 다르다는 점을 인정함. 헬싱키 시와 협력하면 실제 학생 거주지-통학학교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으나, 아직 착수하지는 못했다고 설명하며, 이러한 미스매치 요인을 추후 연구과제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함

- OECD 사무국 발언

- 독일 대표의 질문에 답하여, 현재 접근성 지표에 시설 폐쇄 시나리오를 반영하지는 않았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앞으로 분석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답변함
- 가장 변동성이 큰 요인은 시설 용량 부족임을 강조하며, 실제 자국 사례로 어린이집 정원 대비 수요가 약 40% 초과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격차가 4% 이내로 줄어드는 점을 언급함
- 이는 취학 전 돌봄서비스의 공급부족이 상대적으로 심각함을 보여주므로, 정원(capacity) 지표를 정책지표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함
- 또한 현재 접근성 지표는 잠재적 수요 기준(가까운 시설 이용 가정)인데 실제로는 품질이나 개인 선호로 다른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가능하다면 현실 이용 데이터와 교차분석해 교통 접근성 부족 문제인지, 서비스 자체의 질 문제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예컨대 저소득층·농촌 주민이 멀리 있는 고품질 시설을 못 가는 것인지, 가까이 있어도 서비스 질이 낮아 안 가는 것인지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경제적 집단별 실제 이용패턴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과제라고 언급함

- 사무국은 이를 위해 앞서 의제3 논의에서 거론된 통합 데이터 플랫폼이 중요하며, 회원국이 보유한 행정자료 연계 통계를 적극 공유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임

- 유럽연합 대표 발언

- 접근성 연구와 관련하여 고해상도 인구격자 자료의 유용성을 강조했다. EU는 곧 5세 연령별 성별 인구격자(projection)를 2030년까지 전망한 데이터를 내놓을 예정이며, 이는 향후 지역 서비스 수요 예측에 활용될 수 있다고 언급함
- 또한 독일 대표가 지적한 시설 공급 변화 데이터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과거 시점별 시설 목록이 부실하면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없다고 지적함
- 이탈리아의 학교 개폐 데이터가 좋은 사례라고 소개하며, OECD와 EU가 각국에 공식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시설 데이터 구축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 (참고) 토의 요약:

- 각 국 대표들은 서비스 접근성 지표 개발이 지역 생활여건 평가에 필수적이라며 높이 평가함
- EU, 독일, 캐나다 등은 데이터 입수와 품질관리의 도전을 언급하면서 국제기구의 역할에 기대를 표했고, 네덜란드는 정책적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표 설명을 명확히할 것을 요청함
- 전문가(핀란드)는 접근성의 평등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을 부각시켰으며, 이에 OECD 사무국은 본 연구가 정책 영향 평가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추가 분석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함
- 논의 전반에 걸쳐 시설 용량 부족과 수요 분산 문제, 교통과 주거 패턴 변화 등이 중요 이슈로 확인되었으며, 회원국들은 향후 국가별 시범사업으로 본 접근법을 적용하는 데 관심을 보임

(5) [Item 5] 모바일 데이터를 활용한 농촌 일상 시스템 검증 및 기능적 지역 관련 최신 동향 (12:15-12:45)

- OECD 사무국 발표

- OECD가 EU 지원으로 착수한 비도시지역 일일생활권 (rural daily systems) 정의 연구의 현황을 보고함
- 이 프로젝트는 휴대폰 위치데이터를 활용하여 농촌 지역의 실질 생활·통근권을 파악하고, OECD 회원국 간 일관된 농촌지역 정의를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사무국은 지난 회의에서 다양한 방법론 개요를 공유한 데 이어, 최근 GPS 기반과 기

지국 기반 두 유형의 모바일 데이터를 확보하여 분석 중임

- 첫 번째 데이터는 GPS 신호 기반 (날씨·소셜미디어·내비게이션 앱에서 수집)으로 고 해상도 위치정보가 장점이나 이용자 커버리지가 낮고, 캐나다, 호주, 일본 3개국의 2021~24년 자료(1km 격자집계)임
 - 두 번째는 통신탑 기지국 기반 데이터로, 한국교통연구원(KOTI)이 제공한 한국 자료 (대표적 근무일 주간과 휴가철 포함 13일치, 500m 격자)를 사용함. 이 데이터는 정확도는 낮지만 전국 휴대폰 가입자의 움직임을 포괄해 커버리지가 매우 높음
 - 분석 방법으로, 먼저 원 데이터의 결측률을 점검한 결과 기지국 데이터는 거의 누락이 없었고, GPS 데이터는 인구밀도 낮은 농촌지역에서 일부 결측이 있었음. 또한 통행 패턴 분포에 편향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국 센서스 통근통계와 모바일 데이터의 통근유동 매트릭스를 비교한 결과 코사인 유사도 지수가 캐나다 0.93, 일본 0.96, 한국 0.95 등 매우 높은 상관도를 보여, 모바일 데이터가 실측 통근흐름을 잘 반영함을 확인함
 - 주요 결과로는, 통근(출근) 목적 통행의 비중이 국가별·지역유형별로 차이를 보임.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전체 통행의 26%가 통근 관련으로 나타나 미국 유사 연구치(24%)와 부합하였으나, 캐나다 15%, 일본 9%, 호주 5% 등으로 국가별 격차가 컸음. 이는 재택근무 확산, 데이터 분류 오차 등 다양한 원인 가능성이 있으며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또한 도시 vs. 농촌의 통행 특성으로, 한국과 캐나다 모두 도시 거주자의 통근통행 비중이 농촌보다 높게 나타남(예: 한국 도시 약 28% vs 농촌 17%). 즉, 농촌 주민의 이동은 생필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 등 비통근 목적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시사함
 - 사무국은 현재 이러한 이동패턴 지표화 작업과 병행하여, 기존 농촌지역 정의(행정구역 기반)와 모바일 데이터 기반 실제 생활권 분석을 비교 연구 중이라고 설명함. 예비 분석 결과, 국경이나 지자체 경계를 넘어 이동하는 농촌 거주자의 비율이 국가마다 크게 달라, 일률적인 농촌 권역 설정이 어렵지만, 모바일 데이터로 공동생활권을 규명하는 데 큰 가능성을 보았다고 평가함
 - 앞으로 4개국 파일럿 결과를 토대로, 회원국별 데이터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 국가를 확대할 예정이며, 2026년 말까지 OECD 표준 농촌 일일생활권 정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유럽연합 대표 발언
 - 우리는 발표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 농촌개발 장관 위임을 계기로, 비도시지역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이러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지리 구분은 증거기반 정책 이행의 중요한 증거가 됨

- 12개 회원국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동성을 분석하고 있음
- 비도시지역의 통근 패턴이 도시보다 다양할지 확인하고자 함
- 스위스 대표 발언 (온라인)
 - Functional rural area는 어떻게 정의 되는지 질문함
- 한국 대표 발언
 - 한국은 행정 경계를 넘어서는 기능적 지역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모바일 앱 데이터와 스마트교통카드 데이터 같은 비전통적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 데이터를 통해 통근 패턴, 일상 이동 흐름, 필수 서비스 접근을 분석함
 - 교통망 계획 뿐 아니라 필수 서비스 입지, 일자리, 주거, 서비스 설계에 이러한 데이터가 도움이 됨
 - 예를 들어, 농촌은 도시보다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이동성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한국은 교통취약지역을 파악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과 같은 맞춤형 이동 솔루션을 검토하고 있음
 - 또한 이러한 데이터는 관할구역을 넘어서 실제 생활권 패턴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행정 서비스 공백을 식별할 수 있게 함
 - 이러한 작업은 기능적 영토 계획에 크게 기여함
- 이탈리아 대표 발언
 - 이탈리아 국가통계청에서도 유사한 데이터 활용 경험이 있음
- ❖ (참고) 토의 요약:
 - 각국 대표들은 모바일 빅데이터 활용이 지역 정의의 혁신적 접근이리는데 공감하였고, 몇몇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접근성 이슈를 질문함
 - 사무국은 통계적 익명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회원국 통신당국·통계청과 협의하에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함
 - 또한 오스트레일리아 등 몇몇 국가 대표는 자국에서도 유사 시도를 하고 싶다고 언급하며, OECD가 모범 사례와 알고리즘을 공유해주길 요청함
 - 사무국은 개발 중인 오픈소스 코드 패키지를 향후 공개할 예정이며, 관심국과 전문가 회의를 통해 기술 교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힘
- ❖ (참고) 토론 질문1: 귀국에서는 대체 이동성 데이터(예: 이동통신 네트워크 데이터)가 어떤 정책 분야에 활용될 때 가장 유용했나요?
 - (유럽연합) 대체 이동성 데이터는 비도시정책 및 장기 비도시 비전 이행을 위한 증거 기반 정책 설계에 활용됨. 행정경계를 초월한 통근 패턴, 일상 이동, 핵심 서비스 접

근성 분석에 활용되어 기능적 지역 설정에 기여함

- (한국)이동통신 데이터는 교통계획, 필수 서비스 입지 선정, 맞춤형 이동성 정책 설계에 활용됨. 특히, 비도시지역에서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도입을 검토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됨. 행정구역 간 실제 생활권을 파악하여 행정 서비스 제공의 공백을 식별하는데 기여함
- (Secretariat) 대체 이동성 데이터는 기능적 농촌지역 및 일일 생활권 정의를 위한 실증 분석에 활용됨. 특히, 근로 유관 이동과 비근로 이동을 구분하여 지역 간 이동 특성 차이를 분석하는데 사용됨
- ❖ (참고) 토론 질문2: 대체 데이터 출처를 공식적인 통근 또는 인구 통계와 비교하여 그 품질이나 비교 가능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나요?
 - (유럽연합) 서로 다른 데이터 소스(모바일 데이터, 공식 통근 통계) 간 측정 대상이 동일한지 여부가 불명확한 문제로 제기됨. 장기간 시계열 비교를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위치 변화에 대한 신뢰 가능한 공식 데이터가 필요하나, 데이터의 불완전성이 한계로 지적됨
 - (한국)모바일 데이터와 공식 통계 간 비교에서 표본 대표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GPS 기반 데이터는 표본 규모가 작아 도시 편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공식 센서스 기반 통계와의 직접 비교를 어렵게 함
 - (Secretariat) GPS 기반 데이터와 기지국 기반 데이터 간 공간 정확도와 이용자 커버리지의 차이가 비교 가능성의 주요 제약 요인으로 언급됨. 다만, 공식 센서스 통근 행렬과 모바일 데이터 기반 이동 행렬 간 구조적 유사성은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나, 개별 정착유형별 편향 가능성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
 - (이탈리아) 모바일 데이터 활용시 공식 통계대비 편차가 상당히 발생하는 사례가 존재함. GPS기반 데이터의 표본 수가 매우 작아 정책 분석에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음. 이는 유럽 차원에서도 대체 데이터 품질 평가를 위한 공동 연구가 진행중인 이유임

(6) [Item 6] 지역 데이터 및 정의, 핵심 프로젝트 관련 업데이트 (14:15-15:15)

- OECD 사무국 발표
 - 최근 OECD 지역통계 및 지표 체계 개편 내용을 보고함. 먼저 각국의 행정개편 등을 반영하여 지역명칭과 코드 표준화를 업데이트했고, 국문·영문 지역명 번역을 조화시켜 회원국 편람을 배포했음을 소개함
 - 또한 경제분석 시 지역규모 차이에 따른 왜곡을 줄이기 위해, 통합대도시권 (aggregated metropolitan regions) 개념을 도입했다고 소개함. 이는 동일한 대도시권

(FUA) 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속하는 복수의 TL3 지역을 하나로 묶어 단일 지역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예시로 암스테르담 대도시권은 8개의 TL3 지역을 합쳐 분석한다고 설명함

- 이 방식은 기존에 구 EU FUA 경계를 기준으로 했으며, 현재 OECD 비EU 국가 중에서도 업데이트가 필요한 6개국을 파악해 추후 FUA 지도가 개정될 예정이라고 언급함
 - 지역 웰빙(Regional Well-Being) 틀 업데이트도 보고함. 이 온라인 틀은 OECD 468개 대지역(TL2)의 삶의 질을 11개 분야, 15개 지표로 평가하는 대시보드로서, 출범 10주년을 맞아 2025년판에서는 주거비 부담 지표를 신규 추가했다고 밝힘
 - 웰빙 지표는 객관 통계뿐 아니라 주관적 만족도도 포함하며, 각 지역의 분야별 점수를 0~10 범위로 산정하여 다른 국내 지역 및 OECD 전체와 비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무국은 이 업데이트된 틀이 지역 간 격차 추이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며, 지난 10년간 축적된 데이터로 회원국이 정책성과를 평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임
 - 이어 농촌/도시 지역 분류체계(접근성 기준 소지역 분류) 개정 계획을 소개함. 2024년까지 회원국의 최신 2020년 인구격자 및 도로망 데이터를 반영하여, 5단계 지방지역 분류를 재산정할 예정임
 - 특히 대도시 영향권을 반영한 시간거리 임계값을 개선하여, 여러 중소도시가 인접한 지역의 다핵구조(polycentricity)를 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함
 - 다만 이러한 재분류 과정에서 FUA 경계 변화가 영향을 미치므로, 아직 FUA 경계가 구형인 국가들은 최대한 경계를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요청함. 사무국은 EU 집행위와 방법론을 긴밀히 조율 중이며, EU 회원국은 유로스타트 분류를 그대로 통합하고, 비 EU 회원국은 사무국이 예비 분류안을 작성하되 국가 제공 최신 자료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힘. 최종 분류안은 기술설명서와 함께 각국에 공유하여, 공개 전 검토와 피드백을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임
- 유럽연합 대표 발표
 - EU 측의 관련 작업을 업데이트하며, 이는 OECD와 긴밀히 공조되고 있다고 설명함
 - 먼저 UN이 승인한 도시화 정도(Degree of Urbanisation) 레벨 1·2가 전세계 격자와 지자체 단위로 산출되어 공개되었고, 이는 OECD 작업에도 활용될 것이라고 소개함
 - 또한 유로스타트가 회원국과 합의한 최신 FUA(기능적 도시권) 경계를 곧 공표할 예정이며, EU 및 파트너국 포함 약 600개의 FUA에 전체 인구의 64%가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언급함
 - 수도권(Metro regions) 정의도 새로 확정되어 2026년 1월 중 발표될 예정인데, 이는 각국 인구 50만 이상 수도도시의 FUA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낙후 농촌지역(remote rural) 분류 결과도 EU와 OECD가 협력하여 내년 1월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부연 설명함

- 대표는 현재 OECD·세계은행 등과 공동으로 전세계 FUA 재설정 작업도 논의 중임을 언급함. 과거 추계한 글로벌 FUA 데이터는 업데이트가 일부 필요하기 때문에 최신 인구분포와 교통망, 혹은 모바일 데이터를 활용해 국가별 통근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도 FUA를 추정하는 방법을 연구 중임
 - 최신 EU FUA 지도를 소개하며, 다핵적 통근권의 예시로 브뤼셀 대도시권이 인근 Leuven 등 도시들과 통합된 사례를 설명함. 이는 서로 통근량이 많아 하나의 광역권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며, 유사하게 통근 연계 기준으로 인접 도시권을 하나로 묶는 polycentric FUA 목록도 제공된다고 설명함
 - 아울러 UN-Habitat 등에서 제기된 “도시+교외” 집합적 도시권 정의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연속된 교외지역을 중심도시에 귀속시키고 떨어진 교외(exurb)는 제외하는 프로토타입 방법을 개발 중이라고 소개함
 - 이는 미국, 호주 등 교외가 광범위한 국가에서 유용할 것이며, 여러 개의 도시·소도시가 하나의 연속권을 형성하는 경우 묶는 기준 등 적정 임계를 찾아야 하는 도전이 있다고 설명함. 조만간 이 초안을 회원국에 회람해 “너무 크거나 작지 않은” 적절한 도시권 정의에 대한 의견을 구할 예정임
 - 마지막으로, 세계 도시 및 농촌 인구 장기전망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UN과 협력하여 1950년부터 2100년까지 전세계 인구를 Degree of Urbanisation 기준으로 재분류·전망한 결과가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2025에 포함되었고, 이는 OECD가 강조하는 지역관점 인구전망을 국제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함
 - 전세계 대도시의 1950-2100년 인구와 공간 확산을 애니메이션으로 시연하며 (텔레 사례 등), 이 데이터와 시각자료를 공개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정책 홍보 등에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함
 - 마지막으로, EU 대표는 OECD와 유로스타트, JRC가 어느 때보다 협조적으로 작업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특히 앞서 언급한 교외 포함 도시권 정의(urban agglomeration) 시범안에 대해 회원국의 피드백을 요청함. 또한 EU는 향후 지역·지방단위 인구 및 경제전망도 준비 중이므로, OECD 회원국과 공유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 영국 대표 발표
 - 영국의 최근 행정경계 개편 동향을 공유함. 먼저 잉글랜드 지방자치 개혁으로, 현재 일부 지역에서 이원적 구조(주(州)+시(市))를 단층 구조(unitary)로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힘
 - 구체적으로 6개 시를 포함한 120만 인구의 한 주를 2개의 60만 인구 unitary로 통합하는 식이며, 정부는 이상적인 unitary 규모를 인구 50만 이상으로 권장하고 있다고 설

명함. 2028년까지 잉글랜드 전역이 이러한 unitary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북아일랜드·스코틀랜드·웨일즈는 단층 구조라고 부연함. 이러한 변화는 통계 작성에도 큰 영향을 주는데, 향후 소지역 통계단위가 기존 시(district) 수준(~20만명)에서 unitary 수준(~50만명↑)으로 커져 세분성 저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 영국 통계청은 사라지는 시(district)에 대응하여 새로운 중간 통계구 설정을 검토 중이며, 경계 변동이 확정되는 대로 OECD에 통보하겠다고 언급함

- 두 번째로, 잉글랜드 권한이양(devolution) 흐름을 소개했다. 영국은 전통적으로 중앙 집권적이거나, 2014년부터 잉글랜드 내 주요 도시권에 광역단체(metropolitan combined authorities)와 민선 시장을 두어 일부 재정·정책권한을 이양하는 실험을 진행해왔다고 설명함. 현재 13개 광역권이 설치되었고 6곳이 추가 논의 중이며, 정부 목표는 잉글랜드 전역을 이러한 권역으로 덮는 것이라고 밝힘. 문제는 이러한 광역단위가 전국을 완전히 포괄하지 않고, 시기별로 순차적으로 출범하여 시계열이 불일치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함. 이로 인해 중앙정부·통계청이 데이터를 생산·배포할 때 일부 지역만 해당되는 단위를 다루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하며, 향후 전국적 커버리지가 달성될 때까지 과도기적으로 여러 불편이 예상된다고 덧붙임
- 마지막으로 영국 대표는 이러한 국내 개편이 국제통계의 지역단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함. 현재 OECD 통계상 영국의 TL2는 EU의 NUTS1(약 500만명권), TL3는 NUTS2(약 100~300만명권)에 대응하는데, 영국 내부 행정계층과 잘 맞지 않아 임의로 여러 시(district)를 결합한 구성이 많았다고 설명함. 그러나 새로운 unitary와 광역단체가 확정되면, 차후 OECD TL3를 unitary와 일치시키고 TL2를 광역단체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이는 영국 TL 단위의 인구규모가 다른 대국과의 정합성을 높여줄 것이며, 이미 OECD 사무국과 비공식 논의가 시작되었다고 언급함

● 터키 대표 발언

- 터키의 지역사회경제발전지수(SEGE) 개발 경험을 공유함. SEGE는 터키 정부가 1966년 이래 17차례 시행해온 지역개발 수준 평가 연구로, 최근 2022년판 결과를 발표했다고 소개함. 이 지수는 다차원 지표를 활용하여 구·주·권역 단위의 발전 정도와 강점을 계량화한 것으로, 정책 입안 및 투자 배분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함
- 방법론 측면에서는, 8개 분야에서 선정된 150여 개 지표에 대해 주성분분석(PCA)을 실시하여 가중치를 산출하고 종합지수를 만든다고 밝힘. 특히 특정 분야 지표가 지수 전체를 지배하지 않도록 분야별 고른 분포를 보장하고, 과거 지수와의 일관성도 유지하기 위해 크로스체크와 전문가 검토를 거친다고 부연함
- 2022년 최신 결과에 따르면, 제1주성분이 총 변동의 약 42.9%를 설명하여 터키 전역에 걸친 공통 발전요인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함을 보여준다고 언급함. 또한 지수 분포를 보면 서부 연안 지역에 고점이, 동부 내륙에 저점이 위치하는 동서 격차 패턴이

여전하며, 상위권·하위권 지역군이 2017년 평가 때와 대체로 동일하게 나타나 공간적 관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함. 이러한 결과는 지역 격차 완화의 어려움을 보여 주며, 정부로 하여금 취약지역에 정책 역량을 더 집중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었다고 설명함

- 터키 대표는 SEGE가 단순 순위 산출에 그치지 않고 지역별 상대 강점과 약점 분야를 파악해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 데 사용된다고 강조함. 예를 들어 어떤 주는 교육지표가 높으나 산업경제가 약한 식으로 프로파일링하여, 중앙정부 지원과 민간 투자 유치를 유도한다고 소개함. 끝으로 이 지수가 OECD 웰빙지표 등 국제지표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언급하며, 향후 OECD 차원의 컨설팅도 기대한다고 밝힘

- 네덜란드 대표 발언

- (앞선 Eurostat 발표에 대해) 과거 OECD 메트로 지도에서 암스테르담 교외가 누락되어 답답했는데, 이번에 수정된다니 다행이라고 반기며, 기술적 정의 변화가 정책 현장에 혼란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FUAs나 도시권 범위 변경 시 정책결정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함
- 그렇지 않으면 향후 수년간 “어디까지가 도시인가”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소통 전략을 잘 마련해 달라고 요청함

- WPTI 의장 발언

- 추가 발언이 없음을 확인하고, Item 6. b. 지역·도시 동향보고서 (Regions and Cities at a Glance) 2026 준비 현황으로 바로 이어감

- OECD 사무국 발표

- 2024년판 Regions and Cities at a Glance가 12월 발간 후 2만회 이상 다운로드되며 큰 호응을 얻었고, 70여 개국에서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고 소개함. 2026년판은 4개 장 구성을 유지하되, 각 장에 새로운 분석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소개함
- 경쟁력 부문에서는 지역 생산성 격차의 원인에 초점을 맞춰, 지역간 불균등 분해지표 (예: 변이계수 변형)를 도입하고 무역가능(tradable) 산업의 기여분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이를 통해 교역재 부문 집중도가 지역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고, 국가별로 제조업 vs. 서비스업 편차가 지역불균형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함
- 인구 및 노동 부문에서는 고령화와 인력 공급 변화를 다루고, 특별히 지역 노동시장 권역 단위의 지표 비교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힘. 예를 들어 2015~25년 노동연령인구 증감, 고용률 변화를 기존 행정구역이 아닌 통근권역 단위로 분석하여, 실제 경제권 범위에서의 노동시장 동태를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함. 또한 기업의 AI 기술 도입이

라는 새로운 주제를 포함하여, 생성형 AI 활용지수, 지역별 AI 스타트업 및 벤처투자 분포 등을 일부 국가에 대해 제시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이는 디지털 전환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는 첫 걸음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함

- 웰빙 부문에서는 주거, 공동체 신뢰 등 사회적 지표를 보완할 계획임. 2024년판에 이어 주택가격 상승과 지역인구 이동의 관계를 살펴보고, 빈집률 등 유희주택 지표와 주택 공급(건축허가) 데이터를 도시·농촌별로 분석하여 인구감소 지역의 주거 여건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함. 또한 이번 오전세션에서 논의된 경쟁적 접근성 지표(어린이집, 의료시설 접근성 등)를 주요 생활 편의지표로 채택하여 웰빙 장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힘. 그 외 사회적 신뢰와 참여(community and trust) 영역에서 지역별 사회자본 수준을 보여줄 조사자료도 활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임
- 환경 부문에서는 넷제로 전환을 측정할 새로운 지표들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밝힘. 예를 들어 지역별 1인당 온실가스 배출 추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전기차 보급률 등 가능한 지표를 수집하여, 2010년대 대비 2020년대에 지역들의 탄소중립 경로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 마지막으로 2026년 판에는 온라인 부록을 강화하여, 기존 책자 말미 국가별 페이지 대신 대화형 웹툰을 개발할 것이라고 소개함. 이를 통해 독자들이 관심 지역이나 지표를 직접 선택하여 시각화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고서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힘
- 사무국은 현재 집필팀이 구성되어 작업 중이며, 내년 중간쯤 초안을 회람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회원국에는 필요한 신규 자료 요청이 갈 수 있으니 협조 바라고, 추가 제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공유해 달라고 당부함

❖ (참고) 토의 요약:

- 대표들은 OECD 지역·도시통계 시스템이 회원국 정책 변화를 잘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함. EU는 OECD와의 협업 성과를 강조하며, 특히 공동 FUA 지도 구축과 글로벌 인구추계를 높이 평가함. 영국은 향후 자국 행정개편에 따른 통계단위 변경 시 OECD와 긴밀히 조율할 것을 약속함. 터키는 OECD 웰빙지표 등이 자국 개발지수와 일맥상통함을 언급하며, 국내 지표개발 경험을 국제적으로 공유할 의사를 밝힘. 네덜란드는 새로운 정의나 지표 도입 시 정책 파급효과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거듭 요청했고, 이에 사무국은 회원국과 사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응답함
- 전반적으로 회원국은 향후 발간될 Regions and Cities 2026 보고서의 주제를 폭넓게 지지하였으며, AI, 기후 등 최신 이슈의 반영을 환영함

❖ (참고) 토론 질문1: 새롭게 이용 가능해진 전 세계 인구 그리드(global population grids)와 인구센서스(censuses) 정보를 반영하여, 귀국에서는 TL 및 FUA 경계를 포함한 영토 경계를 업데이트할 계획이 있습니까?

- (캐나다) 지리 단위(예: CMA, CA, CSB 등)는 사회·경제적 통합(social and economic integration)을 반영하는 기능적 지리 정의로서, 각 센서스(census) 때마다 검토 및 갱신(reviewed and updated with each census)된다고 언급함. 즉, 센서스 기반의 경계 업데이트 관행이 존재함
- (OECD) 유럽 측에서는 “최신 센서스 라운드(latest census round) 기반”으로 더 많은 국가에서 자료를 공유받아 활용하려는 언급이 있었고, 인구 그리드(population grid) 관련하여 “그리드 레벨(grid level) 인구(연령·성별 5세 단위)를 추정/투영(projection)할 계획”을 밝힘. 새 인구 그리드·센서스 정보가 기능적 지리/분석의 업데이트에 활용될 예정임을 간접적으로 언급함
- ❖ (참고) 토론 질문2: Regions and Cities at a Glance에 포함된 지표들의 확산(도달 범위 확대)을 위해, 더 나은 시각화 도구(visualisation tools)에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보십니까?
 - (포르투갈) “시설·서비스 지도(map on facilities and services of general interest)”를 Web GIS / interactive map 형태로 구축했고, 이러한 시각화 도구는 새로운 통계 산출물(statistical products)을 대중에게 공개·확산(disseminated)하는 목적과 연결되어 있으며, 향후 업데이트 및 확장(부문 확대, 교통수단 추가 등)을 계획한다고 언급함
 - (에스토니아) 웹 기반 웹맵(web-based map application)을 개발하여 “가장 가까운 서비스까지의 거리/시간”, “최적 서비스 입지(optimal service locations)”, “접근성 핫스팟(accessibility hot spots)” 등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매년 업데이트 할 계획임

(7) [Item 7] OECD 지역 간 구매력평가(PPP) 측정을 향하여: 프로젝트 진행 현황 및 예비 결과 (15:15-16:00)

- OECD 사무국 발표
 - OECD 지역정책실이 2025년 착수한 지역 Purchasing Power Parity (PPP) 산출 연구의 경과를 보고함. 이는 국가 내 지역 간 물가수준 차이를 반영한 PPP를 개발하여, 향후 지역 실질소득 비교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임
 - 2025년 4월 프로젝트 개시 후 약 9개월간 ▲관련 문헌 및 기존 산출사례 조사, ▲전문가 그룹 구성 및 회의 3회 개최, ▲주요 이슈 논의를 위한 논문 및 이슈페이퍼 작성 등을 진행함
 - 특히 주택가격 산출과 대체 데이터 활용을 주제로 심층 논의를 했고,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도 협력하고 있으며, 회원국 통계청 등과 총 40여 회의 양자회의를 갖고 각국 소비자물가지수 자료의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여, 가용 데이터 목록과 방법론 초안을 Methodological Chapter 형태로 공유함

- 현재는 시범 도입 단계로, 영국,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4개국을 대상으로 2018년과 2023년 연도의 지역PPP를 산출하는 작업에 착수했음
- 사무국은 향후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함. ①TL2 지역 단위 PPP 산출에 집중하되 데이터 여건이 되면 TL3도 보완, ②코로나 전후 시점(2018 vs 2023)을 비교하여 팬데믹이 가격지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볼 것, ③회원국 소비자물가지수(CPI) 프로그램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품목별 지역가격이 미포함된 경우 웹스크래핑, 행정자료 등 대체 데이터로 보충할 것
- 또한 가능하면 OECD 국가 간에도 비교 가능하도록 국가 전체 PPP 체계와 정합성을 유지할 예정임
- 한편 품목별 지역물가 변이는 주거비 > 개인 서비스(예: 요식업)이고, 일반 상품은 전국적으로 가격이 비교적 균일하다는 점을 감안해 자원배분을 주거·서비스에 집중함. 예컨대 중고차나 투자재 등은 지역 가격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제외하거나 간접 추정할 예정임
- 이러한 접근을 구현하기 위해 사무국은 자체 개발한 오픈소스 R 패키지(oecd-subnational-PPP 등)를 활용하고 있음. 이 패키지는 다양한 국가 CPI 데이터 구조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추면서도, 방법론 표준화와 문서화를 충실히 하여 회원국이 직접 활용할 수도 있게 설계되었다고 강조함. 이미 테스트용 코드를 일부 국가에 공유하였으며, NSO들이 자국 자료로 지역PPP를 내부 산출해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예비 결과로, 우선 영국의 2018년 및 2023년 데이터로 TL2 지역 간 PPP를 산출한 사례를 제시함. 이에 따르면 런던의 소비자물가 수준은 전국 평균 대비 약 14% 높고, 북부 잉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주거비와 서비스비가 런던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 지역차를 주도하였으며, 내륙 및 변두리 지역은 상품가격이 대체로 비슷해 총지수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임. 이러한 결과는 예상과 부합하며, 추후 다른 시험국(예: 독일 등)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있는지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힘. 사무국은 2026년 중반까지 충분한 시범 결과를 축적하여, 2026년 말 회의에서 중간보고서를 공유할 예정임

❖ (참고) 토의 요약:

- 대표들은 지역 PPP 산출의 정책적 유용성에 공감하면서도, 세부방법론에 대한 질의를 제기함. EU 대표는 물가 비교 시 주택 임대료, 공공서비스 요금 등 지역차가 큰 항목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질문했고, 사무국은 국가 CPI 내 주거비 지수를 활용하고 부족하면 부동산 포털 등 외부 데이터로 보완하고 있다고 답변함
- 일부 회원국은 데이터 제공과정에서 소비자물가 미공개 세부자료 활용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했으며, OECD는 자료 비밀 유지 협정을 통해 협조를 얻고 있다

고 설명함

- 다수 대표들은 지역 PPP가 향후 지역 간 실질소득 격차 분석이나 균형발전 재정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며, 조속한 연구 진전을 촉구함. OECD는 회원국의 적극적인 데이터 제공과 조언에 감사를 표하고, 완성도 있는 시범 결과를 공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참고) 토론 질문1: 귀국에서는 지역별 가격 추정치(subnational price estimates)를 산출하거나 그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이니셔티브를 검토하고 있습니까?

- 여러 국가 및 OECD 사무국은 지역 단위 데이터의 고도화, 그리드 기반 인구자료, 기능적 지역 정의(FUA, FRA 등)의 정교화를 언급하였으나, 이는 가격·물가 지표가 아닌 이동성·접근성·서비스 분석 중심임. 지역별 가격지수, 지역별 물가 추정, subnational PPP 산출 또는 확장과 관련된 직접적인 국가 발언은 없었음

❖ (참고) 토론 질문2: 귀국에서 지역별 가격 차이(subnational price variation)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경제적, 지리적, 제도적 요인을 포함하여)

- 경제적·지리적·제도적 요인에 따른 지역별 가격 격차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이나 발언은 없었으나, 도시와 농촌 간 접근성 차이, 서비스 공급 능력과 수요의 불균형, 이동 시간과 이동거리 기능적 지역 내외 이동 패턴에 대해 간접적으로 언급됨

❖ (참고) 토론 질문3: 정책 분석 및 국내 동향 벤치마킹을 위해, 지역별 구매력평가(subnational PPPs)의 국가 간 비교(cross-country comparisons)가 귀국에 제공하는 가치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subnational PPPs 또는 지역별 구매력의 국가 간 비교를 정책 분석·벤치마킹에 활용한다는 직접적인 발언은 없었지만, 국가 간 기능적 지역 정의의 비교 가능성, 센서스와 모바일 데이터 기반의 국제 비교, 지역 간 격차를 정교하게 포착하기 위한 공동기준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언급됨

(8) [Item 8] OECD 지역 성장의 결정 요인: 교역 가능 부문의 역할 (16:00-16:30)

● OECD 사무국 발표

- OECD 지역정책 보고서 시리즈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 연구의 예비 내용을 발표함, 이 연구는 2000년대 초반 이후 최근까지 지역경제 성장 패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 특히 교역재(tradable) 산업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음

- 현재 보고서는 4개 장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1장은 전체 지역성장 동향, 2장은 지역 격차 추이, 3장은 성장요인(산업구조, 혁신 등), 4장은 정책 시사점으로 계획되어

있음. 내년 초 학계 전문가 워크숍을 거쳐 원고를 수정한 후, 2026년 1분기 중 회원국 코멘트를 받을 예정임

- 사무국은 먼저 전반적인 지역별 1인당 GDP 성장률 추이를 과거 20년간 세 시기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공유함. 2003 - 2008년 기간에는 OECD TL2 지역의 연평균 성장률이 2.5%에 달했으나, 2008 - 2013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0.4%까지 급락했고, 2013 - 2021년에는 다시 1.5% 수준으로 회복됨
- 주목할 점은, 2003 - 08년 고성장기에는 불가리아, 루마니아, 터키, 콜롬비아 등 비교적 저소득 국가의 지역들이 빠르게 성장하여 국가 간 격차 축소에 기여했으나, 2013년 이후로는 이러한 하위권 지역의 성장세가 둔화됨
- 실제로 하위 50% 지역의 평균성장률은 전기(2003 - 08) 2.3%에서 후기(2013 - 21) 1.7%로 떨어진 반면, 상위 50% 지역은 0.8%에서 1.6%로 오히려 배증하여 지역 간 성장격차 확대 조짐을 보였다고 설명함. 이는 2014 - 16년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신흥·자원지역의 성장 둔화, 선진 도시지역의 회복 가속 등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됨
- 또한 대도시 지역의 기여도가 최근 더욱 높아진 현상을 강조함. 2013 - 21년 동안 OECD 30개국 중 21개국에서 수도권 및 주요 대도시 지역(인구 25만 이상)이 해당국 GDP 성장의 과반 이상을 기여했으며, 이들의 GDP비중 대비 성장기여가 평균적으로 높았음. 예를 들어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은 대도시들이 국가 GDP의 40-50%를 차지하면서 성장의 50-60%를 차지함. 다수 국가에서 이러한 대도시 주도 성장 경향이 2000년대보다 강화됨
- 무엇이 대도시의 높은 성장 기여를 설명하는가를 분석함. GDP 증가분은 ▲인구증가(인구 요인), ▲생산성 향상(GDP/노동자), ▲고용률 상승(노동참가), 세 가지로 분해할 수 있는데, 21개국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국가마다 주된 요인이 상이함
- 예컨대 프랑스는 대도시 성장의 1차 요인이 인구 순수유입으로 나타났고, 미국은 노동생산성 향상이, 폴란드는 노동참여 증가가 각각 대도시 성장의 주요 동력이었다고 소개함. 이처럼 국가별로 사정이 다르나, 공통적으로 대도시가 타 지역보다 유리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점에 주목함
- 구체적으로 교역가능 산업 비중이 높은 지역일수록 최근 더 빠르게 성장했는데, 이는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로 인한 생산성 상승효과 덕분이라고 분석함. 특히 대도시의 경우 첨단 제조업보다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금융, ICT, 전문서비스 등)이 발달하여, 혁신과 생산성 증가를 견인함. 반면 중소 도시나 교외 지역은 제조업이나 자원산업 위주로, 최근 수요 부진 및 기술격차로 성장세가 정체됨
- 이를 도식화한 그래프에서, 인구 150만 이상 대도시들은 특히 수출형 서비스 고용 비중이 높고 특허출원 등 혁신 활동도 집중되어 있어, “프론티어 지역과 기타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실제 상위 25% 특허 집중 지역은 2013-20년간 성장률이

2003-08년 대비 상승한 반면, 나머지 지역은 큰 변화가 없어 혁신선도 지역만 더 빨리 성장하는 추세를 보임

- 이러한 분석은 국가 차원의 성장률은 소수 핵심지역에 크게 의존하게 되었으며, 산업 구조적 편차가 지역불균형과 직결된다고 설명함. 따라서 지역혁신 확산, 포용적 산업 전환 지원이 없으면 향후 지역 격차가 더 심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유럽연합 대표 발언

- EU 내부 데이터를 보면 수도 대도시와 기타 대도시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남. 예를 들어 지난 10년간 유럽 대부분의 수도는 국가 평균보다 빨리 성장했지만, 다른 대도시는 오히려 평균 이하 성장한 경우도 많음. 이에 OECD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를 구분하여 성장률을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또한 대도시 기여도 그래프와 관련해, 각국 수치가 명목인지 실질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실질 성장률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

- 한국 대표 발언

- 한국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 맥락에서, 교역재 산업을 키우면서 지역균형을 달성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임. 한국은 비수도권 거점을 육성하고자 5대 메가경제권 전략을 추진 중임. 즉, 권역별로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AI 등 특화산업을 선정하고, 대기업 혁신클러스터 및 중소도시 산업단지를 연계하여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 노력하고 있음. 동시에 수도권에는 과도한 인구·산업 집중을 억제하는 규제를 유지하면서, 고부가가치 R&D와 본사 기능은 계속 성장하도록 균형을 모색해야 함

- 칠레 대표 발언

- OECD 발표 중 프랑스에서 대도시 성장의 주요인이 인구 요인이라는 부분에 대해, 인구 증가가 기여했다는 것은, 은퇴자 등 생산활동이 없는 계층이 도시로 몰려와 소비를 해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노동인구가 이동한 것인지 질문함

- OECD 사무국 발언

- 프랑스의 경우 2013-21년 파리 등 대도시의 1인당 GDP 증가분 중 인구 증가 효과가 가장 컸다는 뜻이며, 이는 동일 기간 프랑스 대도시에서 생산성(노동자당 GDP)이나 고용률 상승보다 인구 순유입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작용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함
- 아직 인구 유입의 구성(은퇴자 vs. 노동자 등)을 상세히 분석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대도시 인구증가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고, 그만큼 경제 규모를 불렀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임

- WPTI 의장 발언

-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대도시가 1~2곳뿐이라 그래프 상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데, 스

- 웨덴은 메트로 지역 비중이 작아 기여도도 작게 나오는 것 아닌지 질문함
 - OECD 사무국은 해당 그래프가 각국 내에서의 대도시 상대기여를 보는 것이므로, 메트로 비중이 낮은 스웨덴도 보정이 되어 있다고 답변함
 - 추가로 의장은 다만 노르웨이 등 일부 대표도 유사 의문을 표했으나 보고서 작성 시 지표 해설을 명확히할 것을 제안함
- 노르웨이 대표 발언
 - OECD의 대도시 정의가 자국 사례에 적용될 때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함.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 오슬로 외에 뚜렷한 대도시가 없는데, 발표에서 제시된 노르웨이 메트로 지역이 정확히 어디를 뜻하는지 질문함. 만약 오슬로와 베르겐 정도라면, 경제 비중이 작아 당연히 기여도도 낮게 나왔을 것이라며, 지표가 나라별 도시체계 구조에 민감함을 언급함
- 프랑스 대표 발언
 - (칠레 대표 질문과 연계하여) 프랑스의 경우 대도시 성장 동력이 인구라고 했는데, 이는 대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어 소비하는 효과가 크다는 의미인지 되묻고, 혹시 대도시의 고용창출이 적고 소비만 많은 구조로 봐야 하는지 질문함
- OECD 사무국 발언
 - (앞서 답변을 재요약하며) 인구증가율 > 고용증가율이라는 뜻이지, 대도시에서 일자리가 안 늘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함. 다시 말해 해당 기간 대도시의 주민 1인당 고용자 수 비율이 약간 하락했지만, 전체 인구가 크게 늘어 총 GDP는 증가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부연설명함. 사무국 관계자는 예를 들어 파리 인구가 1천만에서 1천3백만으로 늘어나면 (설령 고용률 일정, 1인당 GDP 일정이라도) GDP 총량이 증가한 효과라고 쉽게 설명함. 향후 이러한 분해 결과는 인구구성 변화(예: 은퇴 인구 유입) 등과 연계해 추가 분석할 계획임
- ❖ (참고) 토의 요약:
 - 회원국들은 대도시 주도의 성장 패턴에 큰 관심을 보이며, 좋은 성장과 균형 성장 간의 과제에 대해 논의함
 - EU는 수도 vs. 비수도 대도시 격차를 지적하며 지역정책이 수도 편중을 어떻게 완화할지를 질문했고, OECD 사무국은 대도시 정의와 통계기법 한계를 설명하며 후속 연구를 약속함. 한국, 프랑스 등은 대도시 집중 억제와 지방 산업육성 전략을 공유하며, 노르웨이는 소수 도시 국가의 지표 해석 문제를 제기함
 - 전반적으로 대표들은 교역재 부문의 중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비교열위 지역을 위한 산업전환 지원과 혁신 확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함. 사무국은 이러한 논의들을 향후 권고안에 반영할 것이며, 내년 전문가 워크숍과 회원국 검토를 통해 정책 시사점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 ❖ (참고) 토론 질문1: 귀국에서는 교역가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지원 및 투자의 주요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 (한국) 한국은 교역가능 부문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국가의 핵심 정책 우선순위로 명확히 언급함. 특히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공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함. 대도시권과 비수도권을 연계하는 초광역 단위 전략을 통해, 교역가능 산업의 성장 기반을 지역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발언함
- ❖ (참고) 토론 질문2: 귀국에서는 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산업 부문과 접근 방식을 식별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 (한국) 한국정부는 5대 초광역권 전략을 통해 산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도권 과밀 구조를 완화하고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설명함.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바이오테크놀로지, 인공지능 등 고부가가치·기술집약적 산업을 핵심 전략 산업으로 명시함. 이러한 산업은 산업단지, 첨단 혁신파크, 기업 혁신단지 등에 집적하여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육성되고 있다고 설명함. 동시에 중소도시 및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생활여건 개선, 지역 산업 성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접근을 병행하고 있다고 언급함. 수도권에 대해서는 산업 총량 규제를 유지하여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되, R&D 및 고부가가치 활동은 지속적으로 허용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발언함

(9) [Item 9] 지방재정 및 다층적 거버넌스(MLG) 지표 (17:00-18:15)

- 공동 의장단(WPTI 의장 및 MLG 의장) 발언
 - 다층거버넌스(MLG) 전문가그룹과의 합동 세션을 열고, 지방재정 및 거버넌스 지표 개발을 논의함
 - 공동 의장단은 효과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재정분권 자료와 투자 거버넌스 지표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의제가 OECD 공공투자효율성 권고(2014) 이행 모니터링의 일환임을 강조함. 또한 WPTI 통계 작업과 MLG 정책네트워크 협력이 상호 보완적이라고 언급하며,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함
- OECD 사무국 발표
 - OECD가 구축·관리 중인 지방재정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함. 먼저 OECD 통계포털 내 출시된 지역·지방데이터 포털을 소개하며, 여기서 국가별 지방정부 재정수입·지출, 재정자립도, 지방공공지출의 기능별 구성 등의 지표를 손쉽게 조회·비교할 수 있다고 설명함. 이 데이터는 OECD 지역 데이터베이스 및 세계 지방정부 재정 관측소

(WOFI)의 자료를 통합한 것이며, 매년 업데이트됨

- 특히 최근 OECD는 회원국과 협력하여 REGOFI (Regional Government Finance) 및 MUNIFI (Municipal Finance) 데이터 수집을 강화하고 있음. 이는 국가 내부 주(州)·도 및 시·군 단위의 재정지표로, 아직 모든 국가를 다루지는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채워 나갈 계획임. 아울러 세계지방정부재정관측소(WOFI) 프로젝트를 통해 OECD 비회원국까지 범위를 넓혀, 약 120여 개국의 지방재정 정보를 축적하고 있음
- 사무국은 이러한 데이터가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 비교에 유용하여, 예컨대 지방정부 지출이 국가공공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방 자체수입 비율, 지방채무 규모 등을 국제 비교함으로써 각국의 재정분권도를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함
- 향후 계획으로, 최근 수집한 2022~23년 자료를 반영하여 포스트코로나 시기의 지방재정 동향을 분석 보고서로 발간할 예정임
- 포르투갈 대표 발언
 - 포르투갈은 자국 지방발전 지표체계로, 국가적으로 사회경제적 발전지수(앞서 터키와 유사)를 지방(州) 및 시 단위로 정기 산출하고 있으며, 이를 지역격차 해소 정책과 재정이전 공식에 활용하고 있음
 - 이 지수는 인구, 소득, 고용, 교육, 접근성 등 다수 지표로 구성되어 OECD 웰빙지표와 유사하며, 특히 지방재정 투입 대비 결과를 평가하는 데 유용함. 예를 들어 최근 수도 리스본 대도시권과 내륙 저개발 지역 간 재정투자 대비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하여, 인센티브 배분 기준을 조정한 사례를 소개함
 - 또한 포르투갈은 OECD MLG 권고를 참조해 지방 거버넌스 지표를 개선하고 있는데, 예컨대 지방 참여예산 실시율, 복수 지자체 간 공동사업 건수, EU 펀드 집행률 등을 모니터링한다고 소개함
- OECD 사무국 발언
 - OECD 각료이사회가 2014년 채택한 다층거버넌스 하 공공투자 효율성 권고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Compass 지표체계를 발표함. 이 Compass는 권고문의 3대 원칙(관할 조정, 역량강화, 정책평가)에 따라, 회원국이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지표 목록과 질적 설문으로 구성된 도구임
 - 예를 들어 중앙-지방협의기구 존재 유무, 지방 공무원 연수제도 운영 여부, 투자사업 사후평가 실시율 등 구체 항목이 있으며, 일부는 정량지표, 일부는 정성평가로 구성됨. 사무국은 2025년까지 Compass 지표를 시범 적용하여, 회원국들이 권고 이행 수준을 수치로 가시화하고 상호 학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대표단에는 추후 배포될 질문지에 응답해 줄 것을 요청함

❖ (참고) 토의 요약:

- 대표들은 지방재정 국제 비교데이터의 가치에 공감하면서, 데이터 품질과 활용에 대해 의견을 공유함
- 프랑스 국가대표는 단순 재정총량 지표 외에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방정부 재정이 얼마인지를 넘어서, 어떻게 쓰이고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고 설명함. 이는 Compass 접근과 일맥상통하며, OECD가 향후 성과 기반 재정지표 개발로 나아가길 제안함
- 미국 국가대표는 WOFI 데이터베이스 참여를 검토 중이라 밝히며, 미국도 주정부 재정 자료를 OECD와 공유하여 50개 주 간 재정분권 비교를 다른 연방국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함
- 폴란드 국가대표는 자국의 경우 EU 구조기금이 지방투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언급하며, OECD 지표가 EU 펀드의 지역별 투입 반영을 고려해줄 것을 제안함
- 몇몇 국가대표는 소규모 기초자치단체 재정 데이터 수집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이에 사무국은 회원국과 협력하여 표본조사 등을 통해 추계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함

● 공동 의장단 발언(마무리)

- 의장들은 논의를 종합하며, 지방재정 및 거버넌스 지표 개선이 evidence-based 지역 정책의 근간임을 재확인함
- 또한 WPTI와 MLG 전문가 그룹의 협업을 통해 통계 개발 → 정책 권고 → 피드백의 선순환을 이루자고 제안함
- 회원국에는 OECD의 데이터 수집 요청에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2026년 이후 작업계획에 반영하여 지방재정 데이터의 포괄성 및 유용성을 한층 높이겠다고 밝힘

❖ (참고) 토론 질문1: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지표에 기반한 진단 도구를 귀국의 정책결정 과정에 보다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특히 다층적 거버넌스)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OECD 사무국 및 다수 국가 대표는 국제 비교 가능 지표의 중요성, 기능적 지역 정의 (FUA, FRA)를 활용한 정책 분석 필요성, 다양한 데이터 소스의 결합을 통한 정책 분석 고도화를 강조함
- 특히, 기능적 지역은 행정경계를 넘어 실제 이동, 생활권을 반영함으로써, 국가-지역-지방 간 다층적 정책 분석에 더 적합한 단위로 논의됨

❖ (참고) 토론 질문2: 국가계정 및 재정통계에 관여하는 조직과 기관이 다수 존재하

는 상황에서, 지역 재정 데이터와 관련하여 OECD 내부 및 외부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메커니즘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예: REGOFI, MUNIFI, WOFI와 같은 기존 데이터베이스 및 OECD Local Data Portal과 같은 도구 지원 포함)

- 여러 국가 및 OECD 사무국은 데이터 소스 간 불일치 및 비교 가능성 문제, 모바일 데이터, 행정자료, 센서스 자료 간 정합성(validation) 필요, 장기 시계열 분석을 위해 공식적·지속적인 데이터 갱신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함
- 본 회의에서는 국제 비교 가능한 지표의 중요성과 기능적 지역 단위의 정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되었으나, Indicator Compass와 같은 공공투자 진단 도구의 정책 통합 방식이나 지역 재정 데이터베이스 간 협력 메커니즘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 다만, 데이터 품질 검증, 공통 정의, 방법론 공유, 지속적 협력 구조의 필요성은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향후 다층적 거버넌스와 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진단 도구 및 재정 데이터 협력 논의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문제의식은 확인됨

제38차 도시정책(Urban Policy)작업반 회의 (WPURB)

1. 회의명

- 제38차 도시정책작업반(Working Party on Urban Policy) 회의

2. 일시 및 장소

- 2025년 12월 2일 (화), 9:30 ~ 18:00
- OECD Room C

3. 참석자

- OECD 회원국
-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임현아 사무관
-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한준수 주무관
-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최희정 사무관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최아진 사무관
-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전봉경 부연구위원

4. 주요 주제

- 차기 의장단 임명 및 예산
- 거점(중개) 도시를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 도시 내 기회 접근성 확대 방안 : 세 가지 사례 연구 발표
- 혁신의 끊임없는 발전 사례 : 다른 도시의 아이디어 도입
- 국경(접경) 도시와 지역의 협력 사례

5. 주요 논의내용

- OECD 사무국 연구 발표 : 지역 기반 산업 정책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산업정책에 대한 정부 개입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공급망 취약성 확대에 따라 각국의 산업정책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증대됨
 - OECD 11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지역 기반 접근 방식은 지난 4년간 약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프랑스·한국·영국의 신규 산업 전략이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됨
 - 영국 비즈니스·무역부(DBT)는 정부의 새로운 산업 전략이 기업 투자 촉진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성 제고, 지역 성장 촉진, 탄소중립(넷제로) 달성, 도시 및 산업 클러스터 간 연계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거점 도시(중간 규모 도시)의 잠재력 활용 연구 발표
 - 중간 규모 도시는 인구 5만~25만 명 규모의 기능적 도시로 정의되며, 유럽연합 내 616개 도시 중 약 59%가 이에 해당함. 이들 중간 도시는 유럽 전체 도시 인구의 약 90%를 차지함
 - 중간 규모 도시는 국가 차원의 연계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대도시를 보완하는 한편 소도시 및 농촌 지역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함. 주요 기능으로는 비즈니스 활동, 지식 활동, 교통, 주거, 문화, 소매, 보건, 공공 서비스 등 8개 분야가 제시됨
 - 중간 규모 도시의 경제 성장 특성 분석 결과, 고부가가치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 경향을 보였으며, 국가별로 중간 도시 간 경제 성과의 편차는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시 간 격차가 점차 완화되는 추세로 분석됨
 - 6개 국가 사례 연구를 통해 다음의 5가지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됨
 - 첫째, 중간 도시의 이해관계자가 해당 도시의 강점과 성장 잠재력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장기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함. 둘째, 숙련 인력의 유출 문제로 인해 다수의 중간 도시에서 인구 감소 및 고령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 셋째, 중간 도시는 도시 기능 간 연결성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거점으로, 고속철도 등 교통 접근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넷째, 중간 도시를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재정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중간 도시와 주변 지방자치단체 간 비용과 편익의 균형을 고려한 재정 메커니즘 마련이 요구됨. 다섯째, 수평적 협력 강화를 위해 거버넌스 구조가 기능적 도시지역과 보다 일치하도록 도시공간 계획 및 투자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 특히, 특히 프랑스의 경우, 전체 인구의 약 11%가 중간 규모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거, 상업, 공공 공간, 교통, 인구, 녹지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정책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됨.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2018년부터 중간 도시 활성화 지

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구 1만~10만 명 규모의 24개 도시를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까지 120억 유로 이상을 투자함

제38차 비도시정책(Rural Policy)작업반 회의 (WPRP)

1. 회의명

- 제32차 농촌정책작업반(Working Party on Rural Policy) 회의

2. 일시 및 장소

- 2025년 12월 2일(화), 9:30 ~ 18:00
- OECD Room C

3. 참석자

- OECD 회원국
-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임현아 사무관
-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한준수 주무관
-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최희정 사무관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최아진 사무관

4. 주요 주제

- 2026년 사무국 지정
- RDPC 장관급 회의 성과, 향후 위임 및 업무계획·예산(PWB)
- 중남미에서 개최된 제14차 OECD 농촌개발회의 성과
- 국가 농촌 전략과 농촌정책검토의 시사점
- 경제적 축: 혁신 2.0, 산업정책, 농촌 - 도시 연계
- 사회적 축: 인구구조적 도전과 농촌 개발 및 고립 문제

- 환경적 축: 산림 및 농촌 개발 이니셔티브 개요
- 핵심 광물과 농촌 전환

5. 주요 논의내용

(1) [Item 1] 개회 (09:15-09:50)

- WPRP 의장(Daniel Baumgartner) 발언
 - 34차 WPRUR 회의를 개최하고 대표들을 환영하며 회의 아젠다와 전 회의 요록을 소개함
 - 참석자들의 동의로 아젠다와 지난 회의 기록을 승인함
- OECD 사무국(CFE 국장) 발언
 - 30OECD 지역 및 농촌발전과 관련한 최근 주요 활동과 향후 일정을 간략히 업데이트하며, 회의에서 다룰 의제들을 소개함

(2) [Item 2] 2026년 사무국 지정 (09:15-09:50)

- WPRP 의장 발언
 - OECD 규정에 따라 2026년도 WPRUR Bureau 구성을 진행함
 - 사무국이 사전에 접수한 의장단 후보들을 공유하고 대표들에게 승인 요청을 제안함. 참석자들은 현 의장단(의장: Daniel Baumgartner(스위스), 부의장단: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한국, 튀르키예)이 연임하는 2026년 Bureau 구성에 대해 합의로 승인함

(3) [Item 3] DPC 장관급 회의 성과, 향후 위임 및 업무계획·예산 (09:50-11:00)

- OECD 사무국 발언
 - 2025년 5월 OECD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각료회의 결과를 소개하고, 향후 5개년 WPRUR 의제(mandate) 및 프로그램예산(PWB)에 대한 논의 배경을 설명함
 - 글로벌 우선순위 변화(무역 갈등, 안보, 산업정책, 회복력 등)와 농촌 불만 증대 및 메가트렌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논의를 통해 각국의 농촌정책 주요 과제와 향후 작업반 활동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자 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발언

- 유럽연합의 시각에서 향후 농촌정책 방향을 제시함. COVID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식량안보가 최우선 과제로 부상하여 차기 EU 예산에서 농업·식량부문 예산을 핵심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과 농촌 회복력 제고, 위기 시 대응수단 강화에 정책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함
- 또한 유럽의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세대교체 전략을 수립하였고, 농촌지역 서비스·인프라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교육 등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음
- 아울러 차기 EU 농촌정책은 부문별 단편화 대신 통합적 계획수립을 지향하여, 단일 종합계획하에 다부문 정책을 연계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성장·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포용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함

- 일본 대표 발언

- 일본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촌 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수행함
- 이를 위해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 도시-농촌 연계를 통한 자원 활용, 지역 자산의 활용을 통해 농촌의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음. 또한 농촌 필수서비스 유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재해 대응력 향상을 중시함

- 노르웨이 대표 발언

- 노르웨이 농촌이 직면한 주요 도전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 노동력 부족, 녹색·디지털 전환 대응을 지목함
- 특히 357개 지방자치단체 중 인구 5천 미만이 절반에 달해 행정역량과 재정이 열악한 점을 지적하며, 지방 행정구조 개편이나 시군 간 협력을 통해 기본 공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과제임
- 농촌정책 우선순위로 전국 어디서나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 지속가능성을 강화하는 것이라 밝히고, 북부 노르웨이처럼 전략적 중요지역의 인구유지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다각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함
- 노르웨이는 향후 WPRUR 의제(mandate)에 이러한 농촌 회복력 강화(기후변화, 인구구조, 디지털전환 대응)와 농촌 브랜딩 개선 등이 반영되길 지지한다고 언급함

- 기타 발언

- 다수 국가 대표들이 자국의 농촌 현안과 정책 경험을 공유함. 국가대표들은 농촌의 서비스 접근성 개선, 혁신과 일자리창출, 다부처 협력 강화 등에 대한 자국 정책을 소개하며 향후 5개년 WPRUR 작업계획에 이러한 요소들을 반영할 것을 제안함
- (프랑스) 농촌지역의 지역 간 불균형과 인구소멸 문제를 지적하며 농촌을 문제뿐 아

나라 해결의 공간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함

- (네덜란드) 농촌주민의 불만 해소를 위해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통합적 농촌전략 수립이 필요함을 언급함

❖ (참고) 토론 질문1: 귀국의 농촌 개발에 있어 주요 도전과 기회는 무엇입니까?

- (에스토니아)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하며, 동부 접경지역은 안보 환경 변화로 추가적 취약성에 직면함. 동시에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적응 정책을 통해 인구감소를 관리하고 새로운 발전 모델을 모색할 기회가 존재함
- (스페인) 농촌 인구 유출과 청년층 부족, 기본 서비스 접근성 저하가 주요 도전과제임. 반면, 디지털화와 혁신,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농촌을 청년층에게 매력적인 공간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음
- (일본) 농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공동체 유지가 어려운 상황임. 한편, 농촌의 자연·인적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지역경제 모델과 도시-농촌 연계 강화가 기회로 인식됨
- (노르웨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역량 한계가 도전 과제임. 그러나 북부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되며,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 활성화가 국가적 기회로 인식됨
- (네덜란드) 농촌 주민의 불만과 복합위기의 영향이 도전 과제로 제시됨. 동시에 농촌이 기후중립, 식량안보, 바이오경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기회의 공간으로 인식됨
- (폴란드) 농업 구조조정과 도시화로 농촌 공동체의 사회적 연대가 약화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일부 농촌 지역이 경제적 충격을 받았으며, 이에 대응해 스마트 축소와 회복력 강화가 새로운 발전 방향으로 제시됨
- (포르투갈) 인구가 적은 지역의 서비스 유지 어려움과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위험이 주요 도전임. 반면 농업·관광 분야의 혁신과 디지털 전환을 통해 농촌 경제를 재활성화할 가능성이 있음
- (스웨덴) 현행 지역정책과 농촌정책 체계의 분절성이 도전 과제로 인식됨. 이를 장소기반 통합 정책으로 재편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이 정책 혁신의 기회로 제시됨
- (이탈리아) 청년층의 농촌 참여 부족과 소규모 지자체 난립으로 인한 행정 파편화가 문제로 제기됨. 동시에 농업의 다기능적 가치와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통해 농촌의 역할을 재정의할 기회가 있음
- (독일) 제조업 구조조정으로 일부 농촌지역의 일자리 감소가 발생하지만,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통해 농촌 경제의 질적 전환 가능성이 확인됨

❖ (참고) 토론 질문2: 귀국의 농촌 정책 또는 개혁의 주요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 (에스토니아) 인구 감소 적응 정책과 모든 정책에 농촌 관점을 반영하는 ‘농촌 렌즈 (rural lens)’ 강화가 우선순위임
 - (스페인) 농촌 세대교체, 청년 농업인 육성, 농촌 지역의 교통·의료·교육 등 필수 서비스 확충이 정책의 핵심으로 제시됨
 - (일본) 공공-민간 파트너십 강화, 도시-농촌 연계 확대, 농촌 지역의 회복력 제고가 주요 정책 우선순위로 제시됨
 - (노르웨이) 전국 어디서나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균형발전, 지방정부 구조 개편, 북부 지역 집중 지원이 핵심 과제임
 - (네덜란드) 녹색·사회·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농촌의 역할 강화와 농촌 주민의 정책 참여 확대가 우선순위로 제시됨
 - (폴란드) 농촌 지역의 전방위적 회복력 강화, 기후 및 지정학적 충격 대응, 식량안보와 지역 공급망 강화가 주요 과제임
 - (포르투갈) 인구가 적은 지역에 대한 차등 지원, 농촌 서비스 접근성 개선, 기후변화 적응 및 농촌 경제 현대화가 핵심 과제임
 - (스웨덴) 지역정책과 농촌정책의 통합적 재설계, 지방 재정조정 제도 개편, 민관 및 시민사회 협력 강화가 우선됨
 - (이탈리아) 지역 주민 참여 확대, 지방정부 행정 역량 강화, 농촌 정책의 사후 평가 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제시됨
 - (독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농촌지역 지원, 균등한 생활여건 확보,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 핵심 정책 방향임
- ❖ (참고) 토론 질문3: 향후 5개년 WPRUR 의제와 사업계획 및 예산을 위한 주요 정책적 제안 또는 투입 사항은 무엇입니까?
- (에스토니아)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 전략과 농촌 관점의 범정부 정책 통합을 차기 WPRUR 핵심 과제로 반영할 것을 제안함
 - (스페인) 청년층과 세대교체, 농촌 필수 서비스 개선, 농업과 농촌정책 간 연계 강화를 WPRUR 주요 의제로 포함할 것을 제안함
 - (일본) 인구 활력 제고, PPP 강화, 도시-농촌 연계, 재해 대응을 포함한 농촌 회복력 강화를 차기 주요 의제에 반영할 것을 지지함
 - (노르웨이)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농촌 회복력을 WPRUR의 핵심 주제로 설정할 것을 제안함
 - (네덜란드) 농촌의 잠재력과 강점에 초점을 맞추고, 농촌 불만 완화와 회복력 강화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것을 제안함

- (폴란드) 스마트 축소, 농촌 제조업, 식량 공급망 강화, 지정학적 충격 대응 등 다양한 발전 단계에 맞는 유연한 의제 구성을 요청함
- (포르투갈) 인구감소 대응, 농촌 서비스 개선, 기후변화 적응,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 농촌 산업 혁신을 WPRUR 주요 의제로 제안함
- (스웨덴) 다층적 거버넌스, 민관·시민사회 협력 강화, 개념 정의의 명확화를 차기 WPRUR 전략 문서에 반영할 것을 요청함
- (이탈리아) 지역 참여 확대, 지방정부 협력 강화, 정책 평가 기능을 WPRUR 주요 의제에 명시적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함
- (독일) 농촌 경제 회복력과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경험 공유가 WPRUR의 주요 역할이 되어야 함을 시사함

(4) [Item 4] 중남미에서 개최된 제14차 OECD 농촌개발회의의 성과 (11:30-12:00)

- WPRP 의장 발언
 - 11월 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OECD 농촌개발회의의 주요 결과를 논의하는 자리임을 언급하고, 동 회의가 OECD 농촌정책 작업반 논의를 라틴아메리카로 확장한 첫 사례라는 점을 강조함
 - 회의 주제인 “농촌-도시 연계: 지속가능발전 경로”를 상기하며, 이번 세션을 통해 해당 회의의 시사점을 공유할 것을 요청함
- OECD 사무국 발언
 - 브라질 회의의 특징인 다양성과 포용성을 소개함. 구체적으로, 30여개국 대표 및 각 계 인사가 참여하여 라틴아메리카 맥락의 농촌변혁과 회복력, 형평성 이슈를 논의함
 - 예를 들어, 회의에서 브라질의 파벨라 vs. 아마조니아 원주민 지역 간 불평등 경험, 가나와 브라질 원주민대표 간 “원주민” 개념 논쟁 등 풍부한 대화가 이루어져 농촌-도시 연계의 복잡성을 새롭게 조명함
 - 또한 회의에서 논의된 혁신 사례들을 소개하며, 인도 대표는 도시-농촌 송금 및 연계 강화, 코스타리카 대표는 농촌-도시 통합계획, 핀란드 대표는 산림교육을 통한 주민 인식 제고,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는 열대경제 개념의 활용 가능성을 공유함
 - 아울러 글로벌 농업포럼에서 청년농업인들이 제기한 디지털 혁신, 토지 접근성, 농촌 서비스 개선 등의 이슈가 회의 논의와 궤를 같이하며, 농촌지역에서 인구유지와 매력 증진을 위해 이러한 요소들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고 소개함
- 브라질 대표(리우 주 정부) 발언
 - 브라질 현지 공동주최 측을 대표하여 회의 경험을 공유함. 구체적으로, 리우 주 환경

차관(Anna Osti)은 라틴아메리카 최초의 OECD 농촌회의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층 토론을 펼친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지방정부(주정부)의 역할을 부각시킴

- 농촌과 도시를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고 동일 생활권으로 인식해야 하며, 지방정부가 현장에 밀착해 양 영역의 연계를 강화하는 전략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함. “농촌과 도시 사이에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구조로 보아야 한다”는 회의 교훈을 소개하며, 이를 위해 다층적 거버넌스와 지역공동체 참여가 중요함을 강조함
- 또한 이번 회의에서 원주민 미래를 위한 자원조달, 물-산림을 통한 회복력 강화, 식품시스템의 지방화 등 다양한 세션들이 진행되었음을 소개하고, 특히 각 세션에서 지역정부와 현장 사례가 중심이 되어 실질적 논의를 이끈 점을 높이 평가함

● WPRP 의장 발언

- 브라질 회의 핵심 주제들(농촌-도시 연계, 다층 거버넌스, 회복력 등)이 이미 우리 작업반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온 이슈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라틴아메리카의 경험을 통해 얻은 통찰이 각국 정책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함. 아울러 회의 준비를 위해 애쓴 브라질 현지팀과 OECD 사무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함

❖ (참고) 토론 질문1: 회의 주제를 바탕으로, 귀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농촌-도시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어떠한 실천적 접근을 활용할 수 있는가?

- 이번 회의에서 다양한 국가 사례를 통해 농촌-도시 간의 상호 이익적인 연계 방안들이 논의됨. 예를 들어, 인도에서는 대도시 주변의 교외지역(Peri-urban) 농지를 활용하여 “농장에서 식탁까지” 식품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고 있음
- 지역 주도의 이니셔티브도 강조되었는데, 일부 국가는 농촌 주민과 도시 소비자를 잇는 푸드 카운실(지역 먹거리 협의체) 등 커뮤니티 주도형 사업을 통해 지역 식품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노력함
- 또한 디지털 기술과 혁신을 활용하여 농촌-도시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는데, 예를 들어 인공지능(AI)을 통해 농민들이 정보에 접근하고 고령화로 인한 지식 손실을 보완하는 등 농촌과 도시를 연결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방정부와 지역 행위자의 참여도 중요한데, 물 관리나 식량 안보처럼 영토 기반 문제는 지방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부각됨
- 즉, 정책입안자는 도시와 농촌이 쌍방향으로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임을 인식하고, 지역 주도의 혁신(예: 지역 먹거리 네트워크), 디지털 기술 활용,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같은 접근법을 통해 농촌-도시 연계를 강화하면서 지역 불균형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참고) 토론 질문2: 지속가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농촌과 도시 행위자 간에는 어떤 유형의 파트너십이 효과적이며, 정부는 이러한 협력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가?
 - 농촌-도시 간 파트너십으로 지역정부-민간기업 협력과 커뮤니티 간 협력 등 다양한 형태가 논의됨
 - 예를 들어, 일본의 사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이 손잡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산림 탄소 크레딧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하는 이니셔티브가 언급됨. 이러한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농촌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노력함
 - 또한 농촌 주민과 도시 기업이 연계하여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도 있는데, 일본 우정공사가 지역 NPO 및 지자체 지원을 받아 농촌 주민들에게 생활필수품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좋은 예로 소개됨
 - 정부는 이런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과 플랫폼 제공이 필요함. 예를 들어, 정부가 농촌과 도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모아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지역투자를 유도할 수 있음
 - 회의에서도 도시와 농촌이 협력하여 공동의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것이 강조되었는데, 특히 식품, 관광, 임업 등 분야에서 도시의 자본·기술과 농촌의 자원·노동을 연결하는 파트너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논의됨
 - 또한 각 국 정부의 노력을 통해 이러한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다부처 협력체계 구축, 성공 사례 공유, 민관 공동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참고) 토론 질문3: 균형 잡힌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과 도시 전반에 걸친 계획과 투자를 조정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 또는 거버넌스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 본 회의에서 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은 없었음. 단, 토론 전반에 흐르는 공통된 인식은 농촌과 도시를 아우르는 다층적 거버넌스의 중요성이었음. 효과적인 조율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멀티 스테이크홀더 거버넌스 구조와 영토 단위의 통합계획 수립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5) [Item 5] 국가 농촌 전략과 농촌정책검토의 시사점 (12:00-13:00)

- OECD 사무국 발표
 - 최근 완료된 아일랜드 농촌정책 리뷰의 주요 결과와 권고사항을 보고함

- OECD 농촌정책 원칙과 웰빙 프레임워크를 적용한 평가를 통해, 아일랜드의 전국 농촌전략 Our Rural Future가 청년층 인구 증가와 낮은 고령부양비 등 인구구조상의 이점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출발점을 갖고 있음을 확인함
- 특히 지난 10년간 아일랜드 농촌지역 인구는 평균 3% 가까이 증가하고 65세 이상 비중도 20% 수준으로 OECD 내 비교적 낮은 편인데, 이는 높은 출산율과 이민자들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 다만 농촌지역 내부의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고, 보건서비스 만족도나 성인교육 참여율 등 일부 삶의 질 지표는 도시 대비 낮은 수준이어서 개선이 필요함
- 정책 측면에서는 아일랜드 정부가 OECD 농촌정책 11개 원칙을 거의 최초로 체계적으로 적용하여 범정부적 접근을 시도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같은 홀리스틱 거버넌스가 다른 국가에도 시사점을 준다고 강조함
- 종합하여, 각국이 농촌전략 수립시 참고할 요소로 ①농촌 불만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조율 강화, ②최신 인구·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농촌전략의 주기적 업데이트, ③상향식 참여 거버넌스 확대 등을 제안함
- 아일랜드 대표 발언
 - OECD의 심층적인 농촌정책 연구에 대해, 자국의 차기 농촌전략 수립에 유용한 근거와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함
 - 아일랜드는 연구 과정에서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역 이해관계자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포용적 절차 자체가 정책 개선에 기여하는 중요한 학습 기회였다고 평가함
 - 또한 연구 결과에 따라 농촌정책 추진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데이터를 보완하는 등 후속 조치를 모색 중이라고 설명함
- 네덜란드 대표 발언
 - 네덜란드는 현재 국가 농촌전략 수립을 준비 중이며, 이번 아일랜드 연구에 피어 검토자로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배운 점을 소개함
 - 네덜란드 농촌은 풍요로운 경관과 혁신적인 농업부문을 자랑하지만, 최근 미래지향적 농업 전환(지속가능성), 자연환경 복원(질소 등)과 더불어 농촌서비스 품질 저하, 농촌 주민 불만 등 복합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함
 - 이러한 도전 속에서 농촌의 강점을 유지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려면 농촌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과 증거기반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OECD 농촌정책 리뷰가 유용한 도구임을 확인했음을 강조함
 - 특히 아일랜드 리뷰에 참여하면서 국가-지역-지방 모든 수준의 이해관계자 협력의 중요성과, 타 회원국의 다양한 정책사례로부터 학습할 수 있었음

- 네덜란드는 OECD와 협력하여 자국 농촌정책을 종합 점검하고 행동계획을 마련하는 프로젝트를 착수했으며, 이를 통해 그간 부문별로 분절되었던 농촌정책을 통합하고 농촌 삶의 질 지표와 농촌 불만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할 계획이라고 소개함
- 아울러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활력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 지역 역량 강화, 주민 참여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OECD 리뷰를 통해 도출될 정책권고를 향후 출범할 새 정부에도 적극 활용할 것임을 소개함
- 미국 대표 발언
 - 미국의 농촌번영위원회 (America's Rural Future) 활동과 연계하여 OECD 농촌정책 리뷰의 가치를 평가함
 -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데이터 기반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OECD 리뷰가 농촌지역 웰빙수준 측정과 격차 진단에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고 언급함. 또한 미국은 약 10년 전에 OECD 농촌정책 리뷰에 참여한 바 있는데, 그 경험이 현재 진행 중인 국가 농촌전략 논의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하며, 특히 농촌데이터 플랫폼 구축, 지역간 협력 추진, 거버넌스 개선 등에서 OECD 분석을 참조하고 있다고 소개함
- ❖ (참고) 토론 질문1: 여러 국가에서 농촌 지역의 불만이 표출되며, 보다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정책 대응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귀국의 경우 농촌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농촌 지역의 성공 사례를 제시할 수 있습니까?
 - 여러 나라들이 농촌 주민들의 불만과 좌절감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들을 공유함. 많은 국가에서 농촌 불만이 늘고 있다는 증거가 있으며(네덜란드,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이를 전략적 정책 개편과 투자로 대응하여 농촌 발전을 이끌어냄(아일랜드 등)
 - (네덜란드) 자국 농촌 지역이 서비스 품질 저하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함. 특히 농촌 지역 주민들은 필수 서비스 접근성과 삶의 질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고 있지만, 이러한 불만의 구체적 원인과 지역별 차이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와 이해가 부족한 실정임
 - (미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농촌 주민들은 자신들의 현실과 이익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향이 매우 뚜렷함
 - (아일랜드) 국가 농촌정책은 OECD 농촌정책 원칙을 토대로 수립한 종합 전략이며, 농촌 의제가 정부와 대중에게 더 가시화되고 부처 간 협력이 촉진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함
- ❖ (참고) 토론 질문2: 각국이 국가 농촌전략을 수정하거나 수립할 때, 현재의 인구학적, 경제적, 환경적 현실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 토론자들은 현대 농촌 현실을 반영하는 전략 수립을 위해 다음 핵심 요소를 강조함

- 첫째, 객관적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한 전략이 필요함. 네덜란드 대표도 언급했듯이, 농촌 정책을 제대로 설계하려면 농촌 지역의 사회경제적 상태, 주민 행복도, 불만 요인 등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통계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 둘째, 인구학적 변화를 전략에 적극 반영해야 함. 많은 농촌 지역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겪고 있으므로, 전략 수립 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서비스 수요 변화를 고려하고 대비해야 함. 예를 들어, 스페인의 농촌전략은 적응(adaptation) 중심으로의 전환을 강조하여,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에 맞게 서비스 공급 방식과 지역개발 방식을 조정하고 있음
 - 셋째, 경제구조의 변화와 다변화가 핵심요소임. 농촌 경제는 전통적으로 농업에 치우쳐 있었지만, 이제는 중소기업, 관광, 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어, 전략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기회들을 반영해야 함
 - 넷째, 환경 및 기후 요인을 통합해야함. 농촌 지역은 기후변화의 영향(가뭄, 홍수 등)에 취약하므로 환경 지속가능성과 기후 회복력 목표를 주요 전략으로 삼아야 함
 -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중앙 주도의 하향식 접근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역 주민의 참여(bottom-up)를 보장하여 전략이 현장의 현실과 요구를 제대로 담보하도록 해야 함. 즉, 근거 기반의 진단, 인구/경제/환경 변화 반영, 다부처 및 다층적 협력체계가 국가 농촌전략의 핵심 고려사항으로 제시됨
- ❖ (참고) 토론 질문3: 많은 국가에서 여전히 국가 농촌 정책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립되며 지역 및 농촌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귀국에서는 농촌 발전 전략이 더욱 상향식(bottom-up)으로 변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향식(top-down)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경향의 배경에는 어떤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까?
- (아일랜드) 과거에는 농촌 정책이 중앙에서 주도되었지만, 지난 수십 년간 점진적으로 농촌 개발을 농업 정책에서 분리하여 보다 포괄적인 농촌 발전 담론을 키워왔고, 2016년 총선 공약을 통해 농촌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등 정치적 상향식 변화가 나타남
 - 아일랜드 대표는 이러한 변화를 이끈 요인으로 정당들이 농촌 유권자의 지지 없이는 집권이 어려운 현실을 들며, 정치권의 관심 증대와 농촌 주민의 요구가 함께 맞물린 완벽한 계기였다고 설명함. 즉, 상향식과 하향식 요소가 혼합된 형태로 농촌 전략이 추진됨
 - 다른 국가들도 농촌 정책에 지역 목소리를 더 반영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네덜란드는 새로운 농촌정책 수립을 위해 지역 및 지방정부, 주민이 참여하는 포괄적 검토 작업을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농촌정책을 보다 하향식으로 개선하고자 노력함
 - 하지만 아직도 일부 국가는 중앙정부 주도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곳도 있어, 전반적으로 농촌정책 거버넌스는 점진적으로 더 개방적·참여적으로 변모하고 있음.

이러한 추세의 배경에는 농촌 불만 증가로 정책의 정당성 제고 필요성,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정책 효율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OECD 등의 국제 기구에서 강조하는 다층 거버넌스 원칙 등이 작용하고 있음

(6) [Item 6] 경제적 축: 혁신 2.0, 산업정책, 농촌-도시 연계 (14:00-15:00)

- OECD 사무국 발표
 - 최근 OECD에서 수행한 농촌혁신 향상(Enhancing Rural Innovation)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화와 AI 진전에 따른 농촌지역의 기회와 과제를 발표함
 -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농촌의 생활수준 유지를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OECD 연구를 통해 확인된 농촌혁신의 이질성을 소개함
 - 캐나다의 녹색기술 혁신, 일본의 고령층 인력 활용 혁신, 스코틀랜드의 사회혁신, 스위스의 지역혁신 시스템 구축, 미국의 농촌 기업 규모화 지원 등 사례별로 매우 다양한 형태의 혁신이 나타났다고 설명함
 -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6대 정책분야(toolkit)를 정리함. ①디지털 인프라와 인적자본 등 전제조건 구축, ②농촌 특화 혁신정책 설계(소규모 기업 지원 등), ③네트워크와 연계 강화(농촌 간 및 농촌-도시 연계, 국제연계 등), ④지역실정에 맞는 실험과 사회혁신 촉진(리빙랩 등 실패를 허용하는 문화), ⑤서비스 접근성 개선을 통한 기업환경 조성(원스톱샵, 이동서비스 등), ⑥다층 거버넌스를 통한 혁신협력 촉진을 제시함
 -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격차를 언급하며, 농촌혁신 생태계를 이해하고 정책성과를 평가하려면 지역 단위의 세분화된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각국이 농촌데이터 확충에 힘쓸 것을 당부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표 발언
 - EU 집행위 공동연구센터가 도시화 수준에 따른 혁신 지표를 새롭게 측정하는 농촌혁신 지표 개발 작업을 소개함
 - 분석 결과 중 하나로 농촌지역의 혁신활동이 도시보다 약 5%p 낮은 수준이라는 정량적 수치를 예시로 제시하며, 이처럼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는 것이 농촌 혁신격차 해소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함
 - 또한 혁신지표 개발을 위해 일관된 정의와 방법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각국이 공통 기준으로 농촌 혁신을 측정하면 정책효과 비교와 상호학습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콜롬비아 대표 발언
 - 콜롬비아의 농촌기업가정신 진흥 경험을 공유하며 이번 의제에 대한 견해를 표명함

- 이 대표는 콜롬비아 정부가 농촌지역 창업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특히 원격지 주민들의 혁신역량 강화와 지역 간 연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함
- 이어 농촌혁신은 각국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사회혁신과 적정기술 개발 등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며, 국제적으로 이러한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임
- 기타 발언
 - 토론에서 다수 대표들이 농촌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조건과 정책수단에 대해 질의하고 의견을 개진함
 - 생산적 기업가활동의 정의와 농촌 맥락에서 비생산적 기업활동과의 구분을 질문하였고(예: 스타트업 성과 측정 관련 질의), 농촌지역의 혁신 네트워크 구축, 도시-농촌 파트너십 및 민관협력(PPP) 확대 등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향후 해당 분야에서 회원국 간 지속적인 경험교류를 희망함
- ❖ (참고) 토론 질문1: 농촌-도시 연계가 어떻게 농촌 발전을 지원할 수 있으며, 중간 규모 도시가 인근 농촌 지역과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하여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어떤 실질적인 접근법이 도움이 될까요?
 - 본 회의에서 소개된 루마니아 사례 등 중간도시와 주변 농촌 간 협력 연구에 따르면, 중간 거점 도시의 적극적 역할이 농촌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만 상호 협력적 파트너십이 중요함
 - 예를 들어, 한 중간 도시는 주도적으로 나서서 농촌 지역 리더들이 자금과 지원에 접근하도록 도왔고,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여 농촌 주민들의 이동과 물류를 향상시킴. 이로써 농촌의 경제 기회(일자리, 시장 접근)가 확대되고 주민 편의가 증진됨
 -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농촌이 도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문제도 지적되었는데, 도시가 많은 역할을 맡다 보니 일부 농촌에서는 스스로 주도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과도한 의존 현상이 나타남
 - 따라서 성공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도시와 농촌 간 역할 균형이 필요하며, 농촌 지역도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함
 - 상생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인데, 도시가 지식과 자원을 제공하는 대신 농촌은 관광지·농산물 공급지 등 도시가 얻을 수 없는 가치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필요함
 - 실제 사례에서도 광산으로 유명한 핀란드의 키틸라(Kittilä)와 솔카모(Sotkamo) 지역이 광업과 관광산업을 병행 발전시켜, 풍부한 일자리와 소득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사례가 소개됨
 - 마지막으로, 협력 방안으로는 도시-농촌 공동위원회 구성, 공동 전략수립, 프로젝트

공동투자 등이 거론되었으며, 무엇보다 공동 설계를 통해 도시와 농촌이 함께 해결책을 만들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됨

- ❖ **(참고) 토론 질문2:** 각국은 농촌 혁신 생태계를 보다 잘 이해하고 근거 기반의 농촌 개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데이터 확보와 활용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 모든 참석자들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강조함. 정확한 데이터 확보와 활용은 농촌 혁신 정책의 출발점으로 지목됨
 - 첫째, 기존에 국가 단위로 집계되던 혁신 관련 지표들을 지역별·농촌별로 세분화해야 함. EU에서는 도시화 정도에 따른 지역분류를 활용해 농촌 지역의 R&D 투자, 특허 출원, 신생기업 동향 등을 별도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농촌 혁신 수준이 평균적으로는 낮아도 일부 농촌 지역은 매우 높은 혁신 성과를 내는 등 편차가 크다는 통찰을 얻음. 이러한 세분 데이터는 어떤 농촌 지역이 잠재력이 있는지 파악하는 데 유용함
 - 둘째, 새로운 조사와 데이터 수집이 필요함. 예를 들어 EU는 농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전용 혁신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도시 기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곧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임. 이처럼 농촌 맞춤형 조사를 도입하면 농촌 혁신활동의 장애 요인, 지원 수요를 정확히 알 수 있음
 - 셋째, 다원적 데이터 활용이 권장됨. 폴란드의 경우 중앙통계청 자료뿐 아니라 복합 지표(예: 농촌 삶의 질 지수)와 주관적 설문을 결합하여 농촌 지역 현실을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예컨대 농촌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해 소득, 서비스, 환경, 주거, 주관적 만족도를 통합적으로 측정하고 1~2년마다 업데이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공유하여 정책입안자와 지역 이해관계자 모두가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함. 종합하면, 지역 단위 데이터 세분화, 농촌 대상 신규 조사, 정량·정성 지표의 결합 및 데이터 활용역량 강화가 주요 개선방안으로 제시됨
- ❖ **(참고) 토론 질문3:** 귀국의 국가 혁신 정책은 어느 정도까지 농촌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으며, 농촌의 필요와 기회를 보다 반영하도록 이러한 정책에 어떤 변화를 주어야 할까요?
 - 전반적으로 논의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가 혁신정책은 아직 농촌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첫째로, 정책의 지향점과 설계를 재고해야함. 혁신 정책이 대개 첨단산업이나 도시 중심으로 짜여 있는데, 농촌에서는 작은 기업과 창업가들이 혁신의 주체이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 중요함. 예를 들어, 농촌의 영세기업도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 혁신지원금이나 현장 기술자문 서비스 등이 필요함

- 둘째, 기초 인프라와 인적자본 투자가 선행되어야 함. 디지털 혁신 시대에 디지털 격차 해소는 필수이므로, 농촌 지역에 광대역 인터넷 등 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 국가 혁신 전략에 포함되어야 함
- 셋째, 네트워크와 연결성 강화가 필요함. 농촌은 지리적 한계로 혁신 자원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지역 간, 도시-농촌 간 연계망을 구축하여 혁신 협력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예를 들어, 농촌 기업과 도시 연구기관을 연결하는 클러스터 프로그램이나, 농촌 혁신가들 간 협동 네트워크 구축 등이 거론됨
- 넷째, 유연하고 실험적인 접근이 강조됨. 농촌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험해볼 리빙랩(living lab)이나 사회혁신 실험 등을 통해 현장에 맞는 혁신모델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실패를 용인하는 실험 문화와 지원이 필요함
- 다섯째, 접근성 제고를 위한 행정 개선이 필요함. 많은 농촌의 소규모 혁신주체들은 복잡한 지원 절차에 어려움을 겪으므로, 원스톱 서비스나 찾아가는 지원(모바일 창구) 등을 도입해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 변화가 요구됨
- 마지막으로, 다층 거버넌스 조정이 필요함. 중앙-지방 간 혁신정책을 조율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농촌에서 신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하기 쉽게 만들어야 함. 이런 변화들이 이루어진다면 국가 혁신정책이 농촌의 필요와 기회를 더욱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논의됨

(7) [Item 7] 사회적 축: 인구구조적 도전과 농촌 개발 및 고립 문제 (15:00-16:00)

- OECD 사무국 발표
 - OECD가 새로 착수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연구와 섬지역 사례연구를 소개함
 - 스페인과 루마니아의 농촌인구 감소 대응정책을 심층분석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스웨덴·크로아티아·그리스의 섬경제 연구도 병행하고 있음
 - OECD는 농촌지역에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전국 평균보다 심각하게 진행되며(특히 외곽 농촌과 중소도시 주변 농촌), 섬지역 역시 지리적 고립으로 인해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함
 - 발표자는 스페인의 경우 2013~2023년 국가 총인구는 3% 증가하였으나 지역별 격차가 커서 일부 농촌지역은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전국적으로 20%를 넘어 2060년경 30%에 달할 전망이며 농촌에서 고령화가 특히 심화되고 있다고 언급함
 - 루마니아의 일부 농촌지역은 지난 10년간 인구가 연 0.5%씩 감소하여 누적 5% 이상 줄어드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고 부연하면서, 이러한 배경에서 두 나라의 정책 노력을 평가·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섬경제 연구에 대해, 도서지역은 낮은 접근성

과 규모의 제약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양질의 서비스 유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함

- OECD는 섬지역 사례를 통해 고립 극복을 위한 정책수단과 지역 간 연대 전략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 끝으로 이 두 프로젝트 모두 이제 막 시작 단계이므로, 회원국에서 피어 리뷰어 참여를 환영한다고 소개함

● 스페인 대표 발표

- 스페인의 인구소멸 위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정부의 대응책을 소개함
- 이 대표는 스페인 영토의 상당 부분이 인구밀도 8명/km² 이하의 심각한 과소지역으로 분류되며,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획단적인 국가전략을 가동 중이라고 소개함
- 특히 스페인 정부는 농촌인구 5000만 명을 2030년까지 유지·활성화하기 위한 “30×30 계획”을 수립하여 농촌 분야 130여 개 정책과제를 추진 중이며, 올해 국가기구로서 인구변화 관측소(Observatorio Demográfico)를 출범시켰다고 설명함
- 이 관측소는 전국을 기능지역 단위로 구분해 인구·사회경제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각 지역별 맞춤형 정책평가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부연설명함
- 또한 스페인 대표는 농촌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귀농·청년유입 지원, 원격근무 인센티브, 농촌 여성 참여 확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OECD 연구를 통해 국제 비교관점에서 정책효과를 검토받길 기대한다고 언급함

● 루마니아 대표 발표

- 루마니아의 농촌지역 인구유출과 저출산 문제를 강조하고, OECD와 협력하여 종합대응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힘. 루마니아 농촌 인구가 지난 10년간 큰 폭으로 감소하여 일부 지역은 인구의 5분의 1이 줄어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전통적 인구유지 정책(이주 억제 등)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함
- 따라서 중앙·지방정부가 적응(adaptation) 전략에도 초점을 맞춰, 남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경제활동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소개함
- 아울러 OECD 프로젝트를 통해 인구변화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스페인 등과 사례를 비교하면서 정책수단의 효과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언급함

● 일본 대표 발표

- OECD 섬경제 연구 발표 내용 중 일부 섬지역의 인구증가 언급에 대해 질의함
- 일본 대표는 일본의 섬들은 인구가 급감하고 고령화가 극심한데 OECD 자료에서 일부 섬지역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이유를 질문하며, 각국 사례의 차이를 설명해줄 것을 요청함

- 동시에 일본의 사례를 공유하며, 도서지역의 경우 인구유지에 성공한 사례보다 심각한 공동화 사례가 많으므로, 정책적으로 섬 거주 여건 개선, 교통·통신 인프라 확충, 관광 및 특산업 육성 등이 시급하다고 덧붙임
- 불가리아 대표 발표
 - 대부분 국가의 농촌인구 정책이 인구감소 완화에 집중되어왔음을 지적하며, 적응정책의 중요성을 제기함
 - 불가리아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 급속한 농촌 인구 감소를 겪고 있지만 단기간 내 도시로 인구가 몰리는 추세를 완전히 뒤집기 어렵다고 언급함
 - 따라서 교육·의료서비스의 혁신적 제공방식 도입, 농촌 고령인구 지원체계 구축, 스마트마을 조성 등 적응 전략을 병행해야 함을 강조하며, 회원국 간에 이러한 적응정책의 모범사례를 공유할 것을 제안함
- 기타 발언
 - 다수 대표들이 농촌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 관심을 보임
 - 그리스 대표는 자국의 도서지역 경험을 언급하며 교통접근성 향상, 관광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의 노력을 소개했고, 스웨덴·크로아티아 대표도 각국 섬지역 정책을 공유하며 OECD 연구에 협력할 뜻을 표명함
 - 참석자들은 인구감소 대응에 있어 다부처 협력, 지역주민 참여, 그리고 국제 비교연구가 중요하다는 데 동의함
- ❖ (참고) 토론 질문1: 많은 농촌 지역들이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지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농촌 지역이나 곳들도 있습니까?
 - 발표된 OECD 연구에 따르면 일부 농촌 지역은 인구 증가를 보이는 곳도 존재함. 실제로 OECD 회원국 중 약 14개 국가에서는 농촌 지역의 인구 및 경제성장률이 국가 평균보다 빠른 사례가 관찰됨. 이는 대도시 근교의 농촌이나 특정 산업으로 번영하는 지역(예: 관광지나 광산 붐 지역) 등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됨
 - 예를 들어, 그리스의 키오스 섬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 인구가 13% 증가한 사례가 소개되었는데, 이는 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경제활동과 이주 유입으로 성장이 이루어진 경우임.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농촌으로의 역이주 현상이나 원격근무 확산 등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마을들이 보고됨
 - 즉, 전반적 추세는 농촌 인구 감소이지만, 지역적 조건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거나 안정된 농촌 지역도 있다는 점이 강조됨. 이러한 사례를 면밀히 연구하여 성공 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임
- ❖ (참고) 토론 질문2: 농촌 지역의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전통적인 정책들은 그

동안 인구 감소 억제 노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귀국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구 감소에 적응하거나 두 접근을 병행하는 정책이 있습니까?

- 이 질문에 대해 여러 나라 대표들은 인구감소 대응 전략에서 “완화(감소 억제)”와 “적응”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 OECD 사무국은 농촌 인구감소에 대응할 때 감소를 늦추는 정책과, 불가피한 감소에 적응하는 정책을 조합해야 한다는 점을 주요 권고사항으로 제시함
- 실제 사례로 스페인은 최근 농촌전략을 수립하면서 적응적 접근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단순히 인구유지 대책(예: 인센티브로 사람 끌어들이기)뿐 아니라 서비스 공급방식을 인구 구조에 맞게 재편하는 등 “인구감소 수용·적응” 전략을 병행함
- 또한 회의에서는 각국이 서로 적응 사례를 공유하는 노력도 확인됨. 예를 들어 프랑스와 이탈리아 대표는 농촌 인구 감소에 대응해 학교 통폐합 및 재편, 거점 서비스 센터 구축 등 지역 사회가 인구 감소에 적응해나간 사례들을 모은 모범사례집을 참고할 것을 제안함. 이는 농촌의 현실에 맞춰 교육·보건·교통 등의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적응 정책중 일부임
- 요약하면, 전통적 인구유지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귀국에서도 인구 구조 변화에 “적응”하는 정책(예를 들어, 지역 의료서비스의 규모 조정, 커뮤니티 케어 도입 등)을 기존 인구유지 노력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제로 이러한 적응 전략을 국가 정책에 포함하는 나라들이 증가하고 있음

❖ **(참고) 토론 질문3:** 섬 지역 경제는 고립성과 원격지라는 도전에 직면하며, 이는 OECD의 많은 원격지 지역이 겪는 문제와 유사합니다. 섬 지역 및 원격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섬 및 오지 지역의 발전 전략에 대해서는 단순한 인구증가 목표보다는 지역의 내실을 다지는 방향이 효과적이라는 논의가 이루어짐
- 우선, 섬 지역의 경우 인구를 억지로 늘리기보다 생산성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실제로 섬 지역은 관광 등 계절산업에 편중되어 경제 변동성이 크고 생산성이 낮은 문제를 겪는데, 그리스 정부 대표는 섬 지역 경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광 의존도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산업과 고부가가치 일자리로 다변화하는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함
- 다음으로, 접근성과 연결성 개선이 핵심 대응으로 제시됨. 섬이나 산간 오지는 물류비와 이동비용이 높아 발전이 어렵기 때문에, 교통 인프라 확충(예: 페리 증편, 도로/항공 보조)과 디지털 인프라 구축(고속통신망)은 그 자체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 세 번째로, 인적자본 투자와 사회적 포용이 강조됨. 섬 지역 청년과 주민들에게 기술 교육과 원격근무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교육·의료 서비스를 보장함으로써 지역에

살면서도 누릴 것은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임. 또한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를 통해 스스로 발전전략을 주도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함

- 네 번째, 행정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섬과 오지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기구나 특별법이 효과적일 수 있음. 예를 들어, 어떤 나라는 섬 발전만을 전담하는 정부 조직을 신설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
- 끝으로, 환경적 제약도 크므로 재생에너지 도입 지원, 스마트 섬 프로젝트 등으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섬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중요함
- 요약하면 접근성 향상, 경제 다각화, 인적자본 및 커뮤니티 투자, 맞춤형 거버넌스 등이 섬 및 원격지역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정책 대응으로 제시됨

(8) [Item 8] 환경적 축: 산림 및 농촌 개발 이니셔티브 개요 (16:30-17:15)

● OECD 사무국 발표

- OECD 산림-농촌발전 이니셔티브의 프레임워크 보고서 업데이트 내용을 발표함
- 산림이 많은 농촌지역에서 산림부문이 지역경제 다각화, 양질의 일자리, 환경지속성에 모두 기여할 수 있으나, 그동안 농촌정책 논의에서 다소 주변에 머물렀다고 지적하며 이 이니셔티브의 취지를 설명함
- 첫째로 국가별 산림 분포와 맥락의 다양성을 강조하여, 예를 들어 핀란드는 국토의 80%가 산림인 반면 대부분 국가는 산림이 특정 지역에 밀집해 있으므로 지리적 여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함
- 둘째로 산림의 용도와 기능이 지역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기후·토양 조건과 사회적 수요(예: 도시 인접 산림의 레크리에이션 가치)에 따라 산림관리 전략과 정책우선 순위가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함
- 셋째로 산림을 논할 때 경제·생태·사회적 가치의 균형이 핵심이라며, 지속가능한 산림 활용을 위해 다기능적 접근과 이해관계자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 초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는데, ① 데이터와 증거: 국가 단위에 편중된 산림 데이터를 지역수준으로 세분화해 산림특화 지역의 성과와 동인을 분석, ② 정책 프레임워크: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접점을 다루는 통합정책 모형, ③ 상충관계와 상호보완: 산림 이용의 경제·환경 간 트레이드오프와 시너지 사례 연구, ④ 거버넌스와 소유구조: 공·사유림 비중과 지역주민·원주민 참여 등 제도적 요소 분석으로 구성되었음을 설명함
- 아울러 회원국으로부터 프레임워크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일본·라트비아에서의 사례연구도 병행하여 내년 보고서 완성을 목표로 함을 소개함

- 일본 대표 발표

- OECD 산림 이니셔티브의 일본 사례연구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의 산촌 활성화 정책을 소개함
- 일본 농촌 특히 임업지역이 인구 감소와 서비스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민간기업의 농산어촌 진출 촉진을 핵심 대책으로 추진 중이라고 소개함
- 중앙정부는 도시 기업이 농산촌 프로젝트에 참여해 지역문제 해결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공-민간 공동창출 (platform) 사업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함
- 예를 들어 인구감소로 대중교통과 상점이 사라진 농촌지역에 우정국과 물류회사가 협업하여 생활물자 배송서비스와 농산물 도시운송을 도입, 주민 편의를 높임과 동시에 지역 농가 소득을 창출한 사례를 소개함
- 이러한 사업이 가능하려면 기업 입장에서 농촌사업의 사업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정부가 우수 사례를 발굴해 내부 설득자료로 활용하도록 돕고, 지역중개조직 (지방은행, 컨설팅사)을 통해 기업-지역 매칭을 지원한다고 부연설명함
- 또한 이러한 지역 솔루션 플랫폼에서 선정한 모범사례 (예: 나라현 산촌 지역의 우편·물류 융합서비스)를 전국으로 확산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정부 보조금도 과거처럼 개별 창업에만 지급하기보다 중개조직과 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에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함
- 일본 대표는 이러한 노력이 고령화로 인한 서비스 공백을 메우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효과적이라 보고 있으며, OECD 연구진이 현장에서 해당 정책의 실행 사례를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함

- 라트비아 대표 발표

- 라트비아의 산림자원 특성과 정책과제를 공유함. 라트비아는 제2차 세계대전 전 국토 산림률이 약 27%였으나, 현재는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산림으로 덮인 산림부국이 되었다고 소개하면서, 산림산업은 국내 총고용의 약 10%를 차지하는 주요 산업으로, 목재 수출 등을 통해 국가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함
- 산림정책 논의에 있어 장기적 관점이 필수임을 강조함. 산림 성장주기가 수십~수백 년으로 길기 때문에, 단기 지표만으로 산림정책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기후변화 대응(탄소중립) 평가에서도 참고기간을 길게 잡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실제로 OECD 경제검토에서 핀란드의 탄소중립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는 산림의 탄소흡수 주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언급하며 지표 설계 시 “숲은 천천히 반응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목재의 대체재 역할에 주목하여, 탄소집약적인 플라스틱·철강 등을 목재로 대체

- 함으로써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고 순환경제를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함. 목재 가구와 건축자재 사용은 탄소를 오래 저장하고 화석자원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러한 바이오경제 전략이 기후위기 대응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임을 설명함
- 라트비아 대표는 최근 EU에서도 바이오경제와 순환경제 전략을 강화하는 정책 비전이 나온 만큼, OECD 라트비아 사례연구에서도 동적 자연보호, 적응적 산림관리, 바이오경제 육성의 세 가지 관점을 중점적으로 다뤄주길 기대한다고 요청함
 - 동적 자연보호(dynamic nature protection)란 기후변화 등 변화에 맞춰 보호정책도 유연하게 진화시키는 접근이며, 적응적 산림관리(adaptive management)는 전통적 교과서식 관리에서 탈피해 원주민 지식과 현대과학을 결합하되 끊임없이 새로운 조건에 적응해가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함
 - 이러한 현대적 개념들도 오랜 산림관리 경험을 토대로 실천 가능하므로, OECD와 함께 정책 혁신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함. 끝으로 금년 OECD와 공동 개최한 산림 세미나의 논의 결과가 최근 OECD 웹사이트에 게재되었으므로 회원국들과 공유하며, 산림 분야에서 OECD 등 국제기구 간 협업도 중요하다고 강조함
- ❖ (참고) 토론 질문1: 귀국에서 임업(산림) 부문은 어떻게 농촌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산림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기회나 도전 과제는 무엇입니까?
- 임업 부문은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농촌 경제와 고용의 중요한 축을 차지함. 실제로 OECD 통계를 보면 대다수 국가에서 산림이 국토 면적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 이용 형태이며, 많은 농촌 지역에서 임업 및 임산업이 주요 소득원임
 - 예를 들어 핀란드의 경우 산림이 국토의 80%를 덮고 있고, 임업이 농촌경제의 중추라 할 정도로 기여도가 높음. 목재 생산과 가공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산림 관광 및 휴양 산업(등산, 자연체험 등)으로 인한 소득 창출, 그리고 산림 기반 바이오에너지 등을 통해 농촌 발전에 기여함
 - 이번 회의에서도 산림의 다원적 기회로 바이오경제, 생태관광 등이 언급되었는데, 이는 산림이 전통적인 목재 생산 외에도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음. 예를 들어, 목재를 원료로 한 바이오플라스틱, 제지 신소재 개발, 목질 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 등은 농촌 지역에 미래 일자리를 제공할 유망 분야임
 - 동시에 도전 과제도 존재함. ①첫째, 산림의 다원적 기능 간 균형 문제임. 산림은 경제적 가치(목재, 임산물)와 환경적 가치(탄소흡수, 생물다양성), 사회적 가치(휴양, 문화)를 모두 지니고 있는데, 이를 조화롭게 관리하는 것이 어려움. ②둘째, 기후변화와 병해충, 산불 위험 등 산림의 지속가능성 문제가 커지고 있음. 각국 산림정책은 기후 여건 변화에 맞춘 산림관리(예: 수종 교체, 산불 예방)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함. ③셋째, 지리적 편중문제임. 산림 자원이 국내 특정 지역에 몰려 있어 지역별 발전 격차가 생김. 예를 들어 일부 산촌은 임업 호황으로 성장하지만, 산림이 적은 농촌

은 임업이 발달하기 어려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임업 부문은 농촌 발전에 큰 잠재력이 있지만 지속가능한 관리와 지역간 형평성, 다기능적 활용 전략이 중요할 것임

❖ (참고) 토론 질문2: 생물경제 발전, 순환 가치사슬 구축, 부가가치 활동 등을 통해 임업과 농촌 공동체, 지역경제 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접근법이 효과적일까요?

- 산림의 경제적 가치가 지역에 최대한 환원되도록 하는 정책 접근이 중요함. 전문가들은 임업 가치사슬의 현지화 및 확장을 핵심으로 제시했는데, 예를 들면 목재의 현지 2차·3차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원목을 단순 반출하는 대신 지역 내에서 제재, 가공, 제조까지 이루어지도록 장려할 수 있음. 이렇게 하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 효과가 커짐
- 또한 순환형 바이오경제를 추진해 벌채 부산물 활용이나 목재 폐기물 재활용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환경부하를 줄이는 사업도 권장됨. 정책적으로는 산림 기반 창업과 SME 지원, 지역 특화 임산물 개발 지원 등이 있음.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이 목재를 원료로 한 친환경 건축자재를 개발·생산한다면 정부가 연구개발과 판로를 지원 하는 방식이 있음
- 기술 및 물류 지원도 중요한데, 산촌의 임업 생산물이 시장까지 효율적으로 이동하도록 물류 인프라 보강이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거래 연결 등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음
- 한편, 산림의 다목적 활용 전략도 필요함. 한 지역의 산림을 단일 용도로만 쓰기보다, 복합적으로 활용하면 지역경제에 이득이 될 수 있음. 이를 위해 정책은 산림의 다양한 서비스(목재 생산 + 관광 + 생태계서비스 등)가 공존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조정과 지불제도 등을 도입할 수 있음
- 지역 공동체 참여 역시 강조되는데, 주민 협동조합 형태로 산림경영에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면 수익이 지역에 남고 책임감도 높아져 지속가능성이 강화될 수 있음
- 요약하면 임산업의 지역내 가치사슬 강화, 바이오경제 및 순환경제 촉진, 다각적 산림이용, 지역주민 참여가 중요한 접근법이며, 정부는 이에 맞춘 보조금, 세제혜택, 기술지원, 협력 플랫폼 등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참고) 토론 질문3: 귀국에서는 공공, 민간, 지역공동체 소유의 산림 소유자들이 농촌 및 원주민 공동체와 협력하여, 농촌 발전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지원하며 (산불 예방을 포함한) 산림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요?

- 회의에서는 다양한 산림 소유 주체들 간의 협력과 거버넌스 개선이 산림을 통한 농촌 발전에 필수적임을 강조함. 많은 OECD 국가에서 산림 소유 구조가 복잡하여(국유

- 림, 사유림, 지역공동체 소유림 등 공존) 협력 없이는 통합적 관리가 어렵기 때문임
-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 첫째, 공동 거버넌스 기구 설립이 제안됨. 정부, 기업(산림회사), 지역 주민, 원주민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산림협의회나 파트너십 플랫폼을 구성하여, 산림 관련 정책과 이용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인데, 이를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음
 - 둘째, 지역 단위 협력사업 추진이 제안됨. 예컨대, 일본에서는 지방정부와 민간기업, 지역 주민이 협력하여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산림을 관리하고 탄소 크레디트를 거래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한 바 있는데, 이러한 공공-민간-지역 공동협력 모델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 이처럼 산림을 보존·활용하면서 지역에 수익을 공유하는 협력사업을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원주민 및 지역주민의 지식과 권리 존중이 필요함. 캐나다나 호주 등의 사례에서 보듯, 원주민 공동체는 전통적으로 산림관리 지식을 갖고 있고 문화적으로도 밀접한데, 과거에는 이들이 배제되었던 문제가 있었음. 이에 OECD도 “First Nations(원주민) 참여 강화”를 여러 번 강조했으며, 실제로 최근의 광산 및 산림 프로젝트들은 원주민과의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관리이익을 나누고 있음. 산림 분야에서도 원주민 공동 산림관리구역 설정이나 전통지식 활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이들의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산불 예방 및 재해 대응 협력이 필요함. 산불은 산림 회복력의 큰 위협인데, 이를 위해 산림 소유주와 지역 소방당국, 주민이 함께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훈련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 정부는 이에 필요한 조기경보 시스템 보급, 자원봉사 조직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지식 및 정보 공유의 중요성이 제기됨. 산림 소유주들 간에 모범사례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공동 연구를 추진하면 지속가능한 경영에 모두 이익이 됨
 - 요약하면, 포괄적 거버넌스 기구, 공동 이익사업, 원주민·지역주민 참여, 재해예방 협력, 정보 공유가 주요 협력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이러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9) [Item 9] 핵심 광물과 농촌 전환 (17:15-17:50)

- OECD 사무국 발표
 - OECD 광산지역·도시 이니셔티브의 최신 연구결과를 공유함
 - 첫 번째 사례는 캐나다 온타리오 북부지역으로, 국토의 90%에 달하는 광대한 지역에 주 인구는 6%뿐이지만 금·흑연 등 핵심광물 생산의 중심지라고 소개됨. 이 지역은 인구의 약 17%가 원주민일 정도로 토착 주민 비중이 높아, OECD 연구의 목표는 광

- 업을 지역 발전에 연결하고 원주민 참여와 공동번영을 증진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이를 위해 올해 OECD 제6차 광산지역회의를 개최하고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했으며, 6개국 35명의 원주민 대표가 참석한 글로벌 원주민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원주민 시각에서 광산개발의 의미를 논의한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함
- 또한 현장조사와 이해관계자 인터뷰 등 광범위한 조사를 거쳐 분석한 결과, 광산 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의 평균소득이 비광산 지역 원주민보다 16% 높게 나타나는 등 광업이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여전히 원주민과 지역사회 관점에서 소득 수준 격차, 사회적 문제(예: 교육, 약물남용) 등이 존재하여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함. 보고서는 광산경제를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한 3대 분야 11개 정책권고를 도출하였으며, 캐나다 측에서 상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두 번째 사례는 슬로베니아 사샤(SAŠA) 및 자사브스카(Zasavska) 지역의 석탄산업 지역전환 프로젝트로, EU 집행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OECD가 해당 지역의 탄광 폐쇄 이후 장기발전 전략을 수립 중이라고 소개함. 슬로베니아 정부와 지역 당국은 수십년간 석탄산업에 의존해온 지역경제를 다각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OECD는 ①지역 장기비전 수립(단순 폐광 후 복구를 넘어 10년 이상 장래까지), ②EU 타 석탄지역과의 성과 비교 및 국가 정책체계 검토, ③경제다각화, 생활여건 개선,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실질적 권고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고 설명함
 - 조사 결과, 사샤 지역(10개 기초자치단체, 6만 명)과 자사브스카 지역(4개 시·읍, 6만 명)은 규모는 작지만 석탄퇴출을 위한 전환 노력이 활발하며, 두 지역 모두 낮은 1인당 GDP와 높은 실업률, 인구고령화 압력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창업 증가세나 환경개선 진전, 관광자원 개발잠재력 등 긍정 신호도 있어, 적절한 지원 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가능하다고 평가함. 다만 프로젝트 추진 중 지역수준 세부데이터 부족이 큰 제약이었음을 언급하며, 세밀한 정책 설계를 위해 지역 데이터 인프라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OECD는 두 지역에서 파악된 우수 사례로, ①지역개발공사 주도의 전환공모사업 등을 활용한 공모로 지역 아이디어와 사업 발굴, ②폐광 부지 등 산업 유산의 전략적 재활용(사샤 지역의 폐열병합발전소를 에너지 공원 및 미래센터로 전환한 사례), ③EU 지원과 국가 전략의 연계(국가 에너지·기후계획과 석탄퇴출 전략, 지역특별법 등을 조합해 전환을 지원하는 체계) 등을 언급함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지역 모두 장기 비전의 명확화, 핵심 프로젝트의 투자 유치, 주민 수혜 보장 등의 과제가 남아 있으며, OECD 권고안 초안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소개함
 - 해당 보고서는 2026년 1월 말 발간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튀르키예 지역전환 연구,

노르웨이 핀마르크 국제회의 등을 언급하며, 광산지역의 다양한 전환 경험을 지속적으로 확산할 것을 약속함

● 캐나다 대표 발표

- 몬타리오주 수드버리시의 대표가 참석하여, OECD 북부 온타리오 사례연구를 소개함. 수드버리 시장(Paul Lefebvre)을 대신한 발표자는 “수드버리는 풍부한 광물자원과 세계적 수준의 광업 전문성을 보유한 지역인 동시에 애니시나베(Anishinaabe) 원주민의 전통 영토”임을 강조하면서, 원주민의 지도력과 파트너십이 미래 광업 발전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함
- 수드버리시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지향하며 OECD 프로젝트에 참여하였고, 본 보고서를 통해 노동력 개발, 혁신, 인프라, 지역 협력 측면에서 실행 가능한 통찰을 얻었다고 평가함
- 수드버리시가 최근 원주민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지역경제개발 이니셔티브(CEDI)에 참여하는 등 원주민 경제적 화해를 추진 중임을 소개하면서, OECD 권고가 이러한 지역 노력을 뒷받침해준다고 언급함
- 또한 “광업은 단순한 자원 채굴이 아니라 지역공동의 번영, 환경책임, 모든 수준의 파트너십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광업을 통한 공동번영을 위해 지역사회, 기업, 원주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함
- 이어 OECD 보고서의 주요 시사점으로, ①지역 인재 육성과 기술혁신 투자: 광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청년층 일자리를 창출, ②사회기반시설 확충: 도로·통신 등 인프라 투자를 통해 외부 투자 유치와 생활환경 개선, ③지역 및 원주민 파트너십 강화: 지역정부와 원주민 간 공식 협의체 구성 및 프로젝트 공동추진 등을 꼽으며, 이는 수드버리시가 이미 추진하거나 계획 중인 방향과 일치한다고 설명함
- 마지막으로 “경제성장, 화해, 지속가능성이 함께 가는 미래”를 구축하는 데 이번 OECD 연구가 큰 도움을 주었으며, 전 세계 다른 자원기반 지역들도 이러한 협력에 동참하기를 권한다는 시장의 메시지를 대독하며 발언을 마침

● 슬로베니아 대표 발언

- 슬로베니아 정부 대표는 OECD 보고서에 감사를 표하며, 사샤 및 자사브스카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을 위한 국가적 노력과 성과를 간략히 소개함
- 두 지역에 대해 석탄산업 종식 이후 10-20년에 걸친 종합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광산 부지 재개발, 중소기업 육성,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을 밝히며, OECD 권고를 바탕으로 국가 정책을 한층 보강할 의지를 밝힘
- 특히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두고 교육·복지 투자와 새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임

- 모로코 대표 발언

- 모로코 대표는 OECD 벵게리르(Benguerir) 지역 케이스스터디를 환영하며, 동 지역이 모로코의 인산 광업 중심지이자 새로운 녹색도시 개발지로서 광업과 지역개발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소개함
- 이어 모로코는 광산 개발이 지역에 미치는 환경·사회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다각화를 촉진하기 위해 모하메드6세 폴리테크닉 대학 등 교육·혁신 인프라를 투자해왔다고 설명하고, OECD 연구를 통해 글로벌 모범사례와 교훈을 얻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 기타 발언

- 캐나다 온타리오 사례와 관련하여 노르웨이 대표 등 몇몇 참석자는 핵심광물 수요 증대 속에서 지역의 역할을 질문함
- OECD 측은 글로벌 전기차전환 등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이 전략화되며 각국 정부가 앞다투어 공급 확보에 나서는 상황에서, 지역 차원의 수용성과 혜택 보장이 중요하다고 답변함
- 또한 핀란드 대표는 자국 라플란드 지역의 사례를 언급하며 관광 등 기존산업과 광업의 병행 발전 가능성을 질의하였고, OECD는 핀란드의 키틸라 사례처럼 다각화 전략과 철저한 환경관리가 이루어진 경우 인구증가 등 긍정효과가 나타남을 강조함
- 참석자들은 광업이 지역사회에 이익을 공유하고 환경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향후 광산지역의 경험교류 플랫폼을 지속 발전시킬 것을 제안함

- ❖ (참고) 토론 질문1: 핵심 광물 수요 증가에 따른 기회를 활용하면서도 현지 경제를 다각화하고 지역 주민의 장기적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광산 지역은 어떻게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요?

- 광산 지역이 “채굴 중심 단일경제”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광산 호황의 수혜를 활용해 지역경제를 다각화하는 전략이 필요함. 회의에서는 핀란드 라플란드의 키틸라(Kittilä) 사례가 언급됐는데, 키틸라는 유럽 최대 금광이 있는 지역이지만 동시에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경제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한 결과 주민 소득과 복지가 안정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소개됨. 이처럼 광업 + a(다른 산업) 구조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 모로코 벵게리르(Benguerir) 지역의 사례를 보면, 이 도시는 인산염 광산으로 성장했지만, 국왕의 결정으로 2017년에 지역 대학(Mohammed VI Polytechnic University)을 설립하여 광업 외에 교육·연구 부문을 지역의 두 번째 축으로 설정함. 그 결과 광산 자원이 언젠가 고갈되더라도 지역이 지속가능하게 번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평가됨

- 한편, 광업으로 인한 단기적 경제이득을 지역 주민의 장기 복지로 전환하는 노력도 중요한 균형요소임. 캐나다 북온타리오의 사례에서 현지 시장(폴 르페브르 수드버리 시장)은 “광업은 추출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지역 공동 번영과 환경 보호, 모든 이해관계자의 파트너십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함. 실제 OECD “광산 지역과 도시” 보고서도 광업 수익의 지역사회 재투자, 환경복원 기금 조성, 광산기업-지역 사회의 동반자 관계 구축을 권고하고 있음

- 요약하면, 광산 지역은 호황기의 수익을 교육·관광 등 새로운 부문에 투자하여 경제 기반을 다변화하고, 광산 운영 자체도 지역사회와 환경을 배려하는 방식(예: 현지 고용, 원주민 계약, 환경모니터링)을 채택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장기 복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참고) 토론 질문2: 광산 및 전환 지역에서 보다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요?

- 민관 파트너십은 광산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 수단임

- 우선 광산기업과 정부 간의 협력 측면에서, 광산기업이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하도록 협약을 맺고 공동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모델이 효과적임.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모로코 벵게리르의 대학 설립 사례는 국영 광산기업 OCP가 전액 출자하여 지역 대학을 세운 것으로, 이는 광산기업의 이익을 지역 인재육성 및 다각화 투자로 연결한 성공적인 PPP 사례임. 또한 캐나다 북온타리오에서는 광산회사들과 지방정부, 원주민 단체가 파트너를 이뤄 지역 경제개발 기금을 조성하고 공동의사결정 기구를 운영한 사례가 있음

- 둘째, 전환 지역(석탄산업 쇠퇴 지역 등)에서는 정부, 공기업, 민간투자자가 함께 신성장사업을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함. 예컨대, 어떤 석탄지역은 정부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재생에너지 기업을 유치하고, 공기업이 보유한 폐부지에 산업단지를 함께 조성한 사례가 있음

- 셋째, PPP를 통한 현지 중소기업 육성도 중요함. 광산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 간 상생 프로그램을 만들어, 광산업 관련 부품·서비스를 현지에서 조달하도록 지원하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음

- 넷째, 지식 공유형 파트너십이 필요함. OECD 광산 지역 이니셔티브에서는 각 수준에서의 파트너십을 강조했는데, 이는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뿐 아니라, 산학연 네트워크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 기술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도 포함됨

- 마지막으로, 투명한 거버넌스가 PPP 강화에 필수요소임. 정부가 명확한 룰과 책임구조를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협력의 성과를 공개하면 민관 협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짐

- 요약하면, 광산기업의 지역투자 유도, 공공 부문의 인센티브 제공, 공동 프로젝트 및 기금 운영, 현지 기업 참여 확대 등의 방안을 통해 민관 협력을 강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광산 및 전환 지역에 보다 지속가능한 발전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참고) 토론 질문3:** 정부가 석탄산업 전환이나 신규 광산 개발로 영향을 받는 지역 공동체를 포함한 현지 주민들과 협력하여, 지역 경제 생태계를 광업 부문의 새로운 기회와 조화시키고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성과가 지역 전환 전략에 통합되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 수 있을까요?
 - 지역 전환 전략에 경제·사회·환경 목표를 통합하려면 정부와 지역공동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함. 첫째, 정부는 장기 비전 수립 과정에서 지역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함. 캐나다 온타리오 사례에서 강조되었듯이 지역사회가 강하고, 원주민 리더십이 존중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광업경제에 대한 공동 비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정부는 주민, 기업, 원주민 대표가 함께하는 비전 워크숍이나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음
 - 둘째, 경제적 전환 측면에서는 정부가 대체 산업 및 일자리 계획을 지역주민과 함께 설계해야 함. 석탄 광산이 폐쇄되는 지역이라면, 정부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재훈련 프로그램, 대체 산업 유치(예: 관광, 제조, 재생에너지)를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광산 기업의 자금도 일부 활용하도록 교섭함. 환경적 성과와 관련해서는, 환경복원 프로젝트(폐광 산지 복구, 수질 개선 등)에 주민들을 고용하거나 참여시키는 방안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환경 개선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는 공동체의 사회적 응집력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정부는 광산으로 피해를 입거나 변화에 직면한 지역주민을 위해 공정전환 지원금,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지역 공동체 시설(보건, 교육)에 투자하여 전환 과정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음
 - 넷째, 이러한 모든 조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거버넌스 구조가 뒷받침되어야 함. 회의에서는 모든 수준에서의 의미있는 파트너십이 거듭 언급되었는데, 이는 중앙-지방정부 협업, 기업-지역사회 협약, 원주민-정부 간 합의 등 다층적 파트너십 체계를 구축하라는 의미임. 예를 들어, 정부가 주도하고 지역 이해관계자가 모두 참여하는 전환 추진 위원회를 만들어 정책 결정과 집행을 함께하면, 경제·사회·환경 목표 간 균형을 갖춘 조치들이 지역전략에 반영되고 실천되기 쉬울 것임
 - 마지막으로 투명한 모니터링과 피드백이 필요함. 정부와 지역사회가 전환 전략의 진행 상황과 성과(일자리 수, 환경지표 등)를 공동으로 평가하고 조정하면, 경제·사회·환경 성과의 통합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임

- 즉, 정부는 지역주민과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장기 비전을 공유하며, 다각적 지원과 포용 정책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광업 부문의 새로운 기회가 지역경제 생태계와 조화를 이루고 지속가능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함

제51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회의

1. 회의명

- 제51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회의 (Day 1)

2. 일시 및 장소

- 2024년 12월 5일 (목), 9:30 ~ 18:00
- OECD Headquarters C

3. 참석자

- OECD 회원국
-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권유정 과장
-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임현아 사무관
-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한준수 주무관
-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문성윤 자문관
-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장이슬 서기관
-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 박예슬 사무관
-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 최희정 사무관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최아진 사무관
-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양은모 부연구위원
-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전봉경 부연구위원
- OECD사무국 이랑 과장

4. 주요 주제

- 2026년 사무국 지정

- 미래를 향한 방향 설정
 - RDPC 장관급 회의 성과 점검
 - RDPC 위임 갱신 및 차기 업무계획·예산
- 무역 불확실성과 분절화된 글로벌 시장의 최전선에 있는 지역들
 - 거대 전환과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매력도 정책의 재고
 - 모든 유형의 지역에서의 성장
 - 지역 전반에서 작동하는 산업정책: 장소기반 접근과 전환
 - 지역발전을 위한 중간도시의 잠재력 발굴

5. 주요 논의내용

(1) [Item 1]개회 (09:30-10:00)

- RDPC 의장
 - RDPC 의장 Dennis Alvord의 주재로 제52차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회의가 개최됨
 - 의장은 52차 회의에 48개 대표단(40개 현장 참석) 등 200여 명의 대표가 참여한 것을 환영하며, 급변하는 경제·지역 환경 속에서 OECD 지역개발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음을 강조함
 - 회의 안건(CFE/RDPC/A(2025)2/REV1)과 전 회의 요약기록(CFE/RDPC/M(2024)5)이 별다른 이의 없이 승인됨
 - Lamia Kamal-Chaoui OECD CFE 국장이 지난 활동 및 향후 일정을 보고함
 - 국장은 2025년 5월 바르샤바 장관급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언급하며 주요 성과를 소개하고, 그간 회원국 장관들의 요청에 부응해 글로벌 지역 회복력 플랫폼 출범(스페인 지원)이나 OECD 지역 데이터포털 확충 등의 추진해 온 후속조치를 소개함
 - 또한 이번 회의에서 향후 위원회 전략 방향(5개년 Mandate 마련 및 4개년 PWB 도입) 논의를 착수함을 언급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함. 아울러 이번 회의에 다양한 고위급 인사가 참여한 만큼 각국의 통찰을 공유하고 배울 절호의 기회라고 언급함
 - Dennis Alvord 의장이 올해를 끝으로 RDPC 의장직에서 물러날 예정임이 언급되었으며, 위원회는 그간의 공로에 감사의 뜻을 표함. 이번 회의는 바르샤바 장관급 회의 결과를 토대로 RDPC의 향후 전략을 설정하는데 주력할 것임을 확인함

(2) [Item 2] 2026년 사무국 지정 (09:30-10:00)

- 개요
 - 2026년도 RDPC Bureau 구성안이 제출되어 위원회의 승인으로 최종 확정됨
 - RDPC 규정에 따라 매년 말 차기 Bureau를 지정하게 되는데, 올해 다년간 위원회를 이끈 Dennis Alvord 의장이 임기를 마치고 물러남에 따라 새로운 의장단이 선임됨
 - 사전에 ONE 커뮤니티를 통해 접수된 후보들을 바탕으로, Peter Berkowitz (EU)가 차기 의장으로 지명되었고 캐나다, 프랑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대표가 부의장으로 선출됨
 - 위원들은 신임 의장단에 환영과 지지를 표하는 한편, 전임 의장 Dennis Alvord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함
- RDPC 의장
 - 새로운 Bureau 구성과 관련하여 “오랜 경험과 신선한 아이디어가 조화를 이룬 훌륭한 팀”이라 평가하면서, 임기 동안 함께 한 Bureau 구성원들의 지원에 감사를 표함
 - 특히 올해 장관급 회의 등 이례적으로 많은 일정 속에서도 Bureau가 헌신적으로 역할을 다했음을 강조하고 사의를 표함
- 국가별 주요 발언 요약
 - 여러 대표들이 전임 의장의 리더십을 치하하며 감사를 전함
 - 또한 새로 지명된 Peter Berkowitz 의장을 비롯한 2026년도 Bureau가 지역정책위원회의 지속성과 역량 강화를 이끌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냄
- 요약
 - RDPC는 2026년 위원회 의장단을 공식 지정하여 향후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함
 - 전임 의장의 탁월한 지도력에 대한 감사와 함께, 신임 Bureau가 제시할 새로운 동력에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확인됨
 - 이날 저녁 회의 후반에 전임 의장을 위한 비공식 환송 행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원활한 의장단 이양을 축하함

(3) [Item 3] 미래를 향한 방향 설정 (10:00-13:00)

(3-1) [Item 3a] RDPC 장관급 회의 성과 점검 (10:00-10:45)

- 개요
 - 아이템 3a는 2025년 5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RDPC 장관급 회의 결과를 검토

하는 세션임

- Dennis Alvord 의장이 먼저 바르샤바 회의의 주요 논의 및 의장 성명서(Chair's Statement)의 핵심 메시지를 요약함
 - 당시 회의에는 OECD 회원 34개국과 EU, 9개 파트너 등 53개 대표단에서 17명의 장관급 인사가 참석하여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으며, 공식 선언문 대신 채택된 의장 성명서에 향후 위원회가 추구해야 할 정책방향이 담김
 - 이어 OECD 사무국(Dorothee Allain-Dupré 국장 등)이 장관회의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며, ▲지역의 회복력 강화, ▲미래지향적 장소기반 지역정책의 중요성, ▲보다 미세한 지역데이터 확충 및 지방정부 참여 확대 등의 메시지를 강조함
 - 회원국들은 순차 발언을 통해 장관회의 논의에 대한 자국의 견해와 후속계획을 공유함
- 국가별 주요 발언 요약
 - (폴란드) 2025년 5월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OECD 지역개발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주최한 폴란드 대표는, 이번 장관회의를 통해 OECD 지역정책위원회(RDPC)가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지식이 풍부한 지역정책 싱크탱크임을 증명했다고 강조함. 장관회의 논의를 통해 얻은 아이디어들이 EU 차원의 논의(예: 차기 다년재정프레임MFF)에도 크게 참고되었으나, 이러한 논의 결과를 EU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폴란드는 특히 우크라이나와의 특별 부대행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MOU를 체결한 것을 실질적 성과로 소개하고, 장관회의에서 도출된 녹색 지역정책 개념 등을 자국의 새로운 지역정책 방향에 통합하여 지역정책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 (일본) 바르샤바 회의에서 부의장국을 맡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 장관회의에서 디지털 전환을 활용한 지역발전 경험을 공유함. 디지털 전환이 지역성장의 핵심 동력임에 동의한다고 밝힘. 일본은 OECD와 협력하여 모든 지역에서의 포용적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각국의 중소도시들이 혁신과 스마트 기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식공유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함. 일본의 예로 일본 정부는 250여 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향후 2년 내 참여 도시를 2배로 늘릴 예정이라고 소개함. 일본 정부는 디지털 기술을 도시계획에 도입해 재난대피 시뮬레이션 강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 250여 개 도시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함. 또한 여러 국가들이 전자정부, 디지털 학습 플랫폼, 스마트 커뮤니티 센터 등의 혁신사례를 공유했음을 언급하면서, 디지털화로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함. 이를 위해 산·학·관·민의 협력이 필요하고, 지역 간 디지털 격차 해소와 인재 육성이 과제로 대두되었으며, OECD의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함을 역설함
 - (노르웨이) 폴란드의 훌륭한 회의 주최에 감사를 표하고, 이번 회의 주제가 된 다층

적 거버넌스, 회복력,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자국 관점을 공유함. 노르웨이는 오랫동안 균형있는 정주 패턴 유지를 지역정책 목표로 삼아왔으나 다른 국가들처럼 인구변화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인구 감소 현실을 직시하고 정책을 조정해야 함을 강조함. 특히 국경지역의 산업 전환이 새로운 도전으로 부상했는데, 이는 지역개발 정책이 안보정책과도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함. 또한 지방 정부 수준의 협력과 우수한 서비스 제공, 그리고 지역에서 창출된 천연자원 수익의 공유 등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노르웨이 대표는 이러한 장관회의 논의 내용이 자국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며, 앞으로도 환경·디지털 전환, 다층거버넌스 등의 분야에서 OECD와 향후 협력 의지를 강조함

- (우크라이나) 2025년 11월 RDPC 참가국으로 공식 합류한 우크라이나 대표는,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지역개발 개혁을 과감히 추진해온 성과를 소개함. 우크라이나는 2027년까지의 국가 지역발전전략을 갱신하고 새로운 행동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 전국 24개 주 대부분이 국가 전략에 부합하는 자체 지역전략을 갖출 정도로 다층적 전략체계를 정비했다고 소개함. 또한 국토안보 개념을 지역정책에 도입하고, EU의 NUTS 지역구분 체계를 사상 처음 완전히 채택하여 통계 호환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함. 우크라이나는 현대적 지역개발 지표 시스템도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을 가능하게 했으며, 공공투자 관리 개혁을 통해 6천여 지역공동체가 중기 투자계획과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수립하도록 했다고 설명함. EU 결속정책 원칙을 반영한 국가 지역발전기금도 2026년에 신설할 계획이며, 현재 EU 연계사업 276개에 참여하는 등 EU 통합을 향해 착실히 전진하고 있다고 강조함. OECD에 대해서도 전략 수립부터 공공투자 개혁까지 전방위적인 전문 지식과 지원을 제공해준 데 깊이 감사함을 표하며, 우크라이나의 RDPC 참여는 자국 개혁 성과에 대한 국제적 인정이자, 향후 더 강한 개혁 의지의 신호라며, 앞으로도 회원국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공조해 나가겠다고 다짐함. 또한 OECD의 정책지문을 통해 다층적 거버넌스 개혁, 공공투자 관리 개선 등에 나섰음을 언급하며, OECD 커뮤니티의 지원과 파트너십이 전례 없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불가리아) OECD 가입 후보국인 불가리아의 지역개발부 장관은 바르샤바 장관회의에서 얻은 시사점들이 자국의 지역개발 우선순위와 강하게 맞닿아 있다고 평가함.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정책은 정부의 부차적 기능이 아니라 국가 균형발전의 전략적 수단임이 재확인되었으며,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함을 강조함. 특히 장소 맞춤형 (place-based) 접근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는데, 이는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잠재력을 인정하고, 정부 모든 수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별 필요와 기회를 반영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함. 불가리아 정부도 이러한 방향으로 모든 지역이 국가발전에 기여하도록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 구축이 여전히 지역발전의 중심 과제로, 교통, 수도, 디지털 연결, 지역 필수서비스

에 대한 안정적이고 선별된 투자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다만 현대적이고 탄력적인 인프라 없이는 지역정책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점을 자국 경험으로 확인했다며, 인프라 투자뿐 아니라 이를 계획·조정할 유능한 제도와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나아가 다층거버넌스의 개선을 통한 효과적인 자원배분과 지역밀착형 정책집행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방향이 국가 회복력 제고로 이어진다고 강조함. 불가리아 장관은 장관회의 논의사항들은 OECD 회원국은 물론 가입준비국 모두에 시의적절한 교훈이라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주체를 권한 강화하며, 모든 정부수준이 협력하는 지역정책이야말로 더 강건하고 포용적인 국가를 만드는 길임을 역설함. 또한 장관회의에 OECD 가입 후보국들이 적극 참여한 것을 환영하며, OECD 지역정책 지침이 회원·비회원국 모두가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임

- (스페인) OECD 주재 스페인 대사는 다층정부 간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재난 대응과 회복력 강화에 있어 중앙-지방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이는 최근 스페인이 직면한 각종 자연재해 극복 경험과 맞물려 있으며, 지역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함. 이러한 다층거버넌스 강화는 위원회의 향후 논의 의제에서도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차기 RDPC 활동계획에도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논의 요점

- 이번 세션을 통해 장관급 회의에서 합의된 정책방향이 회원국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음을 재확인함. 지역 회복탄력성, 장소기반 접근법, 다층거버넌스 및 데이터 활용 등이 공통된 우선과제로 지목되었으며, 다수 대표들은 장관회의 논의사항을 이미 자국 정책에 반영하거나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했음을 밝힘. 이러한 토론 결과는 향후 RDPC의 전략적 의제 (Mandate) 수립과 프로그램 작업계획 수립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인됨

(3-2) [Item 3b]RDPC 위임 갱신 및 차기 업무계획·예산 (11:15-13:00)

● 개요

- 아이템 3b는 2027-2031년 RDPC 5개년 Mandate(임무범위) 갱신과 2027-2030년 차기 프로그램예산(PWB) 편성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짐
- 의장은 현재 RDPC Mandate가 2025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2025년 장관급 회의 준비로 논의가 지연되어 1년 연장(2026년까지)을 요청한 배경을 설명하고, 해당 연장안이 아직 이사회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상황을 공유함
- 다만 이러한 절차와 무관하게 향후 5년 간의 위원회 전략을 미리 구상하는 것이 중요

하므로, 이번 회의에서는 2027-31년 Mandate와 2027-30년 PWB에 대한 회원국 의견을 수렴하기로 함

- OECD 사무국은 사전에 배포된 초안 Mandate 문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지난 장관회의 성과를 반영해 재해·위기 대응력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 실행·평가 메커니즘 개선 등 몇 가지 내용을 현행 임무에 추가·보완했음을 밝힘
- 아울러 OECD 예산제도 개편으로 PWB 주기가 2년에서 4년으로 처음 연장된 점을 감안해, 보다 거시적이고 유연한 작업계획 수립이 필요함을 강조함
- 이후 각국 대표들은 차례로 발언하며 Draft Mandate와 예비 PWB안에 대한 의견과 제안을 제시함

● 국가별 주요 발언 요약

- (스위스) RDPC의 새 Mandate을 지지하면서도, 경제성장 및 경쟁력 제고라는 본연의 목표를 계속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함. 기후변화와 자연재해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공감하지만, 스위스의 경험상 재난관리는 국가별 상황 편차가 큰 사안이므로 RDPC 차원의 논의는 보다 포괄적인 지역 회복력(resilience)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함. 즉, 의장성명서에 포함된 관련 문구를 지지하면서도 “재난관리보다는 환경변화에 대한 지역 회복력”으로 의제(Mandate) 표현을 구체화하기를 제안함
- (슬로베니아) 통합적 지역발전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함. 슬로베니아 대표는 현재 자국에서 국가 지역정책을 전면 개편 중인데, OECD 보고서들이 부처별 단절된 접근이 아닌 도시-농촌 연계 통합발전 관점을 제시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함. 특히 새로운 의제(Mandate)를 작성함에 있어 첫 번째 논점으로 “도시 + 농촌”의 단순 결합이 곧 지역발전은 아니며, 그 이상의 종합적(systemic) 관점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즉, 도시와 농촌을 연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다양한 부문의 정책을 총체적으로 묶어내는 거시적 정책패키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함. 둘째로, 다층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라는 용어가 OECD 포럼 내에서는 통용되지만 대중에는 생소하므로, “다층거버넌스 = 중앙·지역 간 협력으로 국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시킬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함. 세 번째로, 신기술 등 미래 트렌드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함. 4차 산업혁명과 기후전환 등 신기술 및 글로벌 트렌드 대응에서 지역의 역할을 강조하며, RDPC가 중장기 의제(Mandate)를 실행하는 데 타 OECD 위원회(산업·혁신, 중소기업 등)와도 적극 연계·협업해야 한다고 제안함
- (에스토니아) 간결하고 포괄적인 신규 의제(mandate) 수립을 지지하며, RDPC의 새 5개년 임무가 위원회의 구조, 임무, 3대 우선순위를 명확히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함. 세부적인 활동계획은 다년 계획으로 수립하여 유연성을 높이고, 현재 작성된 초안도 이 방향에서 더 다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함. 또한 새 의제는 이전보다

덜 세세하면서도 전략적이어야 하며, 정책학습을 촉진하는 상호학습 플랫폼으로서 위원회 역할도 부각되기를 희망함. 에스토니아는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의 가치를 강조하며, 다른 OECD 위원회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개발의 교차분야 이슈(안보, 산업, 환경 등)에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함. 이어 장관회의에서 도출된 우선순위들이 에스토니아의 지역정책 방향과 부합한다고 밝히며, 특히 스마트하고 지속 가능한 지방 적응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함. 에스토니아는 국토 대부분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어, 2030년까지 절반 이상의 지자체 인구가 25%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취약 지역의 회복력 강화와 적응 전략이 최우선 과제이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에 대비한 지역 회복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다층거버넌스 촉진과 영향평가 체계 강화 등으로 국가 전략에 지역적 시각을 주류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RDPC가 이러한 국가 간 경험 교류의 장으로서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다양한 주제들도 각국 상황에 따라 중요할 것이라고 설명함

- (캐나다) RDPC의 향후 Mandate 목표로 지역의 기업가정신과 산업역량을 활성화하여 지역 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방안을 중시해야 한다고 밝힘. 캐나다 대표는 자국의 지리적 규모를 언급하며, “너무나 넓은 국토가 하나의 도전”이라고 소개하고, 지역 별로 상이한 기회와 과제를 민간 부문과 함께 극복해야 함을 강조함. Mandate 문구와 관련해서는 OECD 비회원국과의 협력 중요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non-members” 언급을 “stakeholders”로 변경한 부분에 대해, 두 범주 모두를 포함하도록 수정해 달라고 요청함(이 부분에 대해 사무국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 또한 이해관계자(지역기업, 시민사회 등) 참여 확대 기조에 공감하면서도, “이해관계자 협력을 강화 하되 회원국 중앙정부와의 사전 조율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밝힘. 작업방법 측면에서는 회원국 현장에서의 대면회의 및 현장방문을 늘려줄 것을 요청함. 실제로 2025년 10월 캐나다에서 OECD와 공동 개최한 지역개발 컨퍼런스는 연방·주·지방 정부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는데, 이러한 회원국 개최 행사를 통해 OECD 지역정책 작업에 대한 현장 인식과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언급함. 마지막으로 캐나다는 몇몇 쟁점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며, 다층거버넌스 전문가그룹을 비공식 모임에서 공식 하위기구로 격상시키자는 의견에 동의했고, 지역 생산성 격차 요인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탈리아의 견해에도 지지를 표명함. 아울러 슬로베니아 대표가 제안한 타 OECD 위원회와의 협업 강화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힘
- (이탈리아(부의장)) RDPC 활동이 지난 수년간 지역의 일자리 창출, 녹색전환, 회복력 제고 등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며, 향후 의제(Mandate)에서도 이러한 “포괄적 지역발전” 목표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함. 이탈리아 대표는 “공정성과 효율성은 상충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다”는 바르샤바 장관회의의 메시지를 상기시키며,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국가 경쟁력 강화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 요인 분석과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함. 또한 RDPC Mandate 문안에 안보와 지역개발의 연계가 새롭게 부각된 것을 환영하며, OECD가 진행 중인 분권화 (Decentralisation)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중앙 간 역할 배분과 다층 거버넌스 구조 개선 방안도 함께 모색하자고 제안함. 끝으로, 향후 PWB는 4개년 장기계획인 만큼 기존보다 전략적이고 큰 틀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지나치게 세부적인 활동나열보다는 유연하고 적응적인 프로그램 구성이 필요하다는 사무국 의견에 동의한다고 언급함

- (체코) RDPC Mandate 1년 연장안이 이사회 승인을 앞두고 있는 것에 대해, “위원회 임무의 안정적 연장으로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환영했다. 체코 대표는 RDPC가 OECD 내 지역정책의 핵심 플랫폼으로서 그 보고서와 권고안이 “자국의 정책 논의에 항상 큰 영감과 자극을 준다”고 언급함. 향후 5개년 Mandate에서는 성장정체 지역 (lagging regions)에 대한 지원과 구조전환 지역의 잠재력 제고에 보다 중점을 둘 것을 제안함. 예를 들어 체코는 최근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파일럿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장소기반 접근으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OECD 차원에서도 이와 유사한 정책 시도를 적극 공유하고 장려해 달라고 요청함. 또한 체코 대표는 RDPC 논의 주제가 자국 뿐 아니라 EU 정책과도 맞닿아 있음을 지적하며, (프랑스 사례를 배우기 위해 방문했던 경험을 소개하는 등) 회원국 간 교류와 학습을 통해 정책혁신을 이루어 가자고 언급함

- (한국) RDPC의 현행 의제 (Mandate) 기조를 “큰 틀에서 지속하되 시대 변화에 맞춰 발전시키자”는 사무국의 방향에 공감을 표함. 한국 대표는 RDPC 논의가 AI, 디지털화, 저탄소 전환 등 거대 담론을 지역 관점에서 구체화하는 데 기여해왔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5년 동안 첨단기술과 공간데이터 활용, 청년층 정주여건 개선 등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연구와 정책을 강화할 것을 제안함. 예를 들어 스마트시티, 디지털 인프라 등의 추진에서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모든 지역이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함. 또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한 지역정책 전략을 Mandate에 명시하여 회원국들이 공동 과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한국은 OECD 지역정책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사례로서, 특히 OECD 지역 삶의 질 지표나 지역격차 분석자료가 정책 수립에 매우 유용함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데이터와 증거에 기반한 정책결정”을 지원하는 RDPC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언급함. 끝으로 회원국 간 우수사례 공유와 정책도구 개발 노력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하며, RDPC가 국제적 정책학습 플랫폼으로서 가치를 높여가길 바란다고 덧붙임

- (유럽연합) EU 대표(집행위원회 측)는 RDPC 임무 문안의 길이와 복잡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현재 초안이 OECD 내에서도 가장 긴 수준의 임무문서라고 지적하며, 내년 협의 시 가급적 간결하게 압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함. 이는 핵심 메시지의 명확성을 높이고 회원국 간 합의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견해임. 또한 여러 대표들이 지적한 대로 정책 평가와 성과 측정의 강화를 요청함. 재정 제약이 심화되는 상

황에서, 각국 지역정책 효과를 실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 기반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임. EU 측은 RDPC가 회원국들에게 정책평가 방법론과 지표 개발 측면에서 더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임

- 논의 요점

- RDPC 장기 의제(Mandate) 개정과 차기 PWB 방향에 대한 첫 토론으로서, 대부분의 대표들이 현행 전략의 연속성 유지에 동의하면서도 새로운 정책환경에 대응한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함
- 예를 들어 회복력(resilience), 인구구조 변화, 산업전환, 다층거버넌스 개선 등이 향후 중점과제로 부각됨
- 한편 위원회 Mandate 1년 연장과 관련한 절차적 상황이 공유되어 이해를 도왔으며, 세부 Mandate 문안에 대한 수정 제안들(예: 이해관계자 정의, 재난관리 범위 등)이 제출됨
- 사무국은 12월 12일까지 추가 서면의견을 받아 Mandate 수정안에 반영하고, 차기 회의 전까지 회원국들과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임
- 이번 논의를 통해 RDPC가 미래 5년의 청사진에 대해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세부 조율을 거쳐 2026년에 새로운 Mandate를 OECD 이사회에 상정할 계획임

(4) [Item 4] 무역 불확실성과 분절화된 글로벌 시장의 최전선에 있는 지역들
(14:30-18:00)

(4-1) [Item 4a] 거대 전환과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매력도 정책의 재고 (14:30-15:30)

- 개요

- 아이템 4a는 지역 매력도(regional attractiveness) 제고를 위한 정책 접근을 논의함
- OECD 사무국은 지난 2년간 수행한 지역 매력도 연구사업의 종합보고서 내용을 발표함.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투자가 소수 대도시에만 몰리는 것이 아니며 최근 저성장 지역도 상당한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고 분석됨. 즉, 과거 FDI 유치 실적이 저조했던 하위 25% 지역들이 최근 몇 년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는 새로운 녹색산업 및 전략산업에 있어 후발 지역에도 기회가 열리고 있음을 시사함
- 이러한 글로벌 전환기에는 지역별 맞춤형 장소기반 전략이 필요하며, 단순히 모든 지역이 동일한 유치 경쟁을 벌이기보다는 각 지역의 특화자산과 잠재력에 기반한 차별화 전략이 효과적임이 강조됨
- OECD는 회원국들이 자체 지역 매력도를 진단·개선할 수 있도록 OECD 지역 매력도

프레임워크와 지표틀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간 국제 비교와 강약점 파악을 도와 전략적 투자유치 경로를 설계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2025년 10월 캐나다 몽턴에서 개최된 OECD-캐나다 장소기반경제 발전 컨퍼런스의 사례가 소개됨. 이 컨퍼런스는 OECD와 캐나다 연방·주·지방정부가 공동 주최한 다층협력 모델로 진행되었으며, 300여 명이 넘는 각계 참여자들이 교역 불확실성, 청정성장, 인구변화 등에 직면한 지역들이 자체 강점을 활용해 회복력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함.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6가지 주제별 교훈들은 이후 OECD-뉴브런즈워 실무 안내서로 발간되어, 지역 혁신역량 강화, 인재 유입·정착, 관광 다변화, 지역간 연계 거버넌스 개선 등에 대한 실천지침을 제공하고 있음

● 국가별 주요 발언 요약

- (캐나다) OECD와 공동개최한 뉴브런즈워 장소기반경제 컨퍼런스 사례를 상세히 공유함. 캐나다 대표는 이 행사가 “다층거버넌스의 실제 적용”이었다고 소개하며, 연방·주·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역의 매력요소(혁신역량, 생활환경, 문화자산 등)를 진단하고 강화방안을 논의한 과정을 설명함. 특히 뉴브런즈워주는 수출의 90% 이상을 미국에 의존하는 지역으로, 무역다변화를 통한 회복력 제고가 핵심 과제였는데, 이번 논의를 통해 지역의 자생적 강점(예: 높은 수출집약도, 커뮤니티의 결속력)을 글로벌 기회와 연결시키는 전략을 모색할 수 있었다고 평가함. 이러한 다자 협력 경험을 토대로 캐나다는 “지역 매력도를 높이는 정책이 곧 장기적 경쟁력, 회복력, 포용성의 동력”임을 실감했다고 언급함
- (유럽연합)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표는 대외 무역 불확실성에 취약한 지역들에 대한 정책 대응을 설명함. EU에서는 무역충격으로 타격을 입은 취약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화조정기금(글로벌라이제이션 펀드)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여전히 큰 과제라고 지적함. 이러한 선제 대응능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경쟁력·생산성 향상 도구를 더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EU는 오랜 기간 영역기반 투자유치 정책을 시행해왔고, 이를 통해 발전이 뒤쳐진 지역에 투자를 유도해왔으나, 최근 지정학적·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특정 부문을 표적으로 한 보조금 제도 수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체계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함. 이처럼 다양한 목적의 지역지원 제도가 누적되면서 간소화와 효과성 확보가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치적 목적의 선별지원 위험성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요약하면 EU 대표는 “단순하고 효과적인 장소기반 정책 vs. 지나치게 표적화된 복잡한 정책” 사이의 균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함
- (영국) 영국 대표는 지역 매력도 향상 논의가 시의적절하다며, 영국 내 지역격차(특히 런던/남동부 vs 기타지역)가 OECD 최고 수준인 현실을 인정함. 영국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원적 접근전략을 도입하고 있다고 소개함. 첫째, 국가 균형발전 법제화

를 통해 전국의 50% 이상 지역을 우선 지원대상으로 삼는 새 법적 틀을 마련함. 둘째, 신산업전략을 과거와 달리 8대 유망 산업분야 중심의 부문별 접근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산업클러스터들이 입지한 특정 지역을 별도로 지원하는 장소 기반 요소를 결합했다고 설명함. 즉 “선도 산업 + 지역균형”을 모두 고려한 새로운 전략으로, 현재 영국 전역에 19개의 기회지역과 22개의 산업전략존을 지정하여, 중앙정부가 해당 지역 지방정부(광역단체장 등)와 협력해 맞춤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특히 광역단체장들에게 해당 지역의 10년짜리 지역성장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여, 산업클러스터의 육성과 지역발전계획을 연계했다고 강조함. 이러한 새로운 전략들은 OECD의 지역매력도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하며, 영국 정책이 OECD의 사고와 잘 접목되고 있다는 평가도 덧붙임. 다만 아직 도입 초기라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서명함. 아울러 영국 대표는 특정 주력산업이 없는 지역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을 제기함. 산업 클러스터가 없어 인재와 투자가 부족한 지역도 많은데, 이들을 위한 플레이스 기반 투자 프로그램을 새로 발표하여 데이터 모델링 등을 통해 취약지역을 선제 발굴하고 있다고 소개함. 영국은 이러한 노력이 모든 지역이 혜택을 받는 포용적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다른 국가들의 경험 공유에도 관심을 표명함

- (네덜란드) 네덜란드 대표는 지역정책에서 삶의 질이 담보된 전체적인 생활환경 조성을 중시하고 있다고 설명함. 마침 네덜란드에서도 새 연정이 지역개발에 지속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실시간으로 받았으며, 경제적 투자뿐 아니라 주민 복지 등 모든 측면을 아우르는 종합패키지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또한 작은 나라인 네덜란드도 지역별 상황이 제각기 달라, 복잡성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역설함. 이는 앞서 EU 대표가 지적한 바와 맥락을 같이한다며 동의하면서, 지역마다 맞춤형 해법이 필요함을 강조함. 네덜란드는 각 지역과 직접 대화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구성하는 지역별 맞춤형 접근을 이미 취하고 있으며, 단일한 보편대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함. 요약하면 국가가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없으며, 지역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다각적 분야의 과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역설함

● 논의 요약

- 이번 회의에서는 OECD의 지역 매력도 종합 연구결과와 회원국 경험을 바탕으로, 각 지역의 고유한 강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각 국 대표들이 동의함
-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무역갈등 등으로 지역 간 경쟁과 위기가 동시에 증폭되는 상황에서, 녹색산업 투자유치, 필요 인재 확보 및 정착, 지속가능 관광전략 등 다양한 방면에서 장소기반 정책 혁신이 요구되고 있음이 강조됨
- 아울러 OECD가 개발한 지역 매력도 진단도구를 회원국들이 적극 활용하여 근거기반

- 정책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다층정부 협력과 지역 간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함
- 전반적으로, 지역 매력도 제고는 목표인 동시에 강력한 수단으로서, 이를 통해 장기적인 지역 경쟁력과 회복력, 포용적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짐

(4-2) [Item 4b] 모든 유형의 지역에서의 성장 (15:30-16:00)

- 개요

- 아이템 4b는 “모든 유형의 지역에서의 성장 동인”을 주제로 한 OECD의 진행 중인 프로젝트 결과가 공유됨
- 사무국은 2000년대 이후 지역별 성장추이를 분석한 예비 결과를 보고하며, OECD 지역전망보고서 2023에서 나타난 몇 가지 특징을 설명함. 지난 20년간 OECD 국가 전반에서는 낮은 소득 수준 지역들이 평균을 향해 수렴하는 추세(catching-up)가 관찰됨. 그러나 상당수 국가들의 국내에서는 지역 간 격차가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유지 또는 확대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즉, 국가 내 주요 대도시와 기타 지역 간 불균형이 구조적으로 심화된 사례도 있다는 의미임
- 이러한 상반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OECD는 2000년대 초반(호황기), 2008-12년 금융위기기, 2013년 이후 회복기의 세 기간으로 나누어 지역 경제성장률과 결정요인을 비교함
- 예비 분석에 따르면 시기별로 도시 규모, 산업구조 변화, 교역 부문의 역할 등이 지역 성장에 미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중소도시 및 교외지역의 성장 기여가 주목되기도 함
- 또한 제조업 등의 산업전환과 수출 가능한(tradable) 산업의 입지 변화가 지역 성장패턴에 중요한 변수임이 확인됨
- 이러한 분석은 “모든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최대화한다”는 RDPC의 모토와 맞닿아 있으며, 향후 심층 연구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임. 사무국 발표 후 간단한 의견교환이 이어짐

- 국가별 주요 발언 요약

- 과거 20년간 전체적으로는 저소득 지역이 성장률이 높았지만, 정작 국내 핵심 대도시와 지방 간 격차는 줄어들지 않았음.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려면, 중앙정부가 전국 평균 지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간 분포와 격차에 주목해야 함. 또한 최근 글로벌 경기변동 속에서 일부 산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산업 다각화와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별 회복력 확보가 중요함
- 중간규모 도시와 농촌지역이 대도시와는 다른 성장 메커니즘을 가짐을 고려해야 함. 예를 들어, 인구 10만 명 내외의 중소도시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이 고

용을 이끌고, 생활환경과 기본서비스의 질이 인구 유지에 결정적이므로 이에 특화된 성장전략이 필요함. 또한 각국의 국토균형발전 정책도 과거에는 낙후지역에 인프라를 투자하는 접근이 주로 강조됐으나, 이제는 교육·기술·혁신 등 무형자본 투자와 사람 중심 접근으로 전환되고 있음. OECD 분석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지역유형별 맞춤형 정책수단을 제안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임

-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 대표는 OECD가 발표한 지역별 성장요인 분석이 자국 정책 방향 설정에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함. 이 분석을 통해 비(非)중심지역의 제조업 활성화와 혁신 역량 제고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슬로베니아는 그동안 교통 인프라 등 하드웨어 구축에 치중해왔으나, 이제는 도로 건설에서 혁신 구현으로 정책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함. 즉 지역 생산성 향상과 임금 상승을 견인할 혁신만이 비수도권 지역 인구 유출을 막을 근본 대책이라는 설명함. 대표는 OECD의 이러한 연구가 기존 지역정책 도구의 한계를 짚어주었고, 향후에도 계속 발전시키길 독려함. 아울러 산업정책 등 타 분야와의 연계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금일 오전 논의 및 영국 대표 발언과도 연결되는 부문별 접근과 지역별 접근의 통합을 적극 지지한다고 설명함. 산업정책(부문)과 지역정책(공간)을 양자택일이 아닌 병행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옳은 방식으로 결합하면 부문과 지역 모두 상생 효과를 볼 것이라고 역설함
- (칠레) 칠레 대표는 대외 무역환경 변화로 영향을 받은 지역을 다수 보유한 나라로서 자국 경험을 공유함. 특정 자원산업에 의존하는 지역들(예: 광산지역 등)은 생산공정에 물·에너지 등 방대한 자원이 필요하여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도전이 있다고 언급함. 이러한 지역이 현재보다 더 크게 성장하려면 해당 지역의 기능과 자원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특화 산업정책을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함. 칠레는 슬로베니아 대표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지역정책과 다른 분야 정책 간 교류·협업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함. 또한 영국 대표가 언급한 부문-지역의 연계 필요성에도 공감하면서, 국가 산업(안보) 전략과 지역전략 간 소통이 원활해야 한다고 강조함. 이어 OECD의 이번 지역성장 연구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면서, 현재 우리가 지역성장 에 대한 이해의 패러다임 전환을 겪는 중인지도 모른다고 언급함. 즉 과거와 다른 새로운 성장요인이 작용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본 연구가 특히 중요하다는 의미임. 칠레 대표는 연구의 범위를 유럽 이외 지역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며, 남미, 북미, 아시아 등 각지의 경험을 비교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함. 글로벌 비교 시각을 통해 각지의 강약점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연구가 이미 흥미로운 시사점들을 도출했지만, 여전히 남는 큰 질문들도 있다고 지적함. 예를 들어, 무역가능(tradable) 부문과 지역성장에 대한 기존 논의는 주로 제조업에 집중되었는데, 서비스화와 같은 추세로 제조-서비스 경계가 변화하는 점을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함. 아울러 AI 기술 발전이 혁신의 지리적 분포

를 바꿀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함. 이는 누구도 확답할 수 없지만,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국경에 드론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되는 사례처럼 과거엔 상상하기 힘들었던 입지에 첨단산업이 등장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언급함. 이처럼 회복력(resilience)의 개념도 재고할 필요가 있는데, 소외되었던 주변지역이라도 어떤 계기에 의해 갑자기 기회가 열릴 수 있는 시대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예컨대 자원이나 지정학적 강점이 부각되면서 낙후지역의 위상이 바뀌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함. 이러한 점들을 최종 연구보고서에 충분히 반영한다면 회원국 정책입안자들에게 더 유용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발언을 마무리함

● 논의 요점

- 이번 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이 지역 간 경제수렴과 격차 확대의 동시 발생이라는 복잡한 현상에 주목하면서, 지역특성별 성장전략의 차별화 필요성에 공감함
-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등 모든 유형의 지역이 고유한 성장동인과 장벽을 지니고 있으며, 중앙정부 정책도 이를 세심히 고려해야 효과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됨
- OECD의 예비 연구는 이러한 접근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으며, 향후 지역 유형별 정책설계 지침으로 이어지길 기대함
- 요약하면, “모든 지역의 성장”을 위해서는 곳곳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맞춤형 정책과 포용적 성장(framework)이 필요하며, RDPC는 그 방향에서 회원국 간 지식공유와 협력을 촉진하기로 함

(4-3) [Item 4c]지역 전반에서 작동하는 산업정책: 장소기반 접근과 전환

(16:30-17:00)

● 개요

- 아이템 4c는 산업정책의 지역적 적용에 대해 논의한 세션임
-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산업정책의 부활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이를 지역격차 완화와 지역경제 전환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음
- 의장은 개회사에서 미국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는데, 수십 년간 산업정책에 소극적이었던 미국 연방정부가 최근 국가경제·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섰음을 언급함
- 이러한 추세는 많은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RDPC 차원에서도 국가 산업전략과 지역발전의 연계를 강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 OECD 사무국은 장소기반 산업정책(place-based industrial policy)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함

- 해당 연구는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면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산업정책 설계 방안을 탐색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산업정책 결정 시 지역적 고려의 필요성, ▲ 쇠퇴하는 산업지역의 전환 지원 사례, ▲산업 클러스터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극대화 방안 등이 소개됨
- 특히 최근 핀란드가 주도하고 있는 OECD 산업정책 장관회의 준비 동향을 공유하며, RDPC 논의가 향후 OECD 산업정책 방향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함
- 국가별 주요 발언 요약
 - (미국, 의장) 자국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제는 정부가 산업정책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 개입해야 할 때라고 강조함. 첨단제조업 육성을 위해 2022년 반도체 지원법(CHIPS Act) 등을 제정하여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점을 들며, 이러한 산업정책의 목표 중 하나가 “뒤쳐진 지역(left-behind places)의 변혁”이라고 설명함. 미국은 그동안 특정 지역(실리콘밸리 등)에 혁신과 성장이 편중되어 왔으나, 최근 정책은 중서부 등 쇠퇴지역에 첨단산업단지 조성, 인력양성 투자 등을 통해 지역균형을 도모하고 있다고 소개함. 의장은 국가안보와 경제안보 관점에서 산업정책을 추진하면 지역균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며, 산업정책과 지역정책의 윈윈(win-win) 가능성을 역설함
 - (핀란드) 2024년 OECD 산업장관이사회의 의장국 자격으로 발언권을 얻어 자국의 경험을 공유함. 핀란드 대표는 “산업정책에 지역적 맞춤형 접근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최근 핀란드 동부 국경지역의 안보·산업위기를 예로 설명함. 러시아와 접경한 동부 지역들이 목재·제지 산업의 쇠퇴로 침체를 겪자, 정부는 해당 지역을 국가지원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바이오산업 등의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있음. 또한 지역대학과 연구소에 추가 재원을 투입해 해당 지역이 국가 전략산업의 시험대가 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라고 밝힘. 이러한 조치는 산업정책 목표(녹색전환)를 달성함과 동시에 국경지역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고 평가함. 핀란드는 이 경험을 살려 OECD 차원의 논의에서도 “산업전환의 지역격차” 이슈를 부각할 계획이라고 덧붙임
 - (일본) 지역산업 클러스터 육성 사례를 소개하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선정한 “지역 미래투자 전략”을 통해 각 지방에 주력 육성산업을 지정하고 이에 집중 지원함. 예를 들어, A지역은 수소경제 특화, B지역은 바이오의료 특화 등으로 구분하고, 해당 분야 연구기관과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는 것임. 일본 대표는 이러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지역혁신을 촉진하지만 자칫 지역 간 경쟁 심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지적함. 따라서 정부 부처 간, 그리고 광역 지자체 간 협의회 플랫폼을 운영해 상호보완적 분업과 연계를 유도하고 있다고 소개함. 중앙정부도 지역의 의견을 전략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권역별 산업정책 라운드테이블을 정례화하였으며, RDPC에서도 회원국 간 산업정책-지역정책 연계 경험을 지

속 교류하기를 희망함

- 산업정책과 지역정책의 연결고리, 즉,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함. 각국이 첨단산업을 육성하려 할 때, 모든 연구개발과 생산을 수도권에 집중하지 말고 지역 거점들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함. 이를 위해서는 중앙의 산업전략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역별 특화잠재력을 고려해야 하며, 현지 대학·기업·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지방 분권화 수준이 산업정책 추진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있다며, (이탈리아 등에서 논의된) 다층거버넌스 개선이 산업정책 성과를 높이는 전제조건일 수 있다고 언급함. 마지막으로 RDPC가 향후 산업정책의 지역적 효과 분석, 지역별 맞춤형 산업전환 지원방안 등의 비교연구를 강화해주길 요청함
- (칠레) 칠레 대표는 산업정책과 지역발전의 연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자국의 공정한 사회-생태 전환을 위한 국가전략을 소개함 이 전략은 부처간 종합 정책 프레임워크로서, 국민 삶의 질 보장, 생태계 균형, 저탄소 산업전환을 위한 제도·법제·사회·정치적 변혁 방향을 제시한다고 설명함. 해당 전략의 목표는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발전을 위한 생산체제 전환으로서, 사회적 정의와 환경 정의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이를 위해 2025~2035년 달성을 목표로 하는 76개의 세부과제(goal)가 설정되어 있으며, 4대 전략 축으로 ①노동자 재교육 및 양질의 일자리, ②생태계 복원 및 보호, ③지속가능 생산을 위한 혁신과 기술, ④지역사회 형평과 복지를 언급함. 이 국가전략 아래에 국가 광업전략과 국가 그린수소 전략 등의 하위 산업전략도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함. 예를 들어 국가 광업전략은 광업 부문에 기술·지속가능성·부가가치 요소를 접목하여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국가 그린수소 전략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장기 비전으로 현재 공청회 단계에 있다고 설명함. 지역 수준에서는 이러한 국가 차원의 횡단테마를 각 주의 지역개발전략과 정책수단에 통합하고 있다고 설명함. 특히 두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강조했는데, 하나는 “지역 선제투자 예산편성 절차”로서, 해당 지역의 모든 공공투자 사업계획을 지역정부 주도로 하나로 모아 조정하는 메커니즘임. 지역발전전략을 지침 삼아, 각 부처 및 기관의 지역 투자사업을 사전에 협의·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함. 다른 하나는 “지역 생산개발 위원회 (Regional Committee for Productive Development)”로, 지역정부의 정치적·기술적 대표와 중앙 부처 산하기관장 및 실무자들(특히 중소기업 지원 관련)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혁신전략에 부합하도록 생산개발 지원자금을 배분 협의하는 기구라고 소개함. 이러한 거버넌스 장치를 통해 산업전환 관련 중앙정부 정책과 지역 수요 간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산업정책의 지역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나가고 있다고 평가함
-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대표는 개방경제인 자국에서 산업정책은 국가 경쟁력 모델과 WTO 규범과의 정합성이 중요하며, 동시에 전국 모든 지역이 산업변혁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 언급함. 코스타리카는 현재 강력한 범정부 (inter-institutional) 접근을 통해 장소기반 산업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함. 그 일환으로 투자유치청 주도로 수도권에 집중된 외국인투자를 국토 전역으로 확산하는 국가 이니셔티브를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이 모델의 특징은 지역 개발 우선순위를 중앙이 아닌 각 지역이 직접 식별한다는 것임. 구체적으로 2023년부터 투자유치청 내 지방투자 유치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중앙권 외곽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진단작업을 실시했다고 설명함. 이 진단에는 인프라, 치안, 서비스, 기술인력 등 투자여건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며, 지역개발공사들과 농촌개발청 등 지역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업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설명함. 그런 다음 권역별 워크숍을 통해 각 지역이 향후 발전을 위한 핵심 프로젝트 3개씩을 선정했다고 소개함. 이 변혁 프로젝트들은 중·장기 국가발전목표와 부합하면서도 각 지역이 자발적으로 구상한 것이라고 강조함. 선정된 프로젝트들은 해당 지역의 투자유치와 지속가능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를 해소하고 여건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투자유치청은 조율자로서 추진상황을 점검하되, 주도권은 지역에 있다고 설명함. 한 가지 사례로, 오크시덴테 지역이 지역발전 거버넌스 개편에 성공한 경험을 들며, 이 모델이 다른 모든 지역에 영감을 주어 지역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소개함. 전반적으로 코스타리카 대표는 자국 접근법과 OECD 보고서 메시지가 긴밀히 부합한다고 평가하면서, 다층거버넌스, 지역 주도의 전환전략 수립, 지역잠재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 제거 등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앞으로도 코스타리카는 회원국들과 경험을 교류하고, 위원회의 관련 연구작업에도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히며 발언을 마침

● 논의 요약

- 회원국들은 산업정책의 지역적 함의에 대한 이해를 같이하며, “장소기반 산업정책”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시작함
- 기존의 산업진흥 정책이 전국 단위로 수립·집행되었다면,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맞춘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됨. 특히 전략산업 육성, 탈탄소 전환, 공급망 재편 등 국가적 과제가 지역 차원에서 구현될 때 지역 격차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함
-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 간 정책 조율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산업정책 수립 초기단계부터 지역의 의견과 데이터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RDPC는 회원국들의 사례와 제안을 수합해 OECD 차원의 지침 (draft)을 마련하고, 향후 2026년 예정된 산업정책 각료회의 등과 연계하여 논의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함

(4-4) [Item 4d]지역발전을 위한 중간도시의 잠재력 발굴 (17:00-18:00)

● 개요

- 아이템 4d는 중간규모 도시(intermediary city)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 방안을 논의한 세션임
- OECD와 EU 집행위원회(EC)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중간도시의 잠재력 활용” 프로젝트의 1단계 결과가 보고됨. 먼저 OECD는 “인구 5만-25만 명 규모의 도시”를 중간도시로 정의하는 공통 기준을 제안했고, 이 기준을 토대로 OECD 및 EU 지역에서 중간도시를 식별함
- 그 결과 OECD 전체 도시의 약 46%, EU 전체 도시의 약 59%가 중간규모로 분류되었으며, 특히 EU 인구의 90% 이상이 이러한 중간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가 별로는 이탈리아가 EU 내 중간도시 수 1위(가장 많음)이고 스페인, 독일, 폴란드 순이며, 그리스는 전체 도시의 86%가 중간도시일 정도로 중소도시에 국가 인구가 집중된 사례로 지목됨
- 이어 OECD는 중간도시들의 역할과 기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함. 중간도시는 국가 도시 네트워크의 연결고리로서, 거점 대도시와 주변 소도시·농촌을 이어주는 브리지(brige) 역할을 수행함.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비즈니스 서비스 제공, 지식·혁신 허브, 교통거점, 전문 의료·교육 인프라, 문화·소매 중심지, 행정 중심 등 8가지 핵심 기능을 정의했으며, 대부분의 중간도시는 이 중 복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아울러 중간도시의 경제적 성과를 대도시 등과 비교분석하였는데, 일부 중간도시는 대도시 못지않은 1인당 GDP와 생산성을 보였지만 다수는 국가 평균에 미치지 못함. 이는 국가 내 중간도시들도 획일적인 집단이 아니라 규모, 입지, 산업구조에 따라 성장경로가 다양함을 의미하며, 정책 처방 역시 이에 맞게 다르게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함. 현재 프로젝트 2단계로 6개국의 사례연구가 진행 중이며, 다양한 지역 맥락에서 중간도시의 도전과 정책효과를 심층 분석하고 있음

● 국가별 주요 발언 요약

- (라트비아) 라트비아 대표(지역개발부 차관)는 OECD 중간도시 프로젝트의 이론적 분석을 실제 정책에 접목시킨 점을 높이 평가하며, 국가·지역 차원의 강력한 거버넌스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언급함. 이번 연구는 상이한 규모와 위계를 지닌 두 중간도시 사례(발미에라와 살두스)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이들 도시가 국가 도시체계 내에서 어떤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매우 현실적인 질문에 답하고 있다고 설명함. 이 연구는 최근 라트비아가 대대적인 행정-지역 개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구조를 획일화하고 역량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매우 시의적절함. 라트비아는 2021년 지방행정구역 개편으로 시·군을 통합하여 규모

를 키우고 재정을 보강한 바 있는데, 본 연구결과가 이러한 개혁의 효과를 평가하고 보완하는 데 귀중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함

- 라트비아 대표는 라트비아 사례에서 도출된 두 가지 주요 메시지를 소개함. 첫째는 인구구조(demography) 문제임.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유럽 전역의 중간도시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도전이며, 라트비아 두 사례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설명함. 인구 감소로 노동공급이 줄고, 복지서비스 제공 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중간도시에도 뚜렷이 나타난다는 것임. 따라서 중간도시가 지속적으로 매력적이고 회복력 있게 유지되려면, 자신만의 강점에 기반한 경제활동 육성, 기업환경 개선, 문화·관광 활성화, 그리고 양질의 인프라·공공서비스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라트비아 사례에서 특히 지역 간 교통 연결성 제고,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디지털 공공서비스 강화 등이 중간도시 과제로 도출되었고, 산업구조를 고부가가치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함
- 둘째 메시지는 지역경제 구조에 관한 설명임. 소규모 도시일수록 영세한 기업들이 경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지역 경제에 탄력성과 기업가정신 측면의 장점을 주는 반면, 기업 규모 확대나 디지털·녹색전환 대응 측면에서는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지적함. 예를 들어 살두스(Saldus)시는 종업원 수 10인 이하 마이크로 기업 비중이 매우 높아, 기업 생애주기 상 성장으로의 이행이 미흡하다고 설명함.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직업교육 및 재교육 프로그램 확충이 필요하며, 각 도시별 특화분야에 맞춘 디지털 기술 및 녹색기술 인력 양성도 권고된다고 소개함. 살두스 사례에서는 디지털 역량 강화가, 발미에라(Valmiera) 사례에서는 녹색기술과 의료분야 기술인력 양성이 각각 중요한 과제로 도출되었다고 설명함. 이처럼 지역 맞춤형 인력·기업 지원책이 중요하며, 고령화·인구감소 상황에서도 경제 활력을 유지하려면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 마지막으로 라트비아 대표는, 본 연구의 정책권고를 실제 이행단계와 연결하는 작업도 가치 있다고 설명함. 즉 무엇을 해야 하는가뿐 아니라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임. 이를 위해 국가 거버넌스 모델과 부합하는 형태로, 지역 여건에 맞는 실행 로드맵과 단계, 주체별 역할을 구체화하면 권고사항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함. 이러한 추가 작업을 통해 OECD 연구가 실질적인 정책 가이드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무리함
- (EU 집행위원회) 본 프로젝트를 공동 자금지원한 EC 대표는 중간규모 도시들은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잠재력을 지녔다고 강조함. 중간도시들은 인구와 기능 면에서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정책 관심은 종종 대도시나 낙후 농촌에 집중되고 중간도시는 정책설계에서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고 지적함. EC는 이번 연구를 통해 중간도시에 대한 공통 정의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것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EU 지역정책에서도 중간도시 지원을 별도 의제로 삼을 계획임을 언급함. 또한 프로

젝트 최종 결과가 2026년 보고서로 나오면, 회원국들과 최적의 방안을 공유할 것을 약속함

- (프랑스) 프랑스 대표는 자국의 중간 규모도시 지원정책을 소개하며, 프랑스 전역에 약 3만5천 개에 달하는 방대한 수의 소도시·중소도시가 존재함을 설명함. 이러한 수치는 미국 등과 비교해도 매우 많은 편으로, 중간도시가 균형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강조함. 대표는 OECD의 중간도시 연구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여 바르(Bar)-되빌(Deauville) 등 프랑스 사례연구를 수행한 것을 언급하고, 프랑스 정부의 관련 지원프로그램(예: ‘액송 피르 드 빌’ 등)과 경험을 공유함. 특히 인구 5만 명 미만 도시들을 지원하면서 얻은 교훈과, 중간도시의 산업전환 및 서비스 개선 사례 등을 소개하여 위원회 활동에 기여했다고 설명함
- (이탈리아) EU에서 중간도시가 가장 많은 나라로서 발언권을 얻어, 도시 유형의 다양성을 강조함. 이탈리아 대표는 자국에 100개가 넘는 중간도시가 있으며 이들간에도 지역별로 역할이 천차만별이라고 언급함. 북부의 중간도시는 제조업과 수출거점으로 기능하지만 남부의 중간도시는 공공행정과 중소기업 중심인 등 차이가 크게 나타남. 따라서 중간도시 정책도 일률적일 수 없으며,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간도시는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고 위축된 중간도시는 접근성 개선과 기초서비스 투자로 회복시키는 등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함. 또한 다층거버넌스 측면에서, 이탈리아는 최근 광역도시권 체제를 도입하여 인접한 중간도시들이 협력토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도시간 연계가 중간도시 발전의 핵심 열쇠라고 강조함
- (그리스) 그리스 대표는 자국의 특수한 도시구조를 소개하며,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와 테살로니키를 제외한 모든 도시가 중간규모 이하라고 설명함. 이처럼 대도시가 드문 국가는 중간도시들이 사실상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중심지라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특히 그리스의 중간도시들은 섬 지역이나 산간부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고립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들을 인근 지역과 연결시켜주는 교통 및 디지털 인프라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함. 또한 중간도시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관광의 사례를 들며, 그리스의 중간도시들이 풍부한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체계적 개발이 미흡했다고 평가함. 앞으로 이러한 잠재력을 적극 발굴하여 중간도시들이 국가 관광산업의 새로운 거점이 되도록 할 계획임을 공유함
-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는 얼마 전 포용적이며 친환경적인 국가도시정책을 채택함. 이는 사실상 아이슬란드의 첫 번째 국가도시정책으로, 아이슬란드는 인구가 겨우 36만명에 불과하고 자본 흐름이 가장 적은 나라라고 소개함. 중간 도시인 아쿠레는 주요 경제 도시로, 이러한 중간도시들은 경제 성장을 위해 지속가능한 이동성과 혁신적인 서비스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아이슬란드는 섬나라 간의 연결성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인프라 투자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를 통해 더 크고 탄력적 이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간 고립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함

- (코스타리카) 중간도시들이 실제 의존하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함
- OECD의 중간도시 정의와 기능분석 작업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중간도시들이 대도시와 소도시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개념에 공감함. 이를 뒷받침하는 8대 기능(비즈니스, 지식, 교통, 주택, 문화, 소매, 건강, 행정)을 실제 정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다만 중간도시 간 상호협력 메커니즘의 부재를 문제로 지적하면서, 중앙정부가 중간도시들 사이 연계 프로젝트(예: 권역별 중간도시 연합 또는 중간도시-농촌 연계사업 등)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마지막으로 향후 OECD 보고서에 중간도시 정책을 국가 도시·농촌정책의 일환으로 통합하는 방안, 중간도시 성과평가 지표 등을 포함해주길 희망함
- 논의 요점
 - 이번 세션을 통해 중간규모 도시들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됨
 - 회원국들은 중간도시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수행하는 역할(지역 간 연결, 거점 서비스 제공 등)에 공감하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중간도시 정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음
 - OECD-EU 공동연구의 1단계 결과는 중간도시에 대한 공통 정의와 분류체계를 제공하여 국제 비교와 협력을 촉진할 토대를 마련함
 - 향후 사례연구와 추가 분석을 통해 구체적 정책권고가 도출될 예정이며, 회원국들은 자국 경험을 적극 공유하여 최종 보고서에 반영하기로 함
 - 요약하면, 중간도시들은 잠재력은 크지만 지원은 부족했던 “숨은 챔피언”으로서,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킹을 촉진한다면 국가 전체의 포용적 성장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 회원국들이 동의함

제52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RDPC) 회의

1. 회의명

- 제52차 지역개발정책위원회 (Regional Development Policy Committee) 회의 (Day 2)

2. 일시 및 장소

- 2025년 12월 4일 (목), 9:30 ~ 16:00
- OECD Headquarters CC06

3. 참석자

- OECD 회원국
-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권유정 과장
-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장이슬 서기관
-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임현아 사무관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박예슬 사무관
-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한준수 주무관
-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전봉경 부연구위원
-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양은모 부연구위원
- OECD사무국 이랑 과장

4. 주요 주제

- Centre for Entrepreneurship, SMEs, Regions and Cities 데이터 접근성 논의
- 지역 개발을 위한 전략적 규모 확대 방안
- 글로벌 구조 전환 논의
- 지역 기반 정책 및 지역 혁신을 위한 AI 활용 방안

- 지역 개발을 위한 지자체 간 협력 방안

5. 주요 논의내용

- 핀란드 지역 회복력 강화 실천 사례
 - OECD와 EU는 공동으로 핀란드 동부 8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 이행을 추진 중임. 해당 지역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핀란드-러시아 국경 폐쇄로 무역과 관광이 중단 되면서, 기존의 고령화 및 인구 유출 문제에 추가적인 경제·사회적 충격을 받은 상황임
 -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및 비러시아권 관광 수요 확대, 광업 및 녹색에너지 관련 프로젝트 추진, 방산·사이버 보안 분야의 신산업 수요 증가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일부 나타나고 있음
 - 본 프로젝트는 두 가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됨
 - 첫째, 국경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 개발 정책에서 안보가 핵심 요소로 작용함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정책 설계에 반영함. 둘째, 기존의 전통적인 지역 개발 접근 방식을 보완·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EU 지역 개발 재원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정책 수단과 재정 지원을 제공함
- 유럽연합 도시경제 회복력 강화 프로젝트
 - OECD와 EU는 공동으로 크로아티아, 그리스, 스웨덴 등 도서(섬) 지역을 대상으로 다층적 거버넌스 개선과 도시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함
 - 도서 지역은 지리적 고립성, 강한 계절성, 소규모 경제 구조라는 공통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방문객·디지털 유목민·혁신 인력에게는 매력적인 지역인 동시에 구조적 제약과 취약성을 함께 보유하고 있음
 - 47개 유럽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2001년부터 2021년까지 도서 지역 인구는 9% 이상 증가하여 연안 비대도시 지역(3%) 및 기타 지역(5%)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반면, 같은 기간 도서 지역의 GDP는 5% 증가에 그쳐, 다른 연안 지역(16%) 대비 경제 성장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
 - 본 프로젝트는 도서 지역을 단순한 낙후 지역이 아닌 각국의 잠재적 전략 자산으로 인식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도서 지역이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 등 다양한 정책 실험의 테스트 베드로 기능할 수 있음을 정책 권고 사항으로 제시함

- 정책 우선순위로는 다음의 사항이 제안됨
- 첫째, 도서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및 분석 체계 개선. 둘째, 단순한 인구 증가 중심의 접근에서 생산성 향상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정책 초점 전환. 셋째, 기술 혁신 및 사회적 포용성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 넷째, 거버넌스와 데이터를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 역량 구축. 다섯째, 클러스터 조성 및 지역 간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및 농식품 산업 지원 강화. 마지막으로, 녹색 전환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등임
- 인구변화 대응 지역 정책
 - (일본 사례) 일본은 심각한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콤팩트시티(Compact City) 접근법을 추진 중임
 - 시청, 상업시설, 병원 등 핵심 도시 기능을 보행 및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집적함으로써, 인구 감소 상황에서도 효율적인 인프라 관리와 지속 가능한 도시 운영을 도모함
 - 아울러 보육시설 확충, 저렴한 임대주택에 대한 접근성 개선, 공원 및 공공 공간 조성 등을 통해 가족 친화적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정책을 병행 추진 중임
 - (에스토니아 사례) 에스토니아는 2050년까지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25% 이상이 소멸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도서 지역과 국경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과제로 인식됨
 - 이에 대응하고자, 모든 공공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인구 감소 지역에서도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 고령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 완화를 위해 연금소득세의 지방정부 배분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원격 지역 계수를 재정 균등화 메커니즘에 추가하여 인구 감소 지자체의 세입 손실을 보전함
 - 또한, 새로운 지역 개발 보조금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서비스 제공 방식 적응과 공공건물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는 한편, 농촌 지역 맞춤형 대중교통 체계 개편 및 학교 네트워크 최적화 방안 등을 함께 추진 중임

KRIHS-OECD 업무협의회

1. 회의명

- KRIHS-OECD 업무협의회

2. 일시 및 장소

- 2024년 12월 5일 (금), 10:00 ~ 11:30
- OECD Headquarters

3. 참석자

- OECD Economics Department Junhah Kim Economist
- OECD Economics Department Volker Ziemann Economist
- OECD Economics Department Jon Pareliussen Head of Desk Korea
-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양은모 부연구위원

4. 주요 논의내용


- 국토연구원과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소개
- OECD Economics Department의 한국경제보고서 발간을 위한 전문가 자문의견 제공
 - 25년 8월~10월 수행한 OECD 한국경제보고서 작성 대응 전담반 활동 결과로, OECD Economics Department에서 요청한 한국의 균형발전 정책 자료 제공
- 26년 공동연구 수행 논의
- 국토연구원-OECD MoU 체결 논의

부록


1. 출장자 항공권

(1) 양은모 부연구위원

현대아산주식회사
EOM.JEONGYUN
TEL. 02-3669-3033 | FAX. 02-3669-3034
ejy3033@hdasan.com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e-Ticket Itinerary & Receipt
항공권 발행일 : 2025년 11월 13일



승객성명 Passenger Name YANG/EUN MO MS (KE11252868****)	항공권번호 Ticket Number 1806050874887	예약번호 Booking Reference FOSMUE
---------------------------------------------------------------	---------------------------------------------	-----------------------------------------

1 서울 ICN

Incheon International Terminal No: 2
29NOV25(토)12:05 (Local Time)



파리 CDG

Charles de gaulle Terminal No: 2E
29NOV25(토)18:30 (Local Time)

예약등급 Class: M (일반석)
운임 Fare Basis: MLW0ZRMK
수하물 Baggage: 1PC


예약상태 Status: OK (확약)
항공권 유효기간 Validity: -- 29NOV26
기종 Aircraft Type: BOEING 777-300ER

비행시간 Flight Time: 14시간 25분
SKYPASS 마일리지 SKYPASS Miles: 5626

KE0901
예약번호: FOSMUE
Operated by KE KOREAN AIR

2 파리 CDG

Charles de gaulle Terminal No: 2E
05DEC25(금)21:00 (Local Time)



서울 ICN

Incheon International Terminal No: 2
06DEC25(토)17:20 (Local Time)

예약등급 Class: Y(일반석)
운임 Fare Basis: YRT
수하물 Baggage: 1PC

예약상태 Status: OK (확약)
항공권 유효기간 Validity: -- 29NOV26
기종 Aircraft Type: BOEING 777-300ER

비행시간 Flight Time: 12시간 20분
SKYPASS 마일리지 SKYPASS Miles: 5626

KE0902
예약번호: FOSMUE
Operated by KE KOREAN AIR

■ 예약등급은 항공사 FLIGHT 정보에 따라 표기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환인 또는 무임 항공권의 경우 예약 등급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률이 상이하거나 마일리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스케줄, 기종 및 좌석등급(서비스클래스)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예고없이 항공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 교체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택하신 좌석이 변경될 수 있으니 탑승수속 시 기종 및 좌석번호를 재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정보는 항공사나 공항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항공권 운임정보 Ticket/Fare Information

연결항공권 Conj. Ticket No.	-
운임산출내역 Fare Calculation	SEL KE PAR730 95KE SEL 1170.25N1IC1901 20END ROF1415 9489
Tour Code Tour Code	XSDQCABGQ
산출운임 Fare Amount	KRW 2692100(Paid Amount KRW 2692100)
지불회계 Equiv. Fare Paid	-
세금/항공사 부과 금액 Taxes/Carrier-imposed Fees	Paid Amount KRW 345900
세금 Taxes	KRW 24000BP 15700FR 22200FR 67800O4 57200QX * 2025년 1월 1일 발권일 및 탑승일 기준 한국 출발 세금(BP)은 국제여객공항이용료(인원/김포 17,000원, 기타 12,000원), 출국납부금 7,000원으로 구성되며 12세 미만 소아는 출국납부금이 면제됩니다. KRW 159000YR
유류할증료 Fuel Surcharge	-
부가수수료 Service Fees	-
총산출금액 Total Amount	KRW 3038000 (Total Paid Amount KRW 3038000)
지불수단 Form of Payment	CCVI XXXXXXXXXX06824 / XXXX/00
발행일/발행처 e-Ticket Issue Date/Place	13NOV2025 / 17326120 / SELK1320Y * 지불금액은 (Total Paid Amount)에 표기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Notice

■ 본 e-티켓 확인증과 함께 제공된 법적 고지문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티켓 확인증은 탑승수속시, 임출국/세관 통과시 제시하도록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 여행 기간 동안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e-티켓 확인증의 여통과 여권상의 이름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 본 e-티켓 확인증은 e-티켓의 정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서면에 불과하고 소지인에게 당해 운송 관련 어떠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본 e-티켓 확인증을 임의로 위변조할 경우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대한항공 또는 정당한 e-티켓 소지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전봉경 부연구위원

현대아산주식회사
EOMJEONGYUN
TEL. 02-3669-3033 | FAX. 02-3669-3034
ejy3033@hdasan.com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e-Ticket Itinerary & Receipt

항공권 발행일 : 2025년 11월 13일



■ 승객성명 Passenger Name
JEON/BONG KYUNG MR (KE11401821**)**

■ 항공권번호 Ticket Number
1806050874888

■ 예약번호 Booking Reference
FOSMUE

1

서울 ICN
Incheon international
Terminal No: 2
29NOV25(토)12:05 (Local Time)



파리 CDG
Charles de gaulle
Terminal No: 2E
29NOV25(토)18:30 (Local Time)

KE0901
예약번호: **FOSMUE**
Operated by KE
KOREAN AIR

■ 대한항공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에서 운항합니다.

■ 예약등급 Class	M(일반석)	■ 예약상태 Status	OK (확약)	■ 비행시간 Flight Time	14시간 25분
■ 운임 Fare Basis	MLW0ZRMK	■ 항공권 유효기간 Validity	- ~ 29NOV26	■ SKYPASS 마일리지 SKYPASS Miles	5626
■ 수하물 Baggage	1PC	■ 기종 Aircraft Type	BOEING 777-300ER		

2

파리 CDG
Charles de gaulle
Terminal No: 2E
05DEC25(금)21:00 (Local Time)



서울 ICN
Incheon international
Terminal No: 2
06DEC25(토)17:20 (Local Time)

KE0902
예약번호: **FOSMUE**
Operated by KE
KOREAN AIR

■ 예약등급 Class	Y(일반석)	■ 예약상태 Status	OK (확약)	■ 비행시간 Flight Time	12시간 20분
■ 운임 Fare Basis	YRT	■ 항공권 유효기간 Validity	- ~ 29NOV26	■ SKYPASS 마일리지 SKYPASS Miles	5626
■ 수하물 Baggage	1PC	■ 기종 Aircraft Type	BOEING 777-300ER		

- 예약등급은 항공사 FLIGHT 정보에 따라 표기 내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할인 또는 무임 항공권의 경우 예약 등급에 따라 마일리지 적립률이 상이하거나 마일리지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스케줄, 기종 및 좌석등급(서비스클래스)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예고없이 항공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항공기 교체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택하신 좌석이 변경될 수 있으니 탑승수속 시 기종 및 좌석번호를 재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정보는 항공사나 공항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항공권 운임정보 Ticket/Fare Inform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항공권 Conj.Ticket No: ■ 운임산출내역 Fare Calculation ■ Tour Code Tour Code ■ 산출운임 Fare Amount ■ 지불과제 Equiv.Fare Paid ■ 세금/항공사 부과 금액 Taxes/Carrier-imposed Fees ■ 세금 Taxes ■ 유류할증료 Fuel Surcharge ■ 부가수수료 Service Fees ■ 총산출금액 Total Amount ■ 지불수단 Form of Payment ■ 발행일/발행처 e-Ticket Issue Date/Place 	<p>-</p> <p>SEL KE PAR730.95KE SEL1170.25NUC1901.20END ROE1415.9489</p> <p>XSDQCABGQ</p> <p>KRW 2692100(Paid Amount KRW 2692100)</p> <p>-</p> <p>Paid Amount KRW 345900</p> <p>KRW 24000BP 15700FR 22200FR 67800O4 57200QX</p> <p>* 2025년 1월 1일 발권일 및 탑승일 기준 한국 출발 세금(BP)은 국제여객공항이용료(인천/김포 17,000원, 기타 12,000원), 출국납부금 7,000원으로 구성되며 12세 미만 소아는 출국납부금이 면제됩니다.</p> <p>KRW 159000YR</p> <p>-</p> <p>KRW 3038000 (Total Paid Amount KRW 3038000)</p> <p>CCVI XXXXXXXXXXXX6824 / XXXX/00</p> <p>13NOV2025 / 17326120 / SELK1320Y</p> <p>* 지불금액은 (Total Paid Amount)에 표기된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	------------------------------------------------------------------------------------------------------------------------------------------------------------------------------------------------------------------------------------------------------------------------------------------------------------------------------------------------------------------------------------------------------------------------------------------------------------------------------------------------------------------------------------------------------------------------------------------



유의사항 Notice

- 본 e-티켓 확인증과 함께 제공된 법적 고지문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티켓 확인증은 탑승수속시, 입출국/세관 통과시 제시하도록 요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 여행 기간 동안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e-티켓 확인증의 이름과 여권상의 이름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2. 회의장 사진

